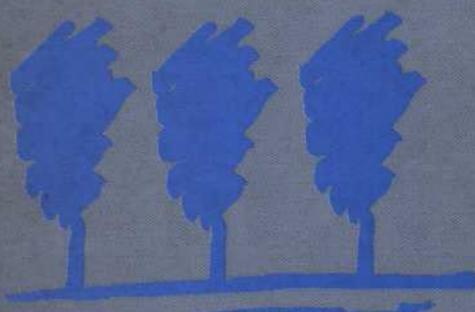


# 인권하루소식

합본9호  
(97년 하반기)

• • • • •



인권을동사강당

인권하루소식 ● 학보9호 (97년 하반기)

인권정보자료실  
R1.1.9

사  
강  
당

# 인권하루소식

## 97년 11월

### (제998호 - 제1018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1 일(토)

제 9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삼특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삼미특수강 노동자 44명이 지난 16일부터 16일째 집단단식을 벌이고 있다. 올 2월 창원특수강(포항제철 자회사)의 삼미특수강 인수과정에서 일터를 잃게 된 이들은 ‘위장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3월 24일부터 7개월간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창원특수강 공장 앞에서 단식에 돌입하면서 장기기증까지 결의하는 등 사실상 포철측에 최후통첩장을 보냈다.

또한 지난 9월 18일부터 관계당국과 포철 경영진, 삼미특수강 노조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온 민변 등 20여 개 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를 ‘사실상의 위장정리해고’로 결론내리면서 “포철은 정상적인 영업인수 과정을 다시 밟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성실히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촉구 진상조사단(공동위원장 박형규 목사)은 31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포철의 행위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정리해고를 탈법적이고 기만적인 자산 매매계약 방식을 통해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포철의 행위를 방지할 경우, 모든 사업체들이 포철식의 위장정리해고 방식을 모방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 노동자들은 “포철과 경영진의 계약이 사실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며 “노동자들도 포괄고용승계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포철측의 거부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천9백78명에 대한 채용 약속부터 지켜 2백여 명을 조건없이

우선 채용하고, 고용승계의 논란은 그 후 법적으로 다투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포철측은 “계약상 근로자 승계를 않기로 명문화하는 등 ‘영업양도’가 아니라 ‘자산매매계약’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포철은 인수계약에 앞서 삼미특수강 2천3백42명의 노동자 가운데 1천9백78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구두합의한 바 있으나, 실제 신규채용된 인원은 1천7백62명에 불과해, 5백80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은 상황이다(본지 5월 23일자 참조).

“창원지방세무서 “사실상 영업양도 현 사태와 관련한 관계당국의 판단은 아직 제각각이다. 노동부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재정경제원은 포철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창원지방세무서 측은 “사실상 포괄적 영업양도이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공민배 창원시장과 김혁규 경남도지사는 10월 25일과 28일 각각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으며, 김 지사는 “김만재 포철회장과 대화창구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31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한 사회단체들도 앞으로 각계인사 2천명 가량의 서명을 받고, 국회·청와대·대선후보 등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로 하는 등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 한국후고꾸 노조 재정사업

명동성당 농성이 10월 31일 현재 1백 7일체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후고꾸 노조(노조위원장 윤동민)에서는 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재정사업을 벌인다. 후고꾸 노조는 현재 전국 순회 투쟁과 폭력근절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11월 말경 일본 원정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정사업을 위해 양말(1박스 6켤레, 1만원)을 판매한다.

문의: 02-776-2124, 017-623-3852

### 대합변협 노조 창립

31일 대한변호사협회노동조합(노조위원장 강길민)은 지난 10월 21일 노조를 설립, 본격적인 노조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노조는 전국사무 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체이다.

### 11월 5일, 여러분을 모십니다

“지령 1천호, <인권하루소식>이 만난 사람들”

오는 11월 5일 <인권하루소식>이 지령 1천호를 맞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령 1천호를 맞아 문민정권의 인권피해자들,

인권의 이정표 하나하나를 세웠던 승리자들,

<인권하루소식>에 땀과 지혜, 박수를 보태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인권하루소식>과 함께하는 ‘인권의 밤’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 때: 11월 5일(수) 오후 6시 ■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 〈인권하루소식〉 97년 10월분 총목차 (976-997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976	10/1	1	시민폭행치사 경찰 실형선고, 민병일 씨 유족 "사인규명 미흡"/동아대간첩단사건 조작의혹, "진술 뿐 증거없다"/주요 공관 안내
		2·3	9월 총목차(976-997호)/사랑방 만평
호외5	10/1	1	제2회 인권영화제 긴급속보-1일 새벽 1시45분 흥의대 첨탈, 인권운동사랑방 압수수색 예상
		1	탄압 뚫고 끽듯이 상영… 경찰, 서준식 위원장 출두 요구/인권·사회단체, 공동대응 움직임
977	10/2	2	한국후꼬꾸 농성 78일, 박순덕 비대위 54일째 명성농성 중/전국연합, 경제인 특별사면 반대/국민승리21, 전노사면지지 특별위 설치/인권영화제 '장애인' 영화 〈시기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1	제2회 인권영화제 속보(밤 10시 현재) "흥의대가 위험합니다"
978	10/4	1	양심수 소식 '교회'에 악영향, 재소자 알 권리 보장돼야/사랑방 만평
		2	인권영화제 기자제 첫 압수…국제앰네스티, 영화제 탄압 항의/불교인권위 서래스님 항소준비에 도움을/한 권의 책 〈국제앰네스티〉(9/10월호)
979	10/7	1	당국, 인권영화제 필사저지…항의·연장·지방순회 상영으로 맞서
		2	하늘 불구 구치소에서 겨울나기, 재소자 수감시설 개선 절실/주간인권흐름(9월29일-10월5일까지)
		3	〈인권시평〉 10월 단상(이석태 변호사)
980	10/8	1	철거현황 폭력·성추행 되풀이, 속옷차림에 집단구타/군사독재하 한국인권의 전달자' 소마 노부오 주교 별세
		2	민주택시연맹 최도근 위원장 분신, 민주노총 "분신책임은 정부당국"/여연, 여성문화한마당/국민승리21, 전노사면 반대 캠페인
981	10/9	1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치료는 본인부담"/서준식 씨, 경찰 출두조사/민주택시연맹, 건교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예정
		2	행당 1-2 지구 폭력·성폭행 현장 증언 "우릴 발가벗겨 거리로 내모는가!"/사랑방 만평
982	10/10	1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노건연, 산업안전활동가 강좌
		2	민가협 목요집회, 조작간첩 폭로 "이 땅에 강한 불신 생겨"/민언협, 방송3사 사과 촉구 "극우토론회 방영배경 밝혀라"/민가협 기금미련 정터/국정감사 자료(내무위) 문민정부 철거현황
983	10/11	1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도서열독권 침해 반발에 구타/광안당국 "토론회도 안돼"…학생운동 협신토론회 불발 위기
		2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984	10/14	1	통신연대 설문조사, 통신인 61.6% '자기검열', 외부제재 경험도 30.4%/고 박순덕·김준배 폭력살인 규탄대회
		2	김준배 유가족 단원서 제출 "진상규명·특진제 등 폐지"/주간인권흐름(10월6일부터 12일까지)
985	10/15	1	출소장기수 합세환 씨 불구속기소 "가족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유가협·주모단체연대회의, 열사명예회복 공약화 촉구/사랑방 만평
		2	광주교도소 양심수 대량징계 "4일 동안 포승에 묶여 밥도 못먹어"/〈독자기고〉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기사에 대한 의견
986	10/16	1	국제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인권정책 공약 당부 공개서한/부산국제영화제 참석자, 영화탄압·검열 항의/성폭력상담소 토론회, 남고생 90% 음란물 경험있어
		2	담당 변호사, 대한변협 정식보고 예정·재소자 구타 광주교도소 고발키로/2천만 여성이 대선에서 바라는 12가지 희망

## 〈인권하루소식〉 97년 10월분 총목차 (976-997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987	10/17	1	안기부, 다시 물고문… 범민련 나창순 씨 7일간 항의단식 투쟁/사랑방 만평
		2	〈나창순 씨 모두진술서〉 "열십자로 눕혀놓고 물을 얼굴에다 쏙포처럼 쏟아 부었습니다"/청년 1만인 선언운동 "전노 사면·정략적 개헌 반대"/김준배 씨 장례 18일 예정
988	10/18	1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 의원, 청송갑호소 인권유린 추궁/광주교도소장 고발, 독지폭행·직권남용 혐의/폐업출판사 사장 등 3명 국보법 구속
		2	한국후꼬꾸, 명동성당 농성 93일째 "일본 가서 담판 짓겠다"/전자주민카드반대공대위 성명,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컴퓨터 통신인 18일 집회 "구속자 석방·통신자유" 촉구/〈국감자료〉 97년도 대학가 서점 압수수색 현황
989	10/21	1	전해투 전국순회투쟁 20-30일 "고용안정, 해고자 복직" 촉구/김준배 씨 33일만에 장례, 전국연합 "한총련 탄압 중단" 촉구
		2	〈인권시평〉 욕망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3	야마가타 영화제를 다녀와서 (김태일 푸른영상 사무국장)/주간인권흐름(10월13일부터 19일까지)
990	10/22	1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 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접지원' 혐의/범민련 노수희 부의장 구속/사랑방 만평
		2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인권영화제 10개 지역상영 10월23일-11월30일/〈국감자료〉(내무위)-집시법 관련 검거현황 및 집회금지 건수와 금지시유
991	10/23	1	민병일 씨 사망 '국가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행당동 철거민 항의 잇따라, 적준용역 사장등 구속촉구/삼미특수간 43명 목숨건 단식투쟁/〈국감자료〉(내무위) 경찰관 관련 주요 사망사건
		2	일본 요시마쓰 목사 등 강제출국, 재일동포 양심수 지원활동 이유/울산연합 정대연 씨 '간첩' 만나,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검거촉구/『한국사회의 이해』 10차 공판 1년9개월만에 재개
992	10/24	1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감시단 주거권 보장 요구/사랑방 만평
		2	인천 인권영화제 탄압 뚫고 성황리 개막…당국 〈레드핸트〉 이적성 운운" 압수영장 발부/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이번주 드러나/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손민영 씨 민기출소
993	10/25	1	'인권영화제 죽이기' 극한, 인천 집행위원 3명 긴급체포/기아사태 관련 시위도중 노동자 2명 중상/전국연합, 안기부 불법행위 규탄/성폭력예방 거리문화제/북녘어린이 참상담은 자료집 출간
		2	여성의 전화, 폐맞는 여성 위한 쉼터 10주년 및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출간/전교조, 교총에 면담 제안 "교육개혁 힘 모으자"/〈국감자료〉(내무위) 전국교도소 재소자 현황 및 처우
994	10/28	1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창립 4주년, 백서발간·희생자 추모제/서청협 의장 연행
		2	'탄압'에 절려나간 인권영화, 인천 인권영화제 이를만에 조기종단/주간인권흐름(10월20-26일)
995	10/29	1	한타 합의 안한만 못해, 노조민주화운동 사실상 공중분해/사랑방 만평
		2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국제앰네스티, 인권영화제 탄압 비난/과거청산위, 사면주장 비난/〈국감자료〉(외무통일위) 미군인 범죄 발생현황 등
996	10/30	1	대학교재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대학가 서점 4곳 대표 연행·압수수색/장기수 왕연안 씨 별세/59개 대학 경제·경영학 교수 337명 성명발표, 삼성그룹 변칙·위법 세습 비난
		2	제1회 인권문화제 대성황, 전노사면 등 현안에 목소리 내기/각계인사 24명, 덕성여대 관선이사 파견 요청/서청협, 전상봉 의장 석방 촉구
997	10/31	1	안팎에서 몰아치는 학생운동 탄압, 경기대 언론사 기자 6명 단식투쟁/광주교도소 "인권위 조사 거부"/사랑방 만평
		2	사회과학서점모임 공동투쟁 선언 "언론출판 자유 보장하라"/29일 사회과학서점서 압수된 주요도서 목록/이웃출판사 대표등 국보법 위반 기소/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대학생 검거과정서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경찰 위협적 검거 여전, 대학생 상대 도로위 총격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apia.net • http://www.interapia.net/~rights

## '인권' 대 '반인권'의 대결

###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혼격한 시각차

김대중 총재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양심수 논란에 대해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이번 논쟁을 계기로 양심수 석방과 악법개폐 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벌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일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전국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은 각각 성명 또는 논평을 통해 "자율하고 유치한 논쟁" "구태의연한 여론몰이" "전·노 석방과 정치적 흥정을 벌이는 좌태" "저질 사상시비" 라며 정치권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정부와 정치권이 그릇된 기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전국연합도 "양심수 문제를 사상시비로 몰고가는 것은 정략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고 수많은 양심수들을 능멸하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21세기를 불과 2년여 남겨두고 있는 지금,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50년대의 냉전구도에서 벌어졌던 매파시선품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탄을 금치 않았다.

"공산주의자도 양심수다"

이번 논란에서 보수우익진영은 "공산주의자나 폭력행위자는 절대 양심수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혼격한

#### .....오늘의 주요 공판

▶ 11월 4일 (화)

김광집/이선정/정석인(국보법 등) 오전 10시, 311호, 학의21부, 선고 민경우/나창순(국보법 등, 범민련) 오 후 2시, 311호, 학의21부, 속행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은 자(자기방어적 폭력은 제외)"로서 "정치적·종교적·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을 이유로 투옥, 구금, 기타 신체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과학서적은 판매한 이유로 구속된 서점주인들도 앤네스티 기준에 따르면, 엄연한 '양심수'다.

또한, 3일자 한 일간지를 통해 소개된 학·법조계 인사들의 견해 역시 앤네스티의 기준을 강조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노동·집시법 위반사범은 사안에 따라 양심수의 범위에 들어간다."(곽노현 교수) "설사 폭력적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87년 6·10항쟁에서 화염병과 돌던진 시위대가 그 경우이다."(한인섭 교수) "설사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당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조용환 변호사)

참여연대 등도 "지금 '양심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군부독재 아래서 공인통치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며 현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구시대적 냉전논리임을 꼬집었다.

김종필, 이인제도 양심수석방 기원 양심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당국과 보수세력들의 주장에 반해 10월 1

11월 5일,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기념 '인권의 밤'

■ 때: 11월 5일(수) 오후 6시 ■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1997년 11월 4일(화)

제 999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일 현재 민가협이 집계한 양심수는 무려 8백59명에 달하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까지 나서 양심수 석방운동을 전개했던 천주교측에선 "이 땅에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면 우리 천주교회가 있지도 않은 일을 우겨대고 있는 것이다"고 반발하면서, "박노해 시인의 신작 출판기념회 때 신한국당 이수성 고문, 자민련 김종필 총재,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등 여야의 핵심 정치인들이 박씨의 석방과 건승을 비는 축전을 보낸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양심수 구명운동도 정부 측 주장을 무색케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성만(구미유학생 간첩단), 박노해(사노맹), 황석영(방북), 손유형(제일동포 간첩) 씨 등의 석방운동을 전개하며, 유엔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 역시 황대관(구미유학생 간첩단), 안재구(구국전위) 씨 등의 석방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의회연맹(IPU)은 지난 7월 간첩 혐의로 수감중인 서경원 전 국회의원의 석방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인권개혁조치 진지하게 논의하자" 3일 각 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충고와 제안의 말을 던졌다. "반세기 이상 국민을 고통과 분열의 질곡으로 몰아갔던 이른바 비뚤어진 사상의 잣대를 제발 좀 거두기를 바란다."(전국연합) "이번 기회에 양심수 석방을 비롯해 악법개폐 문제 등 제반 인권개혁조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민가협)

느닷없이 전개되고 있는 양심수 논란 속에서 '인권'과 '반인권' 세력간의 침과 보수세력들의 주장에 맞지 않는 모든 법률을 개폐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성명서〉

### 진흙탕싸움을 걷어치워라

"공산주의자를 제외한"이라는 조심스러운 단서를 달고 양심수의 개념을 축소한 '양심수 사면론'은 그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즉각 치졸하기 짹이 없는 인신 공격과 색깔 시비의 용단폭격을 받았으며, 그 결과 당초의 '양심수 사면론'은 다시 위축되어 비겁하고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 이하의 '양심수 논쟁'의 정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추악한 진흙탕싸움 외의 아무 것도 아니며, 그것은 양심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이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양심수를 사면한다"는 김대중 총재의 발언은 결국 우리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는 구태의연한 주장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세력이 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기만 하면 바로 공산주의자가 만들어진 어제의 어두웠던 현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김 총재의 발언은 반인권적이다. 한 인간의 내심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근대 법치국가의 중요한 인권원칙으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오랜 세월 눈부신 인권활동 속에서 확립한 '양심수'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법치국가의 인권원칙 위에 세워진 개념인 것이다. 한 정치인이 이런 개념을 함부로 변용·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또한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는 공안기관의 총공세를 눈앞에 보면서 국민과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그 뻔뻔스러움에 어안이 병벙할 뿐이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 많은 인사들을 잡아들이면서도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고 강변했던 과거의 공안세력은 인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한발짝도 청산되지 않은 채 오늘도 옛모습 그대로 우리 사회의 공안세력으로 남아 있다. 그 공안세력이 "이번에 잡아들인 공안사범들만큼은 진짜로 양심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들 도대체 누가 그 말을 끝이 듣겠는가?

아울러 우리는 "양심수가 있다면 정치인 사면 등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이회창 총재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 '양심수'는 구금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든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그 자체로서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양심수'는 권력형 인권범죄의 주범인 '정치인'과 동역에 놓고 맞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

정치인들은 양심수들로부터 희망을 엿이기는 추악한 진흙탕싸움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인들은 이제 우리의 인권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약속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스스로가 받아들인 인권기준을 국내에서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그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법률을 개폐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1997년 11월 3일  
인권운동사랑방

### 주/간/인/권/호/름

(97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 10월 27일 (월)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지난 9월 4일 발생한 '목포경찰서의 폭력배 동원 학생검거 사건'과 관련, 고발장 접수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

◆ 10월 28일 (화)

97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기독교회관 강당서 열려/제1회 인권문화제 인천 인하대에서 성황리 개최/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의 제2회 인권영화제 단암 비난하며 항의에 동참할 것 전세계에 호소

◆ 10월 29일 (수)

〈오늘의 책〉 등 대학가 서점 4곳 압수수색 벌이고, 서점주인 4명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관매 혐의로 연행/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최근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내사 벌여/전국 59개 대학 경제·경영학 전공교수 3백37명, 삼성그룹의 편법재산승계 중지 촉구성명/영광 원전 1호기 한때 가동중단

◆ 10월 30일 (목)

한보철감, 노사간 합의를 통해 3백42명의 퇴직 신청을 받고 8백명 정리해고해 모두 1천1백42명 해고/덕성여대 직원노조, 관선이사 파견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경찰청, 15대 대선 앞두고 PC통신망의 게시판이나 토론방에 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여 명에 대해 통합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도서출판 '청년문예' 대표 이민재 씨와 도서출판 '이웃' 전 대표 정우창 씨 등 출판사 대표 3명 구속 기소/경기대(수원캠) 학보사·영자신문사 기자등 6명 학교측의 기사검열과 인사권 개입 증거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광주교도소 측,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재소자 접견요청 거부

◆ 10월 31일 (금)

정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덕성여대 학생과 교수 등 1천여 명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탈락 취소' 촉구/삼미특수강 노동자 44명 16일부터 집단 단식투쟁을 벌이는 한편 민변 등 2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위장정리해고'로 결론지어

◆ 11월 2일 (일)

전교조, 종묘공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열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학교 교육 정상화와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화할 것" 촉구/영광 원자력발전소 2호기 가동 중단/한국노총 여의도에서 '생존권 사수 및 정책연합 실현을 위한 97전국노동자대회' 개최/〈마이니치 신문〉 보도, 12일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총회에서 인간의 유전정보 종체인 인간계놈의 매매와 복제인간의 제조를 금지하는 세계선언 체택 예정/〈AP AFP 연합〉,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1일 하바드대 강연에서 89년 천안문사태 당시 잘못이 있었음을 간접 시인했다고 보도

인권  
시평

##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세계화"와 "정보화"는 김영삼 정권이 제작해서 보수언론이 유포했던 정치구호 중, 가장 잘 팔린 것들이었다. "세계화"는 그 단어를 만든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그 뜻도 정확히 모른 채 사용되던 정치구호였다. 그래서인지 "세계화"는 찬바람 불자 사라진 파리떼들처럼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비해 "정보화" 구호는 아직도 잘 나가고 있다. 정보화는 비교적 확실하게 그 윤곽이 잡히는 구호였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사는 세상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 구호가 아직도 잘 팔리는 것은 단지 그것이 세계화에 비해 실체가 분명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보화는 한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역사발전의 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보화는 인간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구조를 바꾸어주는 커다란 변혁이다. 즉 산업사회의 지배구조도 정보화사회에서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정보화 사회의 지배계급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계층들이다. 그래서 정보화사회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쟁탈전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간파한 현 정권과 보수언론도 정보화 이데올로기를 적극 전파하면서 자신들이 정보화사회에서도 지배세력으로 군림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가장 강력한 정부 부처로 부상했고, 신문마다 방송마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 대고 있다. 실제로 컴퓨터 통신을 사용하는 숫자는 전인구의 10퍼센트도 안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더욱 적은데 불구하고 연일 신문지면과 방송화면에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당연히 대다수 국민들은 주눅이 들 수 밖에 없다. 정보화에 대한 무지와 불안 속에서 그들은 정부가 하자는 대

로, 보수언론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정보화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지배구조였던 미디어가 더 이상 소수의 집권계층이나 자본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 보수언론은 조선총독부, 미군정청, 이승만 정권, 군부독재정권과 돈독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론을 독점해 왔고, 이 과정에서 진보와 변화를 갈구하는 여론들을 외면하고 차단해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미디어 독점을 불가능해진다. 컴퓨터 통신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실



현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보수 기득권층에 의해 조작되는 여론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도 생겼다.

따라서 정부와 보수언론은 정보화 사회를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로 부상시키면서도, 컴퓨터 통신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고삐를 죄는 이중성을 보여왔다. 물론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은폐되었다. 이를 위해 컴퓨터 통신이 가져온 사소한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음란하고 불순한 내용들이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유통됨에 따라 미풍양속과 사회질서가 위협받기 때문에 선량한 청소년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컴퓨터 통신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보통신 유통위원회를 재빨리 만들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국가보안법 등을 동원해 협박을 했다. 물론 보수언론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행위를 적극肯定하고 독려했다.

컴퓨터 통신 사용자들은 표현의 자유

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들은 특히 컴퓨터 통신은 그 특성이 다른 매체와 다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미디어가 의견교환이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지 않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공론장인 반면, 컴퓨터 통신공간은 누구나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공론장이라는 이유였다. 컴퓨터 통신은 진실과 오류에 대한 비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논리였다. 따라서 판단력이 부족한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미디어의 내용을 통제하던 기존의 권위주의적 규제방법이 통신공간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정부나 보수언론이 받아들일 리 없다. 현정권과 보수언론은 바로 그러한 이유, 즉 국민들이 진실과 오류를 구별하는 것이 두려워 컴퓨터 통신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예를 들면서 컴퓨터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우이독경이 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법부가 위헌판결을 내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념적, 계급적 갈등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의 규제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컴퓨터 통신공간의 규제는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려는 수구세력들의 필사적인 시도이다. 보수언론과 정부는 컴퓨터통신이 그들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완강하게 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드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의 자유를 행취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변화와 개혁,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통신의 자유를 행취하는 것은 민주화를 앞당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ia.net • http://www.interia.net/~rights

감추인 진실을 밝히며 4년을 달려온 인권하루소식 1천호

## "양심수는 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체포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50) 씨가 전격 체포됐다.

서 씨는 4일 오후 5시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소속 형사들에게 체포돼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서부지원(판사 김문관)은 서준식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서 씨에게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위반과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당초 서 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흥의대에서 열린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이날 체포시엔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 국보법·보안관찰법 혐의 추가

경찰은 또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비디오 등 인권영화제 관련 물품과 서 씨 개인물품 및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등 30여 종을 압수했으며, 이어 저녁 6시부터는 서 씨의 응암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날 서 씨의 체포는 일단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 씨에게 적용된 공연법 위반 혐의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는 흥의대에서 인권영화제 개최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이 제주도 4·3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레드헌트〉의 상영을 국

1997년 11월 5일(수)

제 10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번 수사에 보안수사대가 나선 점 등으로 미루어, 당국이 인권영화제 개최를 표면적인 이유로 서 씨를 체포한 뒤,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 관련 부분을 집중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국내외 "서준식 씨 석방 촉구"

한편, 서 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논란이 되어온 '사전심의제'에 불응하겠다는 이유로 온전한 인권단체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그 대표를 국제적으로 지탄받아온 범률의 이름으로 연행한 것은 우리 인권현실의 암담함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국민승리21(권영길 후보 선거운동본부)과 한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 이창수)도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서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도 "한국정부는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멀리 볼 필요없이 서준식 씨를 보라"며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 기획연재 '김영삼 문민정부 5년 인권정책 평가'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를 맞아 문민정부 4년을 돌아봅니다.

김영삼 정부의 두드러진 인권경향을 주제별로 분류, 총 13회에 걸쳐 평가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시리즈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 |               |            |               |
|---------------|------------|---------------|
| 1. 삶의 질       | 2. 대형참사    | 3. 철거용역강제     |
| 4. 노동권        | 5. 외국인노동자  | 6. 미군범죄       |
| 7. 성희롱 및 여성인권 | 8. 신매카시즘   | 9. 컴퓨터통신검열    |
| 10. 사법개혁      | 11. 국제인권조약 | 12. 배신당한 과거청산 |
| 13. 기획좌담(총평)  |            |               |

&lt;성명서&gt;

##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11월 4일 오후 5시, 경찰은 인권운동가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체포하고, 인권운동사랑방과 서준식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정부가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고 공언한 시점에 일어난 이러한 반인권적인 폭력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 권리 표현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긴 인권영화제를 열었다는 것이, 그 인권영화제가 사문화되어야 할 사전심의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이런 호들갑의 이유인가? 제주 4·3 학살을 다른 <레드 헌트>의 이적성 시비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의 상영은 아무 문제없고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에 분노를 넘어서 할말을 잊을 지경이다.

우리는 이미 서울과 인천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인권영화제를 중단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는 이에 꺾이지 않고 본격적인 지방 순회 상영을 예정하고 있었다. 다음 상영지인 수원 상영을 이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영화제의 계속을 가로막으려는 당국의 치졸한 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전심의를 폭력을 통해서라도 유지하려는 보안기관의 안간힘이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괄심의를 거쳐 상영된 <레드 헌트>를 인권영화제 관련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이중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쳐사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의성이나 형평성의 상실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태생적인 반인권성을 또 한번 증명하였다.

정부는 또한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멀리 볼 것 없이 국민들은 인권운동가인 서준식 대표의 체포를 보면서 양심수를 발견할 것이다.

###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기념 ‘인권의 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령 1천호를 맞아 <인권하루소식> 애독자 여러분과 인권피해자들, 인권의 이정표 하나하나를 세웠던 승리자, <인권하루소식>에 땀과 지혜, 박수를 보내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조촐한 기념식과 함께 ‘인권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 때: 11월 5일(수) 오후 6시

■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 .....주요 공판 안내

#### ▶ 11월 5일(수)

윤석진(국보법 찬양·고무 등, PC통신) 오전10시, 425호, 합의5부, 선고

#### ▶ 11월 7일(목)

김순정(국보법 간첩 등, 범민련)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속행이교관 외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1시, 525호, 10단독, 속행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 등, PC통신) 오후3시, 418호, 합의1부, 속행

이지웅(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전10시, 319호, 합의22부, 속행

###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걸어온 길

### 1. 배경

문민정부의 개혁을 비행기 태우며 온 나라의 언론이 스스로 취했고, 국민은 혼기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들려와야 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요란한 개혁 깃발의 행렬을 구경하며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들에게 억압적인 법제의 개혁을 알리는 전령도 달려오지 않았고, 과거청산의 뚜껑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인권문제에 대해선 만사해결되었다는 근거없는 청산주의가 판을 쳤다. 인권문제를 입에 올리면 한물간 흥행사 취급을 받게 되다니...

### 2. 발단

사무실 책상 위에서 잠자던 한 인권운동가가 사라졌다. 장기수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과거에 걸려 남영동으로 끌려간 것이다. 남영동의 철문을 바라보다 돌아선 그의 동료들, 손 걷어붙이고 하루에 몇 차례 썩 사건 속보를 만들어 알만한 모든 곳에 팩스를 날렸다.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와 안기부로 날아드는 세계 곳곳의 항의서한, 꼬리를 물고 정황을 물어오는 사람들, 그려기를 며칠, 무릎을 탁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팩스, 좋아 그거야!”

“네? 팩스요?”

“그래, 인권문제는 신속히 알려내야 하지, 관심을 끼리지 않고 지속시켜야 하는 거잖아, ‘인권’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구, 매일 내는 팩스신문이면 어때? 팩스라면 배달 문제는 간단하잖아.”

“매일 만들만큼 뉴스가 있을리구요.”

“왜 없어? 전통적인 인권문제라는 건 여전하고, 인권의 영역이 좀 넓어, 그렇다면 건드려야 할 보따리는 충분하지. 정 뉴스가 없으면 오늘은 인권문제 없는 평화의 날이라고 하면 되잖아.”

### 3. 전개

몸에 꽂끼는 책상과 컴퓨터 한 대, 꼬질꼬질한 팩스와 전화기 한 대, 타자를 갖 익히기 시작한 기자 한 명, 왕 천하태평 편집인 한 명, 왕 잔소리 발행인 이 신문이란 걸 만들기 시작했다.

24시간 사무실 감금을 각오한 이들의 작품-이름하여 <인권하루소식>-이 선을 보인 날, 교관 나으리들의 재산자랑(공개?)이 언론천하를 점령한 가운데 뛰어별 아래선 자식을 내놓으라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능성이, 수배해고된 노동자들의 90여 일의 능성이, 6공정치수배자들의 수배 해제 요구가 허공을 빼리고 있었다. 또한 한국판로

소하는 노년층, 컴퓨터 통신을 통해 거제보는 젊은 통신인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영문판을 만나는 해외독자, 하루소식을 인권분야의 최대취재원으로 삼는 일선 기자 등을 주 5일 변함 없이 만나고 있다. 팩스로 시작된 배달체계는 우편배달이나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병행하게 되었다. 현재 8권까지 발간된 <인권하루소식> 합본호는 그 자체가 우리 인권의 역사책이며, 그때 그 사건을 즉각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색인으로 인권활동의 쓸모있는 손발이 되어준다. 한편, 이어지는 제보와 각 지방의 통신원,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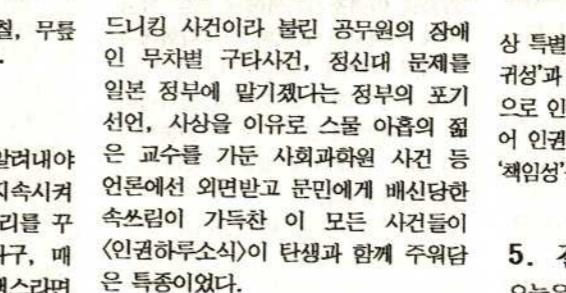
시평에 함께하는 논객, 만화사랑방을 열어준 만평작가 등이 뿌려주는 단비는 달기만 하다.

기계가 견뎌주는 것조차 신기한 제작 환경 속에서 몸살도 맘대로 못앓고 버텨준 편집진에겐 ‘작은 신문큰 소식’, ‘신문에 안나는 것 신는 별난 신문’, ‘우리 시대 인권상황판’ 등 <인권하루소식>에 붙여지는 이름들이 피로회복제였다.

96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수여하는 제6회 민주언론상 특별상 수상은 새로운 출발이었다. ‘희귀성’과 ‘독보성’을 넘어서서 하나의 언론으로 인정받은 이상 더욱 시린 칼날이 되어 인권유린의 현장을 내리 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 5. 결말

오늘은 <인권하루소식>이 1천호를 맞은 날이다. 한 달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우려 속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4년을 넘어섰다. 천일야화를 엮을 만큼 많았던 얘기와 주인공들, 아직 결말을 맺지 못한 사건들은 너무도 많다. 그 실마리를 이어가며 <인권하루소식>이 누릴 인권현장에는 ‘진실’과 ‘끌장을 보는 근성’과 ‘작은 승리’와 ‘큰 폭의 변화’가 넘칠 것이다.



## &lt;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gt;

**“하루소식 1천호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든 가정에서 받아보는  
소식지가 되길**

첫 호를 낸 후 지금까지 만 4년, 어려운 여건에서 고투하면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문민정부 하에서 악화되어만 가는 인권상황을 고발하고 질타하며 줄기차게 독자들을 일깨워 온 사랑방 식구들의 열의와 노고에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그 동안 <인권하루소식>은 작은 지면을 통해서마다,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의 제도와 의식 전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그럼에도

늘 외면되고 은폐되며 그 실상이 왜곡 전달되고 있음을 날마다 짚어 깨우쳐 주었다. 그 점에서 <인권하루소식>은 스스로 짖어진, 등대요 등불이며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 왔다. 이제 네자리 숫자의 지령을 기록하게 됨을 계기로, 외로운 호소로만 들리지 않도록 좀더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 호응의 기반을 넓히면서 인권운동의 시민적 네트워크 형성에 첨병 또는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간히 원하고 기대해 본다. <인권하루소식>이 더 이상 나을 필요가 없게 될 날은 언제일까. 아무쪼록 그날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 시대 우리 나라 인권운동의 견인차가 되고 마침내는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받아보는 소식지가 되기를 기원한다.

김영범 (대구대 사회학과)

**종이학 천마리를 접는 마음**

한번은 누군가에게 의미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어 종이학 천 마리를 접기로 하였습니다. 솜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무려 한 달 동안 하루에 꼬박 두, 세 시간씩을 할애하며 접어 있는데 그 렇게 접어도 맞춰 논 날까지 다 못 채울 것 같아 사촌 동생에게 같이 접자고 부탁했습니다. ‘네 생각 많이 하며 힘들게 접었다’고 선물받는 사람에게 보여준 생색내기보다, 사실은 내 정성

이 많이 부족했음을 아직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1천이란 숫자는 내게 그렇게 약간은 부담스런 숫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년하고도 반년 전에 저로서는 사랑방과 작지 않은 인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권하루소식이 5백호를 제작되나고 있었는데, 어느덧 1천호를 발간하게 되었다니 남의 일 같지 않게 기쁩니다. 보수언론의 왜곡된 사회인식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우리사회의 진실을 밝혀내는 참언론의 역할을 한

**인권활동가에게 유용한  
인권정보지**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하여 훌륭한 인권소식을 만들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에 축하글을 보냅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인권운동감시 초소의 역할을 시작한지 4년이 지났군요.

페스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개발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창의력을 발휘한 것은 인권운동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여준 적극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노희찬(매일노동뉴스 발행인)

**진보운동의 소중한 자산**

인권하루소식 발간 1천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희망과 우리 시대의 건강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거짓과 위선의 이 시대에 얹눌린 사람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를 넘어, 우리 시대의 희망을 서로 확인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남한사회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하루소식>지는 실천을 통해 진보운동의 소중한 자산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 시대의 양식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내일에 대한 약속을 하는 <인권하루소식>의 지령 1천호를 거듭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인간 해방의 길을 함께 걸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창수(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간사)

**축구팀과 박찬호보다 소중한…**

한국엔 양심수가 없다는 말과 함께 보관 듯이 대표적인 비양심수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인권하루소식>은 포항제철보다도 축구 국가대표팀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인간이 만든 제도가, 인간들의 조직이 인간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24시간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한 인권운동사랑방은 분명 박찬호보다도 자랑스런 존재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인권운동감시 초소의 역할을 시작한지 4년이 지났군요. 페스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개발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창의력을 발휘한 것은 인권운동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여준 적극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노희찬(매일노동뉴스 발행인)

## &lt;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gt;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조선일보> 보다 위대한 까닭

86년 12월, 어느 신문 구석자리에 초라하게 났던 몇 줄짜리 기사를 기억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죽었다’는 그 때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초라한 기사 한 줄이 비위가 되고, 산이 되고, 파도가 되어, 마침내 ‘6월항쟁’이라는 커다란 물줄기를 이를 줄은….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대중들이

바뀌었다고, 최소한의 절차민주주의는 보장되지 않았느냐고, 아직도

‘운동’을 하느냐고.’

97년 10월, 인권하루소식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안기부, 다시 물고문’.

10년이 지난 오늘, 안기부는 여전히 물고문을 합니다. 그것도 절순이 다 된 노인에게.

그 노인을 잡아 가둔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서슬 펴렇습니다. 장기수는 세계 신기록을 깨며 오늘도 수형생활을 하고 있고, 감옥은 양심수와 정치범으로 넘쳐납니다.

10년 전 저항의 물길을 만든 사람들이 ‘아직도 운동을 하느냐’고 물을 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물을 때, 여전히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을 대신해 그들의 당당함을 부끄럽게 할 ‘근거’로 <인권하루소식>을 모아둡니다.

물론 그 근거가 목적은 아닙니다.

모두가 외면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인권하루소식>은 언제나 씩씩하게 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바위산을 만

들 한 조각 돌멩이, 그 돌멩이가 되려는 힘겨운 몸짓을 <인권하루소식>이 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마침내 이 힘겨운 몸짓이 커다란 물줄기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므로…

세상에는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으로 그 가치를 평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겨우 2쪽 짜리 <인권하루소식>이 46쪽 짜리 <조선일보>보다 훨씬 위대하고 소중한 까닭입니다.

<인권하루소식>에 ‘인권탄압사례’가 더 이상 실리지 않을 그날, 마침내 정

의가 강물처럼 흐를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건투하세요.

(이선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인권의 꽃씨를 뿌리는 사람들**

‘생각하는 인권지기, 행동하는 하루소식, 뒤돌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사랑방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3년 겨울, 어스름 저녁 용산역 앞 4층 건물 꼭대기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 어두컴컴한 계단을 오르며 ‘반인권의 세상’에 ‘인권의 꽃씨’를 뿌리려는 사람들의 여리지만 강단진 모습만이 안타까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감히,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울러 굵은 매듭처럼 모아지는 하루소식 합본호가 누구에게나 명실상부한 인권백서가 되길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지령 1천호를 받아보는 독자로서 뿌듯한 마음만큼 갈증도 있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신문은 사실보도만이 아니라, 흑여 반복된다 하더라도 세세한 분야에 걸친 인간의 기본권리와 인권상식에 대한 심층분석 및 기획기사 또는 칼럼 등을 통해 전반적 인권상황을 환기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쉽게 하는 말이 사랑방에는, 어려운 재정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궁창에서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 아닌가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항상 1호를 만든 마음으로 오늘의 ‘인권’을 생각해 주십시오. 인권운동사랑방의 건투를 바랍니다. 전선희(인권하루소식 독자)

**깨어있는 소식을 기대하며**

인권하루소식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몇몇 사람들은 인권하루소식이 얼

마나 갈까 하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운동사랑방 식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권하루소식>이 벌써 1천호를 발행하게 된 것에, 하루소식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하루소식을 만드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우리 사회의 인권의 현실을 들 느끼고 필요 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올바른 관점과 해설로 언제나 깨어있는 <인권하루소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춘숙, 서울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억압과 고통당하는 곳에**

억압받고 고통당함이 있는 곳에 항상 빛과 소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국통일 그날까지…

(구기일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위원장)

**투쟁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옥중의 절규가 잔잔한 물림을 얻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그 희망을 깨우치게 합니다. 인권유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노래가 그 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잘못된 현실과 정직하게 싸워나가는 투쟁의 모습들은 아름답습니다.

페스신문이라는 민중언론의 새로운 전법을 제시한 <인권하루소식>이 천살의 나이를 맞았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아무 것도 담을 것이 없는, 하여 스스로 폐간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 <인권하루소식>은 더 쳐절하게 스스로를 불태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손석준, 한겨레신문 노동조합위원장)

<1천호 축하글은 지면관계상

2회에 나눠 실립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 5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안동 대공분실 식당에서 서준식 대표 면회 결과

11월 4일 오후 5시 명륜동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체포된 직후부터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5일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벌였다(유치장소는 마포경찰서이나 장안동에서 하룻밤을 잠).

조사결과 경찰측은 은평구 응암동 자택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압수해간 물품 중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창작과 비평사 펴냄) 「해방전후사의 인식 2」(한길사 펴냄)과 94년 10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가진 ‘북한인권문제 내부 비공개 토론회 자료집’ 및 내부 세미나 자료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등 4권이 국보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다.

이날 면회 직전까지 2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사과정에서 서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도 기재되었듯이) 압수수색이 “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로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래드 헌트〉와 관련된 국보법 위반 부분 조사에서는 경찰측은 영화제 자료집 필름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4·3항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가족의 증언을 담은 것이라 생각하며 다른 부분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한 보안관찰법, 형법상 현주건조물침입죄, 공연법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현시회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상 전향을 안한 이유가 뭐냐”는 등의 질문을 했는데, 이에 서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없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국보법과 관련해선 “국보법 법조문이 애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3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인권운동사랑방 등에서 압수해 간 서준식 대표의 관련 물품(30종) 등을 중심으로 국보법 부분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짐작되며, 이에 대해 서 대표는 “기본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준식 대표 연행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중이며, 5일 오후 이석태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벌였다.

1997년 11월 5일(수)

호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미제로 검찰, 정황조사 외면한 채 수사종결

대기업이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96년 청주 박민주(29·가명) 씨 성폭행 사건이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일 사건담당인 청주지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는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신탄진 공장의 노동운동탄압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청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한국타이어 노동운동가 박 아무개(수배자) 씨를 들킨 피해자는 지난해 5월 괴한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단순 성폭행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시 정황은 피해자의 의혹을 상당부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시 △범인들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성폭행을 했고 △현금 등 물품피해가 없었으며 △수배자 박 씨의 소재를 물었던 점 △특히 신탄진에 있어야 할 한국타이어 구사대원들이 사건 전후 청주에 자주 등장했다는 정황 등이 그러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수사가 시작된 뒤 올 3월 수사가 종결됐다가, 지난 8월 여성·노동단체 등의 엇따른 진정에 따라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그러나 10월말 검찰이 수사를 종결함에 따라 1년만에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수사종결조치에 대해 피해자 박 씨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황 조사부터 벌였다면 범인의 단서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박 씨가 검찰의 조

1997년 11월 6 일(목)

제 10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반면, 박 씨는 “참고인 요청대상인 김 아무개 씨의 경우, 노조 총무부장으로서 회사쪽 기밀이나 구사대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며, “구사대의 통화내용을 담은 녹취록도 있지만, 검찰조사가 성의껏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씨에 따르면, 이 녹취록에는 당시 수배자를 잡기 위해 청주에 구사대가 상주하거나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껏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해 온 박 씨는 “이젠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지 막막하다”며 허탈해 할 뿐이었다.

### 〈현장스케치〉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 ‘인권의 밤’ “인권운동가의 기쁨이다”

“1천호가 나오는 밤을 여기서(장안동 대공분실) 지낸다는 것 자체가 드라마틱하다. 양심수에 관한 치졸한 논쟁이 있은 후 연행된 것도 뜻깊은 것이라 생각된다. 잡혀가더라도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인권운동가의 기쁨이다.”

5일 저녁 6시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기념행사에는 장안동 대공분실에 구금증인 서준식 발행인의 인사말이 전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독교회관측이 2층 대강당 대관을 불허하는 통에 행사장소는 부랴부랴 2층 식당으로 옮겨졌고, 급기야 시간에 끊긴 사회자가 발행인 인사말을 소개하지 못하는 실수와 함께 행사는 시작됐다.

하지만, 행사장의 열기는 단연 뜨거웠다. 바로 전날 서준식 씨의 체포소식이 알려진 탓인지 인권피해자를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 3백여 명이 참석해 밸디딜틈 없는 성황을 이루었다.

‘간첩 김동식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었던 박충렬 씨,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한국타이어 수배노동자, LG 해고자로 싸워온 이동렬 씨,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치고 씨, 남매간첩단 사건의 김석현·김은주 씨, 이문옥 전 감사관, 방양균 씨, 행당동 철거민 등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알려진 그때 그사건의 인권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경찰폭력 희생자인 이철용 씨에 기브스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당초 인권하루소식 1천호 역사를 돌아보며 문민정권의 인권현실을 되짚어보려던 것이 이날 자리의 취지였지만, 참석자들의 발언은 서준식 씨의 구속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주조를 이뤘다.

유일한 국외 참석자 로스 대니얼스(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인권담당자) 씨도 “국제앰네스티는 서준식 씨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전세계적인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최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요란한 학공식

'삶의 질의 세계화'를 땅땅 두들겨 박은 김영삼 정권의 '21세기를 향한 국민복지 구상'의 학공식은 요란했다.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 구현', 복지국가 건설', 노태우 정권의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뒤따른 구호만들기인 '삶의 질의 세계화'는 '경제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복지정책을 폐겠다'는 다짐의 반복이라는 면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을 암도한 것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고통분담'에 대한 동참의 재촉이었다.

### 예산의 현실화 실패

그 대표적인 증거는 사회복지 학계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요구해온 사회복지 예산의 현실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복지정책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라도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김영삼 정부가 약속한 바대로 2천년 초까지 세계 15위의 삶의 질의 세계화를 이를 작정이었다면 향후 2천년까지 매년 40% 이상의 복지예산 증액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예산 계획은 평균 재정증가율(15%)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증액(20%)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러한 소극적 계획마저도 95년까지 전반적인 복지예산 증가율이 평균적인 재정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로 끝났으며, 97년에 와서는 방위비의 12% 증액에 밀려 그나마 잡혀있던 항목마저 대거 삭감되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정도로서 GNP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우리가 가입한 OECD 국가들의 경우 현재의 우리와 1인당 GNP 수준이 비슷했던 60~70년대에 평균 7%대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을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시대에 진입한 한국인이 느끼는 복지체감은 병원갈 때 의료보험 카드 행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법의 보장 안돼

예산부족 탓이 계속 통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 가득찬 현행 사회복지법의 부실성과 관계가 깊다. 국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규정된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언제라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물론 사회복지권을 청구권적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는 드물다. 하지만 우리처럼 '국가가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식의 '임의성'에 좌우되는 현행 복지법에 대수술을 가하지 않는 한 어떤 복지 시책이 나오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최저수준을 넘어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시대는 지났다고 그들 말한다. 그러나, '최저수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보장받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머뭇거려진다. 소득, 보건의료, 교육, 주거, 고용, 환경, 복지서비스 등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수준을 기능할 합의된 기준선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표> 우리나라 사회복지비 지출주이

	사회복지비 /GNP	사회복지비 /일반회계
1990년	0.87%	5.5%
1991년	0.97%	6.4%
1992년	0.91%	6.4%
1993년	0.90%	6.4%
1994년	0.90%	6.0%
1995년	0.86%	5.8%
1996년	0.90%	6.0%

출처: 9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재구성  
현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가 '질'을 얘기하기 원했다면 이러한 최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를 해야했다. '삶의 질의 세계화'가 외연한 기초공사는 경제만 잘 풀리면 그 혜택이 사회 밑바닥까지 돌아갈 것이라는 안일함을 갈아엎고,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임을 다지는 일이었다. 자유와 평등을 양축으로 한 인권의 종합적인 보장을 수많은 국제 인권법에서 공인되고 여러 기구에서 재차 확인돼온 것이다. 소수의 의견의 보호가 중요하듯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삶의 최저선 확보는 곧 인권 보장을이며, 국가의 배려가 아닌 의무사항인 것이다.

### "박노해 시집 이적표현물" 서준식 씨 구속영장 발부

5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영장발부 과정에서 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없었다. 서 씨는 4일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레드 헌트>와 관련한 국보법 위반 및 보안관찰법, 공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대공분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서 씨 구속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30여 명의 공동변호인단(대표 최영도)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변호인단 숫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5일 오전, 가족을 면회한 서 씨는 「경찰이 압수물품 중 박노해 시인의 시집『점된 시작』(창작과 비평사)『해방전후사의 인식 2』(한길사)과 94년 10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가진 「북한인권문제 내부 비공개 토론회 자료집」 및 내부 세미나 자료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등 4종을 이적표

##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소식> 때문에 우울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양면성을 지녔지요. 많은 분들이 창간을 축하하면서 한편으로 이 소식지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지가 망하기는커녕 얼마 전에는 숨가쁘게 '호외'까지 찍어 가며 창간 때보다 더 절망적인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때문에 아침마다 우울합니다. 예컨대 도시빈민을 몰리는 적준개발은 갈수록 철거수법이 악랄해지고 있다면군요. 그런데도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고, 위정자는 '세계 속의 한국'을 떠벌입니다. 제 백성 가슴을 도려내는 나라는 내 조국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인권하루소식>이 없었다면 사는 낙을 잃어 버렸을 겁니다. <인권하루소식>을 만들거나 아껴 주시는 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한효석(부천정보산업고 교사)

#### 희망키우기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 척도로 인식되는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존 언론이 보지 못하거나 보기를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증언하는 인권소식지가 지령 1천호를 맞은 이때 때아닌 양심수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팩스신문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사회 인권문제는 다급취 셋바퀴 돌 듯 비슷한 시안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됩니다. 불법구금과 체포, 고문과 처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작사건, 철거민사건, 힘없고 돈 없다고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면이 채워집니다.

비록 멀리 보이는 희망일지라도 한결 은 해결을 성실히 인권지기를 자청하는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 여러분들

의 '희망 키우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준석(CBS 시사자카 '오늘과 내일' 프로듀서)

#### 어머니가 정성스레 모아둔 소식지

제게 인권하루소식은 '하루'소식이 아니라 '주간' 혹은 '격주간' 소식지입니다. 지방에서 군복무를 하다보니까, 가끔씩 집에 올라올 때마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레 모아둔 소식지를 한꺼번에 읽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소식지는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인권현실의 척박함을 깨닫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당히 사회물을 먹고 안주하려는 제 자신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령 1천호를 맞이한 소식지 편집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짧은 글이나마 평소 개인독자로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편집에서 아마츄어리즘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활자체와 크기의 일관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기사 배치, 다소 상투적이고 반복적인 제목편집 등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하루'소식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개념에 대한 재정립의 문제보다는 '생소한(?)' 인권개념 자체를 만들어가고 이를 알려나가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매일매일의 인권동향도 중요하지만 긴 호흡의 교육성 기사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성애자 인권과의 짧은 인연

양심수는 한 명도 없다는 짜증스런 소식이 가뜩이나 신난스런 마음을 더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인권하루소식>

이 무려 1천번의 소식지를 냈다는 소식은 어깨를 으쓱하게 합니다. 그건 장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고단하고 억척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권하루소식>이 한국사회의 동성애자 인권과 맷은 짧은 인연은 더 없이 마음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줄곧 주눅들고 모멸받아온 동성애자들에게 인권이란 말은 세상에서 자신의 불행을 뉘여볼 단 한뼘의 터전이었다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소수집단의 인권으로 받아들이길 반신반의하는 터에, <인권하루소식>은 서슴없이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 어떤 차이도 넘어서 무조건적으로 삶의 권리를 옹호한 <인권하루소식>의 지혜와 열정이 계속해길 바랍니다. 서동진(제1회 서울퀴어영화제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 '아직도'를 상기시켜주는 신문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읽어보게 되는 인권하루소식이 어느새 지령 1천호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느끼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늘 나에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인권하루소식>에 대하여 애정과 신뢰를 보냅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깨는 수고의 결실임을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인권영화제를 통하여 함께 일하면서 인권운동사랑방 식구들이 인간의 권리와 올바른 사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기에 지령 1천호 소식은 제게도 남다른 기쁨입니다. 재정적인 곤란, 어려운 사회여건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노력과 용기를 기울여 차곡차곡 쌓여가는 인권의 파수꾼 <인권하루소식>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조광희(변호사)

## &lt;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gt;

## 독자가 보는 &lt;인권하루소식&gt;

바램이 이뤄져 기쁩니다

94년 2월 <인권하루소식> 1백호 합본 발행 때, 제가 격려사를 쓰면서 '5천호 또는 1천호 발행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빈다'라고 적었던 바램이 이렇게 이뤄졌음을 기뻐합니다.

1백호 발행 격려사를 쓸 당시엔 '과연 5백호 또는 1천호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고백합니다. 이제, 1천호 발행 소식을 접하고, 인권운동사랑방 가족 여러분의 집념과 열정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숭고한 가치를 향한 집념과 열정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습니다.

김창국(변호사)

## 내 도리부터 다한다면…

<인권하루소식>을 접하면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가슴 벅차게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의 투쟁,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처절한 철거민들의 몸부림을 떠올리며 이 사회에 깨어가는 양심불을 지키려고 온몸으로 불사르는 정의의 사설들, 그 분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만 가득 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마찬가지이지만 이 시대인은 거창한 정의운동이 아닌 나의 생활 속에서부터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정의를 행하며 산다면 인권유린, 착취, 소외당함과 갖가지 불의의 어둠이 사라지리라 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훈훈함이 멀리 멀리 천리향처럼 퍼지길 안현숙(수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 아침마다 &lt;하루소식&gt; 생활전을

<인권하루소식>이 벌써 지령 1천호를 맞는다니 세월이 빠르긴 빠르다.

처음엔 <인권하루소식>이 민족민주진영의 모든 사건을 전달하는 매체처럼 보이더니 이제는 인권분야의 전문적인

## 관심사를 넓히라

1천호를 맞는다는 것이 놀랍다. 양심수가 뭔지 잘 모르는 정부 밑에서 말이다. 창간 초기에는 마치 일부 노동운동, 학생운동 구속자 소식지 같았다. 그럴 통로도 없던 당시로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깊었다.

그러나 세계인권대회를 전후해서 "인권"에 대해 모두가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이는 인권하루소식의 지면에도 반영되었다. 동성애자의 "인권"이 좋은 예이다.

지난 번 포르노 논쟁 때에도, 서준식 발행인이 포르노 그 자체가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시각을 제공한 것도, 찬반을 떠나 매우 인상 깊었다. 단지 관심의 폭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인권논의를 앞장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좋은 지면만으로도.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한국사회의 인권논의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 적어도 중국, 일본, 동남아, 북한 등의 인권문제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때에는 국내소식처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특히 북한의 국군포로 등은 남한 내 장기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별 진지한 노력이 없어 보인다. 설사 "인권" 자체에는 별로 관심 없는 보수우익의 정략적 문제제기라도, 그 도전을 받아 안을 때 인권이란 나무는 더욱 뿌리가 깊고 튼튼해 질 것이다. 그곳에 인권을 침해당하는 이들이 있는 한.

박준영(아시아가톨릭연합통신 한국지국장)

식견과 내용을 담아내는 인권정론지로 써의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새로

운 영역과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 있는 <인권하루소식>을 보면 매체를 만들어내는 같은 입장에서 경외감이 앞선다.

아무튼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며, 정통을 세워나가고 있는 <인권하루소식>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길 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인권하루소식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사무실에서 벌어지길 바란다. 김성희(전국연합 교육선전국장)

## 운동본부의 역사가 이곳에

제가 일하고 있는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발족식 소식이 93년 10월 27일 <인권하루소식> 제33호에 처음 실렸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인에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렸을 때, 미군기지 앞에서 처음 치른 미군범죄 희생자 장례식, 1백회를 맞이했던 금요집회,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때 등 운동본부의 중요한 순간순간의 역사가 <인권하루소식>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인권하루소식>이 이런 소식을 보도할 필요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동식(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2천호에는…

마감날 밤을 샐 때 새벽5시쯤 울리는 폭스 소리.

'아! 인권하루소식이구나!' 하고 새벽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인권관련 소식들. 우리 사회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느끼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있는 소식들 전하는 <인권하루소식>에 감사하게 됩니다. 2천호에는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만 담게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희연(이대 학보사 편집국장)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 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7 일(금)

제 10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소문과 의혹들이 번져나가고 있다.

정대연 씨는 다음의 사실 등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조작가능성까지도 제기한다. 우선, 간첩혐의자들이 너무 쉽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며 접근한 점. 둘째, 기자회견이 열렸고 울산지역에 검문이 강화된 상황이 있음에도 그들이 최소한의 보안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셋째, 검거된 후 3~4시간만에 총을 묻어둔 장소를 말하고 만난 사람들의 명단 10여 명을 털어 놓은 점 등이 공자원으로선 너무나 허술한 처신이었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교수의 89년 행적부터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해 자칫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에선 92년 대통령선거 전의 이선실 사건, 96년 4·11 총선 전의 김동식 사건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다시 선거용 공안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시비를 없애기 위해 서라도 관계기관의 투명한 수사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히 요청된다.

## 서준식 씨 수사, 방향선택

## 북한인권 토론판론자료 · 해외체류 문제점

서준식 씨에 대한 수사가 당초 &lt;레드 헌트&gt;의 이적성 부분에서 다른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묻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6일 마포경찰서 면회 과정에서 서 씨는 "수사가 영화제와 관련된 것보다는 좌익사범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서 씨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가, 95년 미국생활, 올해 독일교포 단체의 초청으로 독일과 영국을 방문한 데 대해 집중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경 보안수사2대 소속 수사관들은 "해외에서 누굴 만났나, 외국에서 범민련 북측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나" 등의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서 씨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94년말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문제 토론회'의 자료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일 오전 서준식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 지뢰피해 한국 예외 아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국내에서도 민간단체들에 의한 대인지뢰반대운동이 시작됐다.

교회여성연합,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통일맞이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지뢰회의)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공동대표로 문정현 신부, 조미라 목사, 이장희 교수 등이 선출됐으며, 특히 대인지뢰 피해자 농민 두 명이 참석·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죄디 월리엄스, 국제적십자위원회 회장 코르넬리오 소마루가, 세계교회협의회 대인지뢰담당 드웨인 앱스 목사 등이 연대사를 보내왔다.

지뢰회의는 이날 한국정부의 대인지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며, 남북한 대인지뢰금지를 위한 여론화와 대안제시를 주요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행동 조직 △오타와 회의에서 한반도 특별결의안 추진 △ 죄디 월리엄스 등 국제적인 대인지뢰 금지 운동 전문가 초청 캠페인 등을 꼽았다. 또, 대인지뢰 피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구제사업도 병행키로 했다.

지뢰회의는 우선 대인지뢰금지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오는 19일 '한반도 대인지뢰금지운동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 대인지뢰 피해자 증언

피해자로 참석한 이서준(69·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2리 거주)씨 등 주민 2명은 "소 먹일 풀을 베다 폭풍지뢰(일명 발목지뢰)를 밟아 부상당했고, 단 한번 대한적십자사에서 의족을 해준 것 외에는 어떤 피해보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파주·연천·철원 등 민통선 인근 지역의 주민들 중에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다수며, 한 마을에 서너명 씩은 부상을 입고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주민들의 피해는 과거 민통선이 었다가 해제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민통선 지역에서도 군부대에 '다치더라도 사고 후에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출입허가증이 나온다면, 이들은 "차라리 위험이 있는 곳이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 61년 쿠바사태 당시 미군들이 집중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다"며, "처음에는 지뢰위험지역이라 표지를 해놓아도 그후에는 표지의 글씨도 없어지고 해서 주민들이 위험을 모른 채 지뢰매설지역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79년 9월 지뢰사고로 오른발 무릎 아래가 절단되었고, 왼쪽 발목 부위를 다쳤다.

지뢰회의는 '대인지뢰 금지, 현실과 과제'란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유료배포(책값 2천원) 중에 있으며, 이후 가입단체를 확대키로 했다. (문의 참여연대 이대훈 전화: 723-4250)

### 서 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서준식 씨의 체포 소식에 5일 민변·참여연대 등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민주노총·경실련·전교조·민가협 등이 또다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민가협은 "법무부, 검찰 등이 이땅 양심수 존재의 여전함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서준식 씨를 구속했다"며 "인권운동기에 대한 구속은 전세계가 경악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레드헌트〉를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은 "〈레드헌트〉 문제는 국보법이 이중기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공연법, 음비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 등을 추가 적용한 것은 소중한 인권과 양심을 유린한데 대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레드 헌트> 제외하고 수원 인권영화제 개막

6일 오후 4시 대한성공회 교동성당에는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인권영화제가 개막됐다.

수원 영화제는 지난달 인천 인권영화제가 경찰의 탄압에 밀려 조기폐막된 이후 지방에서는 두번째로 열린 것이다.

당초 수원 주최측은 논란중인 〈레드 헌트〉도 상영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이 작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인천과 마찬가지로 수원 주최측은 경찰과 구청, 도경 보안과 등의 압력이 내려왔으며 개막식 행사장 주변에서 경찰의 불법검문도 진행됐다.

한편 7일엔 안양 인권영화제도 개막되며 〈레드 헌트〉의 상영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 행사와 동정

#### ■ 양심수 문제 관련 긴급토론회

- 때: 11월 7일(금) 오후 4-7시
- 곳: 성공회대성당(시청앞)
- 주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민가협, 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주제발제: 양심수의 본질과 현황 (박원순 변호사)
- 토론자: 한인섭(서울대 교수)/김훈(시사저널 편집인)/강금실(변호사)/손석춘(한겨레신문사 노조 위원장)/신기남(국민회의 의원)/최규업(국민승리21 정책위원장)

#### ■ 김현철 석방 규탄 시민토론회와 풍자 퍼포먼스

- "양심수는 있다/없다" 토론회
- 때: 11월 7일(금) 낮 12시
- 곳: 명동 상업은행 앞 4거리
- 주최: 국민승리21 선거대책본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la.net • http://www.interpla.net/~rights

### <서준식 대표 수사속보 2>

## 인권운동사랑방 관련 집중수사

### 구속적부심 8일 오전 11시 서부지원 313호

서준식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시경 보안수사2대는 7일(금) 오전 7시경 마포경찰서에 유치중인 서 대표를 다시 장안동 대공분실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 및 인권영화제의 조직과 활동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낮 12시 15분부터 30분 가량 부인과 면회한 서준식 대표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창립과정, 규약, 활동내용, 구성원과 직제, 운영위원회, 재정 사항 및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명단과 역할 및 규약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이 되기 직전 수사관은 89년 평양축전 당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제작한 기념 엽서 10여장을 압수물품으로 제시함으로써, 오후 수사에서는 또다시 '북한 관련'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 대표는 "경찰이 이번 수사의 명분 부족 때문에 좌익사범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며 "표면상의 구속사유와 실제 수사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을 지적하며 "별건압수는 불법행위가 아닌가"고 문제제기했다.

이날 면회엔 인권운동사랑방 상근자 1명도 참석하려 했으나, 대공분실측은 가족의 접견만을 허용했다. 서 대표는 "조사 도중 마음이 악해질 것 같아 수사관이 주는 담배를 거절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8일 오전 11시 서부지원(주심 배현태판사) 313호 심문실에서 서준식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양심수는 누구인가?

###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우리나라에는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 "공산주의자와 폭력행위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과연 그러한가?

최근 김대중 총재의 빌언과 서준식 씨의 구속 등으로 불거진 이러한 논란과 관련, 7일 대한성공회 대강당에서는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기독교교협회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민가협 공동주최로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초청자 가운데 국민회의를 제외한 각 정당 및 법무부 관계자가 불참해 다소 김빠진 토론회가 되긴 했지만,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양심수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역시 "양심수란 누구인가"였다.

발제자로 나선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이상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양심수에 대한 국제 앤네스티의 정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제 앤네스티는 양심수에 대해 "폭력을 주장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언어·국적·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강금실 변호사의 주장은 한발 더 나갔다. 그는 "앰네스티 기준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온전치 못한 우리나라에 폭력을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심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승리21 정체위원장인 최규엽 씨

도 "역사적 조건에 따라 폭력이 '정의의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며 "폭력을 사용한 사람도 넓은 범주의 사상범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서울대) 교수는 "정치적 신념의 표현만으로 죄가 될 수 없고, 폭력성은 그 행위를 중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 학생운동의 폭력과 달리 한총련의 폭력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양심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수언론 질타

토론자로 참석한 언론인들은 언론에 대한 따가운 질타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손석춘(한겨레 노조위원장) 기자는 "언론의 반공 커플렉스 공세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한계있는 의식' 조차도 왜곡시켰다"며 수구언론에 공세를 펴 부었고, 동시에 "양심수 문제를 외면해 오던 보수언론들이 최근 양심수 관련 보도를 내보냈지만, 그나마 공안당국의 입장을 소개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훈 시사저널 편집국장도 "마광수, 장정일 씨가 구속됐을 때 대서특필하던 언론이 서준식 씨의 구속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며 "이는 양심수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정신병리 현상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당인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신기남(국민회의) 의원은 재야 및 시민운동단체의 비난을 의식한 듯 "선거를 앞둔 시기이니 이해하고 집권후를

1997년 11월 8일(토)

제 10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민회의의 당론이 '용서 차원에서의 사면'임을 거듭 밝히며, "집권하면 양심수를 전향적으로 석방하고 근원적으로 비민주적 악법을 개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모란공원 열사추모비 건립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상임의장 박정기)는 8일 오후 2시 마석모란민주묘역 입구에서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추모비 건립식'을 갖는다. 열사추모비는 전국유가협에서 제작하였으며, 비명은 신영복(성공회대) 교수, 비문의 글씨는 박용길 장로, 설계 및 조각은 화가 홍성담 씨가 참여했다.

#### 삼특 사태 국제 관심사로

##### 캐나다노조, 포철에 항의서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노동자 44명이 22일째 집단단식을 벌이고 있는 삼미 특수강 사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 이창수)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표적 공공노조인 캐나다통신노조(TWU)는 포항제철 김만제 회장과 청와대, 노동부 앞으로 삼미특수강 사태를 비판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왔다.

#### 국민승리21, 양심수 석방촉구

국민승리 21은 8일 낮 12시 명동 상업 은행 앞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등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 대형사고의 용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첫날 현장에서 8명을 구조하는 등 한 달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강아무개(36)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씨는 경찰서에서 "삼풍사고후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끔찍했던 참상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며 "사체들이 나타나고 집이 무너지는 환상과 악몽에 시달린 끝에 고통을 덜어보려고 히로뽕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6년 1월 6일자 참조)

사망 5백3명, 부상 7백18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전국이래 최대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되어 간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상처는 아물지를 모르고, 그 상처를 비웃는 듯 사회 곳곳에서 부실시공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흡한 위기대처능력은 일이 닥친 직후에나 여론의 폭격을 받을 뿐이고, 각종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영원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97년 8월 6일 새벽,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로 2백26명이 허망하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또 우왕좌왕이었다. 세계 10위권의 항공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항공사고는 세계평균에 비해 50%나 높다고 하는데 말이다.

#### 개발독재의 결과물

"개발독재의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는 '대형사고'는 문민정부들에 연달아 터졌다. 지나치게 높은 사고발생의 빈도와 그 엄청난 규모에 국민들은 하늘도 땅도 물도 믿지 못하고 그저 입을 벌릴 뿐이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뉴스를 장식한 대형참사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에 있다.

97년 4월 11일 열린 연세대 보건대학원 개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94년 한해동안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



일부 계층의 것일 뿐이며 다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단순히 개인이나 조직의 부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부주의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사회적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사고하느냐의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안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 대형참사 사상자 수 및 주요 책임자 선고형량 >

• 93년 구포 무궁화호 열차전복사고: 대법원 남정우 외 16명(업무상 과실치사 등), 최고 남정우 징역1년 집유 2년

• 93년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사망 289명 실종 3명)

• 대법원 박성일외 7명(해위공문서작성) 2심 박성일, 양기성 징역8월 집유 1년 선고(95년 9월 현재 3심 진행중)

•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사망 42명)

•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덕) 신동현(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박효수(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생산부장)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 2년의 실형 선고, 여용원(당시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씨에 금고 1년6월 실형 선고(97년 6월)

• 94년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사망 12명 부상 2백여명)

• 95년 4월 28일 대구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사망 101명 부상 2백여 명)

•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석 판사) 배정길(포준개발 대표) 씨에게 무죄선고된 원심 깨고 유죄인정(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

•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사망 503명 부상 718명)

•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 삼풍 회장 이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7년6월 선고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apia.net • http://www.interapia.net/~rights

1997년 11월 8일(토)

호외 3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서준식 대표 구속 관련 속보 3>

### 구속적부심 기각

####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4·3 항쟁을 소재로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서준식(48·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부지원(주심 배현태 판사) 304호 법정에서 4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열렸다. 이날 재판장에는 공동변호인단 중 조광희·이석태·최병모·윤기원·임종인·이덕우·차병자 변호사 등이 참석해 변론을 맡았다.

이날 구속적부 심사에서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①〈레드헌트〉를 상영하는 등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②보안관찰법 위반(집회 및 해외여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 ③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한겨례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 기부금 조성) ④현주건조물침입법(홍의대측의 불허통보를 받고도 무단침입해 인권영화제 개최) 등과 관련한 부분이 신문되었다.

검찰(김용호 검사) 측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식의 질문을 이어갔고, 서준식 대표의 일부사항에 대한 묵비권 행사를 시비걸기도 했다. 서준식 대표는 광범위하게 진행된 압수수색 시 '진흙속에 진주가 있다'는 말을 했다는 형사의 말을 들어 그 흙을 털어 혐의를 만들려는 구속사유와 상관없는 사항에 대해 답변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다는 데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레드헌트〉의 이적성에 관한 변호인 의견에서 제주에서 올라온 최병모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최변호사는 지난 10월 제주 4·3연구소 사무처장 김동만 씨를 제주도 4·3항쟁을 다룬 비디오 영상을 〈잠들지 않는 함성, 4·3항쟁〉을 문제삼아 긴급체포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던 사실을 지적하였다. 〈잠들지 않는 함성〉이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4·3 항쟁을 본 것으로 다소 편향적이라면 〈레드헌트〉는 객관적 입장을 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산 국제영화제에 상영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서 씨가 출소 뒤에도 또다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을 위반했으며, 대학의 요청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했다. 또한 교묘한 진술회피로 진술을 거부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서준식 씨는 "인권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사전심의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처벌받을 각오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보안관찰법 역시 (잘못된 법으로) 처벌받을 각오로 무시했다. 하지만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해 무엇을 숨기거나 하지는 않았다. 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과 관련해 2차 회의가 11월 10일 오전 8시 민예총 회의실(문의 743-5873)에서 열린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apia.net • http://www.interapia.net/~rights

## “노동운동, 미디어를 활용하라”

###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대회 개막

1997년 11월 11일(화)

제 10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전시대를 설치해 많은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 855-1913).

####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최근 검찰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을 비롯해 각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이인제, 이회창 씨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축소시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시행이 단순한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해 후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인터넷 서명운동

### 서준식 씨 석방촉구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http://www.interapia.net/~rights>)에서는 지난 5일 구속된 서준식(50)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적은 수이지만 통신인들이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통신인의 발언을 소개한다.

"모든 이들의 소박한 꿈들이 터무니 없이 짓눌리지 않는 세상,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며… 서준식 씨의 빠른 석방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보안관련법들은 즉각 철폐되거나 대폭 수정·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김민수(mskim@chiak.kaist.ac.kr)

##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 · 후원 계좌 추적 · 사법처리” 압력

현법에 위배되는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던 제2회 인권영화제가 거센 비비람을 맞고 있다. 당초 ‘사전심의’ 거부를 빌미로 몰아친 영화제에 대한 탄압은 이전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제작)에 대한 이적성 시비로 옮겨갔다.

오는 20일부터 상영을 앞둔 제주 지역 역시 안기부와 경찰측의 압력으로 <레드헌트> 상영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제2회 인권영화제 제주집행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 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상영예정지인 ‘예인아트홀’ 관계자로부터 불허통보를 받았다. 6일자 <제주일보> <제민일보> 등은 일제히 “경찰측은 <레드헌트>가 불법제작된 비디오물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이적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화상영을 중단하고 관계자를 전원 사법처리 키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8일 제주경찰서 보안2계는 제주집행위원회측에 <레드헌트>를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이적표현물로 판명받았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화상영을 원천봉쇄하기로 하고 영화제 후원회원 계좌추적에도 들어갔음”을 알려왔다. 압수수색 영장은 “제주연합사무실, 제주대총학생회 사무실, 제주대 2층 시청각실, 예인아트홀, YMCA 강당(제1회 인권영화제 상영장소)”에서부터 “이외의 상영장소”까지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김상근 목사, 이영웅(제주대 국어국문 3년)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일 것임을 통보했다. 이영웅 씨가 대표로 있는 제주대 참여자치 학생연대는 11, 12일 제주대 교내에서 ‘제1회 참여자치 인권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이 행사에서 역시 <레드헌트> 상영할 예정이었다.

결국 수사당국의 탄압에 따라 제주집행위원회는 10일 “제주도에서 조차 <레드헌트>를 상영하지 못하는 것이 어렵지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 볼 때 상영에서 제외키로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참여자치 학생연대측 또한 <레드헌트>를 상영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인천을 비롯한 10여 개 지역영화제에서는 모두 <레드헌트>를 상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준식 씨의 구속 등으로 당국의 압력이 현실화됨에 따라 각 지역 인권영화제 주최측은 <레드헌트> 상영을 강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광주·전주 등 남은 지역에서의 <레드헌트> 상영 여부 및 서준식 씨의 구속과 함께 법정으로 옮겨진 <레드헌트>의 이적성 시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오늘의 주요 강판

- ▶ 이천재/이종린(국보법, 범민련)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 ▶ 정영훈(국보법) 오전 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 주/간/인/권/호/름

(97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 ◆ 3일(월)

이인제 전 경기지사, ‘문민정부 이후 양심수 존재’ 부인/군에 갖 입대한 육군 이병이 고참병의 잊은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페어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럭 운전자들 1년만에 또다시 대규모 파업돌입

### ◆ 4일(화)

고건 국무총리, 기존 국적법 개정해 부모의 한쪽만 한국인이라면 자녀에게 한국국적 부여기록/한국경영자총협회, 100인 이상 사업장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을 지난해보다 3.0%포인트 낮은 5.8% 수준/덕성여대 총학생회, 관련이사 파견등을 요구하며 국문학과등 9개 학생회장 단식농성 돌입/96년 전체 국민의료비 16조4827억원으로 작년에 배해 17.2% 증가

### ◆ 5일(수)

인권하루소식 1천호 발행/서울경찰청 보안수사2대, 서준식 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독일 법원, 전후 처음으로 수용소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인정

### ◆ 6일(목)

한국은행 발표,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변동률 1분기 -2.9%, 2분기 -4.4%, 3분기 -5.3%로 감소율 확대/인천지방환경관리청, 약취예고제 시행예정/35개 시민·환경단체, ‘무분별한 댐건설 저지 및 댐 피해대책 국민연대준비위원회’ 발족/16개 시민·사회단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공식 출범

### ◆ 7일(금)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안전문화추진 서울지역본부 표본조사 결과, 시물시내 지하철의 노약자·장애인 보호석과 시각장애인용 보행 유도로가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배치돼 이용 불편/노동부 발표, 올 3/4분기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정리해고로 이직자 1만197명 발생/노사관계개혁위원회, 금융·보험업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예정

### ◆ 8일(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실문을 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쪽 크게 반발/미국 중앙정보국(CIA)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고위 외교관의 집 도청하다 발각

### ◆ 9일(일)

민주노총, 여의도에서 노동자·시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97전국노동자대회’ 개최/국방부, 올해말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 도입을 빠대로한 군사법원법과 군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대법원, 국회가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것과 관련, 10일 국회에 반대의견 전달기록/국제노동기구 연례노동보고서, 10년동안 우리나라 노조 가입자수 60.8% 늘어 노조원 증가율면에서 세계 6위 차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12 일(수)

제 10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법원의 집단 행동은 검찰에 대한 극도의 악감정 때문”(10일자 사설)이라며, 오히려 법원의 집단행동을 비난하는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법부 마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결국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관료화와 검찰의 독선화가 빚어낸 권한싸움”으로 규정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은 양측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외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삼가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5일자 기자수첩(김홍진 기자)을 빌려 “어느 쪽이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좋은 방향인지 합리적 해결 점을 찾으라”며, 양비론의 시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 1년도 채 못 돼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으나 국민인권신장에 앞장서야 할 대다수 언론들은 침묵 또는 묵인 속에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국민인권신장을 위한 혁명으로까지 평가받은 영장실질심사제가 퇴보하기에 몰렸다.

올 1월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라는 원칙 하에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인권보장에 일대진전을 이룬 조치였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못마땅함을 드러낸 검찰측이 급기야 영장실질심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원이 이에 집단반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현재 이 논란의 핵심은 ‘인권보호’나 ‘수사효율’이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원과 검찰 사이의 밥그릇 싸움인양 본질을 흐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느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언론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일부 언론, ‘밥그릇 싸움’ 흐도

8개 종양 일간지 가운데 ‘인권보호’ 입장에서 사설을 게재한 언론은 <한겨례>와 <동아일보> 뿐이며, <경향신문>은 오히려 사태의 초점을 흐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겨례>는 11일자 사설에서 “영장실질심사제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고, <동아일보> 10일자 사설 역시 “정권 말기 어지러운 분위기에 편승해 중요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법률이 졸속처리되서는 안된다”며 ‘인권보호’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검찰측의 ‘수사낭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동수

##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 두산기계 박덕기 씨 사망 파장

수원시 남수원병원 영안실엔 지난달 30일 사망한 한 노동자의 시신이 2주 일째 안치되어 있다.

고인은 두산기계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박덕기(29·전 노조 사무장) 씨. 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 병점공장으로 출장과 있던 박 씨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같은 회사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사건 후 보름이 지난 동안, 사인도 밝혀지고 폭행당사자들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는 등 사건은 하나둘 매듭을 짓고 있지만,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은 장례를 미룬 채 영안실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주변 동료들이 박 씨의 죽음을 예사롭게 넘기지 않는 까닭은 폭행당사자들이 '극우, 반노조 의식화의 첨병'이라고 비난받아온 다물단의 간부들이었기 때문이다.

다물단은 다물교육연구소(소장 강기준)의 '다물교육'을 통해 구성된 조직으로, 양로원 방문이나 놀이터 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벌이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형과 달리 다물단은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노동 기본권인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결국 박 씨 사망은 다물단의 존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생각이다. 병점공장 노조 부위원장 정귀재 씨에 따르면, 두산기계에서 6백명에 달하던 노조원 가운데 4백여 명이 노조를 탈퇴한 뒤 다물단에 가입했으며, 이들은

### 제2회 인권영화제가 12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 지역 상영 일정

지역	일시	장소	문의
전주	11/11-14	중앙성당	0652-76-1253
광주	11/12-15	남동성당	062-529-7576
마산·창원	11/13-15	미정	0551-61-4807
대구	11/15-23	열린공간 큐	053-742-7456
군산	11/20-21	오룡동성당	0652-76-1253
원주	11/24-30	원주 기틀릭센터 강당	0371-45-2355
제주	11/27-29	예인 아트홀	064-22-2701
구리	11/30 - 12/4	미정	0346-69-9134

조직 흐름을 형성해 왔다는 지적이 다. 다물교육연구소의 기관지 〈북소리〉에서는 학생운동·노동운동 일반을 좌익세력의 은상으로 묘사하는 등 극우적 시각도 서슴없이 밝혀왔으며, 최근엔 "노조집행부를 장악해 다물노조를 건설해야 한다"(97년 봄호)는 주장까지 싣고 있다. 두산기계의 다물단도 회사내에 현장사무실과 상근인력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회사로부터 임금수당까지 지급받는 등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왔다.

박덕기 씨의 사망과 관련, 두산기계 창원공장의 노동자들이 영안실 농성에 합류한 데 이어,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등도 다물단의 해체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지난 10월 29일 〈논장〉 등 대학가 사회과학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서점대표 구속사건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온 서점모임과 출판사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언론·출판·학문·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대표 김범섭)가 11일 오후 2시30분 고려대 장백서점에서 공식발족 했다.

공대위는 "최근 인문사회과학서점 대표를 비롯해, 출판사 '이웃', '청년문예', 관계자,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모두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영화를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면 무죄이고 인권단체가 상영하면 유죄인 것대는 무엇이며, 같은 사회과학서점에 대해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면 문제되지 않고, 대학가 영세서점에서 판매하면 문제가 되는 이중 법적용은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이에 공대위는 "현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생존권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안탄압 현황을 알리는 홍보작업 △대국민 서명운동 △현법소원제기 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공대위에는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 '전국출판노조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및 창작과 비평사, 살림터 등 40여개 출판사를 비롯해 압수수색을 당한 사회과학서점이 위치한 대학 총학생회 4곳이 참여했다.

#### ◇행당동 철거 성추행 근절과 관련자처벌 촉구 및 서명대회◇

12일(수) 낮 12시  
덕수궁 정문앞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1.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 천명한다. 2. 정부는 강제철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는 삶의 자리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결국 한 여자의 윗도리를 벗기고 저희들끼리 히히덕거리며 젖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시작했다. 이에 저항하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집단으로 짓밟는 등의 폭행을 하여 실신 지경에 이르자, 개 끝듯이 사무실 밖으로 나와 아랫도리마저 벗기고 구둣발로 차는 등... 이를 말리는 여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벽에 머리를 부딪쳐 실신케 한 뒤에 음부를 움켜쥐고 뒤흔드는 만행을 저질렀다.

앞의 내용은 94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문에서 옮긴 것이고, 뒤의 인용문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 1-2지구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고발하는 주민들의 유인물에서 따온 것이다.

유엔의 결의문은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강제철거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엔은 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주거권회의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사람이 적정한 주거에 살아갈 권리

를 인정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 철거용역업체 등장

하지만, 위의 유인물에서 보듯이 철거현장에서는 폐번 강제로 철거가 행되고 있으며, 노태우 정권 때까지도 인정하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을 중단하였다. 특히나 철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폭력은 이

민들의 생존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노리는 사업체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데 문제의 근본원인이 있다. 철거폭력도 이처럼 개발이익을 둘러싼 재개발과 재개발사업체, 철거용역업체간의 삼각관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 세계주거권회의의 약속

이처럼 문민정부에서의 주거정책은 오히려 주거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철거민들은 가수용단지 마저 얻지 못한 채 노숙으로 지내다 결국 최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처지에서 "모든 개발과 계획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각국의 토지, 기후, 환경 등의 상황에 따른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해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스탄불 세계주거권회의에서 주장한 민간단체들의 주장은 먼 미래, 남의 나라의 일로만 여기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주요 공판 안내

▶ 12일(수)  
박경수/유영재(국보법 찬양·고무)  
오전10시, 302호, 합의2부, 속행  
정수일(국보법 간첩 등) 오후2시,  
302호, 합의2부, 속행  
이영두(국보법) 오후2시 11단독, 속행

▶ 13일(목)  
전행란 외1(기차교통방해 등) 오후 2  
시, 404호, 합의5부, 속행  
황윤미(국보법) 오전10시, 519호, 5  
단독, 선고  
유석상/홍석범/최예경(국보법 찬양·  
고무 등, 고대 청년사건) 오전10시,  
319호, 합의23부, 선고

▶ 14일(금)  
김현일 외2(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302호, 합의2부, 선고  
황인성(국보법) 오전10시, 425호,  
합의3부, 선고  
이창복(국보법, 전국연합) 오후4시,  
418호, 합의1부, 속행  
-서울지방법원 형사국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하고 변명의 기회를 가질 권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이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판사 대면권(심문청구권)은 판사의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필요한 심문은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은 궤변이자 학정이라는 것이 법원과 인권옹호자들의 반박이다.

법원측은 “개정안은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심문을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현법정신과 국제인권조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용환 변호사도 “판사대면 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생기고 안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실제 검찰의 관심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곽노현 교수(방송대)는 “검찰의 내심은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피의자 심문청구권 행사가 20~30%로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데 있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절대적 권리인 심문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 흥정에 의한 것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원 등은 현행 영장실질심사가 여전히 국제인권조약보다 미흡하며, 따라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현재 판사 앞에서의 변명권을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가 20%에 달 한다”며 “이는 현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재판청구권, 평등권 위반 등 위헌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수는 “이들 20%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중범죄 사건, 정치적 사건, 공안사건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달라진 점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은 수사초기

### 각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요건을 심사하고, 보석석방이나 예방구금(Detention)이나를 결정한다.

◇ 독일: 긴급한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체포된 피의자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판사에게 필요적으로 인치되어 심문을 받고 구속명령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명령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도 다음날까지 필요적으로 판사에게 인치되고 판사가 심문하여 구속명령의 유지 결정, 집행정지결정 또는 구속명령 취소 결정을 내린다.

◇ 프랑스: 수사관사는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소환영장, 구인영장, 구금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필요적 대심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명령의 형식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체포된 피의자는 예심판사가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예심판사는 지체없이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심문하여야 한다. 그 다음 예심판사는 다른 대체수단을 적용하여 석방하든지 혹은 구속명령을 하든지를 결정한다.

1997년 11월 13일(목)

제 10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경찰의 고문과 가혹수사가 대폭 사라진 점이 드러나고 있다. 곽노현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는 적은 비용으로 획기적인 인권신장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를 검찰과 법원 간의 밤 그릇 싸움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 B규약 9조 3항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 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 야...”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발족식 및 기자회견

11월 13일(목) 오전 11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대경 “오히려 피의자 인권 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은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하고 구속은 판사의 사면심사로만 결정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다.

2. 수사기관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호송을 위한 수사요원 차출, 장기간의 호송 및 심문대기로 범죄진압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있다.

구속영장청구시 법원의 공개된 피의자 심문으로 수사진행 상황이 누설돼 공범 및 피의자의 여죄수가 매우 곤란하고 피의자, 공범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체포적부심, 구속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기소전 보석 등은 피의자 구속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규정으로 사실상 수사 불가능을 초래한다.

#### 3. 법원의 구인장발부로 인한 인권침해

수사기록상 충분한 판단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기준없이 무차별적 구인·심문하고 심문체도 형식적 사항에 그쳐 피의자심문을 통한 피의자 인권보장은 허구이며, 실제 수사기관, 피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가 원하지도 않은 강제심문을 위한 구인과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단지 심문만을 위한 구인장 발부는 법원에 의한 심대한 인권침해이다.

#### 4. 법원의 형식적·불성실한 심문이 오히려 인권침해

수사기관의 피의자심문 방지를 위한 강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수사기관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주장이다. 현재 법원의 형식적·불성실한 심문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의자의 요청에 의해 심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할 때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필요한 심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 5. 법원의 법규정 취지 망각 조속한 시정 불가피

법원의 법규정 취지를 망각한 자의적인 운영으로 제도취지가 퇴색하고, 오히려 문제점만 노출하여 조속한 시정 불가피하다. 법원의 자기권한 강화 내지는 확충을 위한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기관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 법원 “가혹행위 극복 효과”

1. 세계적 추세 역행, 국제인권조약 위배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모두 필요적 심문이고, 우리의 현행 임의적 심문제도는 과도기적 타협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필요적 심문’으로 법을 개정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 2. 피의자 호송체계 정비 시급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특히 경찰의 피의자 호송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수사인력을 빼앗긴다는 부작용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호송인력을 전문화하고 호송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현재보다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선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수사담당자가 직접 피의자를 호송하는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 수사공백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 3. 헌법상 기본적 인권 침해 우려

영장실질심사제는 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주의의 구체화 ▲피의자의 법적 청문권·재판청구권 및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방지하고 신체의 자유의 박탈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헌법 제10조, 제11조 1항, 제12조, 제27조 1항,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72조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신에도 위반된다.

#### 4. 수사기관의 피의자 심문 방지를 위한 강요 가능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심문 요청을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고, 심문 불요청 의사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올해 들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에서의 정확성을 상당 정도 담보할 수 있고, 피의자심문을 통해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구속자 중 10%만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 있다는 실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개정안대로 하면 피의자심문율은 10-20%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며, 결국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 5. 시행 1년에 불과한 법개정은 시기 상조

95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도입되었다. 시행 1년도 안되어 형사소송법의 조문 하나만 개정하는 것은 95년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 형사소송법 전반을 종괄적으로 검토·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구속의 빌미가 되었던 제주 4·3항쟁 소재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전국 동시다발 상영에 들어가게 된다.

13일 민변·민교협·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27개 사회단체는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동대표 김승훈 등)를 발족하고 전국의 대학교·교회 등지에서 <레드헌트>를 동시 상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푸른영상 대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활동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킬 것이라 믿는다"며 "구속을 각오하고 상영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대위는 공안당국의 <레드헌트> 이적성 규정에 맞서 영화과 교수, 현대사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레드헌트>에 대한 의견개진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오는 28일 <레드헌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서 씨 석방운동 국내외 확산

이날 공대위 발족식을 시작으로 서준식 씨 석방운동과 각종 인권문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소속 회원 84명(13일 현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이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음비법, 공연법, 보안관찰법, 기부금 품모집규제법 등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서준식 씨의 구속은 서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들이 국제인권조약에 비추어 합당

한지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철저히 양심에 따라 행동해 온 서 씨의 활동이 법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국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항의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각 나라 영화단체나 각지 동포들의 항의도 적극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서준식 씨 구속과 관련 한국정부에 항의의사를 전달하거나, 석방운동에 나선 국제 단체들은 국제앰네스티, 세계고문방지기구, 아시아인권정보센터, 아시아인권위원회, 대만인권연합 등이며, 독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홍콩 등지의 동포들이 동참하고 있다.

한편, 수원·안양·제주에 이어 전주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상임공동대표 문규현)도 "정부의 탄압 앞에서 인권영화제를 지켜내기 위한 교육지역으로 레드헌트 상영을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주 조직위원회측은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오는 15일 전주 서학동 성당(문구현 신부)에서 <레드헌트>를 공개상영하겠다"고 밝혔다.

#### 전자주민카드, 형소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각각 통과됐다.

#### 부부간첩사건 공개수사 요구

불교 6개 단체, 서준식 씨 석방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실천불교전국승가회·전국불교운동연합 등 6개 불교단체는 13일 서준식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여러 악법의

1997년 11월 14일(금)

제 10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울산 부부간첩사건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 알쏭달쏭 이적단체 고려대 '청년' 유죄

13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7조 친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강령을 보면 이적단체로 보기 어려우나 구성원과 단체의 활동을 보면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청년"이 광장사업 외에 특별히 대중을 상대로 한 이적활동을 한 것이 없고, 유 씨가 학생이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전자주민카드, 형소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각각 통과됐다.

#### ■ 오늘의 행사

##### □ 민가협 "양심 장례식"

- 때: 14일(금) 오전 10시
- 곳: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

##### □ 표현의 자유 2차 토론회

- 때: 14일(금) 오후 2시
- 곳: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 주최: 민예총 등 14개 사회단체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동인권정책은 '고통분담론'으로 출발한 뒤 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통해 그 절정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반노동·친자본 성격이었던 문민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 허리조르기에서 목자르기로

경제적 압박과 생존의 위협은 노동자들이 겪는 최악의 고통이다. 이러한 고통은 문민정부 초기 '허리띠 조르기'로부터 후기 '목 자르기'에 이르기까지 문민정부를 관통하며 이어져 왔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고통분담론'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전가로 귀결되었다. 매년 정부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억제 정책을 펼쳤으며, 노사자를 원칙에 위배되는 임금가이드라인마저 95년 다시 등장했다.

차라리 임금의 동결은 견딜만했다. 96년 이래 몰아닥친 '명예퇴직'과 '정리해고'의 열풍은 고개숙인 아버지를 양산함과 동시에, 사회전반에 '실업의 공포'를 확산시켰다. 정권초기 2% 수준이던 실업률은 97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무려 3% 선까지 증가했다. 또한 외주화·파견근로자 등 용역 계약이 증가하고, 임시·족탁·시간제 취업 등 비정규 고용형태가 증가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한층 가중됐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자살 및 가정파괴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는 오로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만이 '국제화'에 발맞

주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급기야 노동법에 정리해고를 명문화하는 '96 날치기 처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격분을 초래하기도 했다. 물론, 95년 고용보험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업·취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현 정부의 공로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도 역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되기에 턱없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자가당착인 '국제화' 논리



력 투입으로 일관했다. 특히 정부는 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이를 '국가 전복세력의 음모'로 규정하며, 조계사와 명동성당에까지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노동기본권에 대한 후진적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또한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국제화' 논리에 비추어봐도 자가당착적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각종 국제기구들은 △복수노조 허용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3자개입금지조항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누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일례로 95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그해 11월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를 3자개입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권고를 민망케했다. 심지어 96년 OECD가입후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국내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마저 초래했다. 문민정부의 금과옥조 국제화 논리도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적용되고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권 개선'이라는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중잣대였던 것이다.

#### '파업권' 대폭 제한

97년 3월 개정된 노동법은 현 정부의 노동권 이해수준을 재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개정 노동법은 △무노동무임금의 명문화 △대체근로로 허용 △사업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현저히 축소, 제한하는 조항들을 곳곳에 삽입하고 있으며,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배제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문민'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레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김영삼 정부 5년은 보여주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interia.net · http://www.interia.net/~rights

##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카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병역·사항·사진·지문·발급기관 등 9개 항목 수록된다. 수록항목이 당초 35개 항목에서 대폭 수정된 셈인데, 주민카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사생활 침해 부분이다.

13일 민변·민가협 등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4일에는 국민승리21·전국연합·전자주민카드 광주전남지역 공대위 등이 규탄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또 천주교인권위원회·민변·참여연대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또한차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 사회단체, 잇따른 규탄 집회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3일 오전 내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회의 유선호·이기문 의원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부쳐졌으며, 같은날 오후 내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불여겨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5표로 처리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규정(민주당) 의원, 박종우·이재오·김태호·김기재·김영진(신한국당) 의원, 김고성·이상만(자민련) 의원, 김충조·박상천·김옥수·유선호(국민회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때 추미애 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 전원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생활의 편

1997년 11월 15일(토)

제 10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부등 행정기관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확인해진 상황이다. 이에 공대위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사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누차에 걸쳐 요구해왔다. 주미애 의원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앞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구(주미애 의원) 비서관은 "전자주민카드의 실질적 위험은 컴퓨터 칩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번 법률개정은 주민카드마련의 근거법률일뿐 주민카드의 형태를 칩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새 신분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은 14일 오후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넘겨두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7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양심수가 없는 나라"

## 민가협, 양심 장례식 치러

민가협이 주최하는 '양심장례식'이 14일 오전 10시경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성직자·대학생들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검은 만장과 검은 영정을 든 채 머리에는 검은 머릿수건을 두르고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렀다.

이기욱 변호사는 "신한국당 대표인 이희창 씨는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고 하고, 김대중 씨의 양심수 발언에 보수 언론이 일제히 흥분하고 나온지 얼마 안 돼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서준식 씨가 구속되었다"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작품을 서 씨가 상영했다고해서 잡아가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신한국당은 그래도 양심수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례식 행렬은 신한국당에서 국민신당으로 이어졌으며, 장례대열에는 양심수들의 가족인 김지영(서준식 씨 부인) 씨, 조선순(장기수 강용주 씨 어머니) 씨와 감옥에 갇힌 손병선 씨의 외손자 임동선(?) 군이 참석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뛰어 나와"

형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도입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피해자, 기타 선량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가 범죄자에 의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 당연히 앞서는 가치이다. 실질심사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처를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다."(검찰)

##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심문' 세미나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형법적 권리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형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는 형법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법조계 내에서의 논의·검토·합의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급격한 논의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법원의 견해에 동조했다.

반면, 검찰측 주제발표자로 나온 박영관(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검사는 다소 격앙된 자세에서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권한을 판사가 갖게 됐다"며 "법원이 인권보장을 앞세워 사법독재국가를 만들려 한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오영근(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권이 비대화한다는 지적은 사돈이 남 말하는 얘기"라며, "오히려 검찰권의 비대화가 더 문제"라고 검찰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검사는 과격하고 흥분된 어조로 일관했는데, "왜 갑자기 중세암흑시대에나 있던 시대착오적 인권보장론이 뛰어나오는가" "우리나라의 인권보장제도는 산첩첩 물첩첩이다(보장이 잘 되어 있다)" "목비권은 테러리스트들이나 사용하는 것이다. 목비권을 고지하는 것은 수사에 불편만 초래한다." "범죄자를 구속했을 때 느끼는 국민의 감동은 불구속재판을 통해 실행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가 안된다." "미란다 룰은 신성불가침의 천부인권이 아니다." "국제인권조약은 미국식 사법의 표현일 뿐이며, 기소된 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 시종 비상식적이고 감정적인 언사를 감추지 못했다.

이제까지 오랜 동안의 잘못된 인신구속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 형성된 국민의 법의식, 법감정에 영향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공허하게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인신구속제도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규정에 맞게 개편, 운용함으로써 종래의 잘못된 법의식, 법감정을 고쳐 나갈 수 있다.

▶ "구속은 수사기관의 고유권이다. 구속의 필요성을 가장 잘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마음대로 기각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검찰)

검사에게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판단과 구속영장의 집행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판사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즉, 구속에 관하여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고,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다.

▶ "민생치안 확보와 범죄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기관의 인력이 피의자 심문을 위한 호송 등에 빼앗기고 있다."(검찰)

호송전담부서의 신설, 기타 인력과 장비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 자체를 포기해야 할 시유는 될 수 없다.

▶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기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보다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당사자측과 협의하에 구속사유 관련 소명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는 등 노력하는 것에 기인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당연하다. 문제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다수가 의혹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문체규(안동대 교수·평법)

피의자의 인권회복에 획기적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돌도 끓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질심사로 후퇴시키는 혼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현행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다'로 하자는 것이다.

이번의 개정시도가 다분히 기습적이고 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논평의 대상으로 삼기조차 꺼려진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개정안이 법원칙에 더욱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피의자의 판사면접권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피의자 심문여부는 피의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원칙에 더 맞고, 또 현행제도는 판사면접에 대한 피의자의 결정권이 무시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은 피의자의 의사를 따르자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검찰의 이러한 강변이 갖는 허구성은 드러나고 만다.

'임의적 실질심사'가 '형식심사'로

개정안이 과연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더욱 철저한가. 개정안에 의하면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심문여부가 결정되므로 현행제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피의자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현행의 임의적 실질심사가 형식심사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어떻게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말인가. 형식심사에서 실질심사로, 다시

실질심사는 임의적 실질심사에서 필요로 실질심사로 이행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신장의 정도라는 원론을 부정하려는 것인가.

만약 현행의 규정에다가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면, 부분적으로 필요로 실질심사를 도입하려는 것이므로, 분명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피의자의 결정에 따르게 하자는 등의 표현을 통하여 마치 피의자를 위

가족·변호인도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 검찰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굳이 권리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피의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영장주의에 의하자는 개정안도 나을 법하다. 웃지못한 원리의 왜곡을 본다. 법의 기교는 그것이 원리에 도전하는 형상이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구체성과 특수성을 위해서 원리에 탄력을 부여한다는 자기 한계를 지킬 때, 그것은 비로소 자제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장심사제도에 대한 검찰의 일관된 입장의 필요성을 보면, 검찰과 경찰의 차별성에 회의를 갖게된다. 저별지향적인 경찰에 대해서 검찰은 법의 적정한 실현을 지향하는 법의 감시자라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 영장청구권 및 소추권의 독점, 이 모든 것은 이러한 차별성에서 정당화되었던 게 아닌가.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다.

### ■ 행사와 동정

□ 유가협 창립 12돌 기념 및 12차 정기총회

· 때: 15일(토) 오후4시

·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 서준식 선생님을 면회하고자 하는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 바랍니다. (741-5363)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치소 3444번 서준식 (152-081)

■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상영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15일(토)  
호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 〈속보〉

##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기습시위

### 공대위 대표단, 신한국당 총재 면담 요청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3, 14일 국회 내무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김진균) 소속 회원 20여 명은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저지를 위한 기습시위를 개최했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곧 시위는 저지됐으며, 참석자들은 신한국당사 앞에서 경찰의 봉쇄 속에 남아 있다.

또한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기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오창익(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씨 등 대표단 3명은 오전 10시 15분 신한국당 총재실을 방문, 이회창 총재와의 면담을 요구중이다.

그러나, 오전 11시 현재까지 신한국당측은 대표단과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단은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당사에 계속 머물 계획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의원 1백53명이 찬성한 가운데 1백1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당초 이날 표결에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법안 통과가 어려웠으나, 신한국당은 서둘러 소속 의원들을 불러들여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공대위)는 이날 낮 12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한 정당의 대통령후보 낙선운동과 위헌법률 신청을 비롯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전자주민카드 시행 협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의 전개,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 운동을 포함하는 모든 법적, 물리적 대응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컴퓨터통신 상에서는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통신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17일 현재까지 총 4백81명이 서명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서준식 대표 연락처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치소 수감번호 3444(152-081)  
• 연락을 원하는 분은 시립집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741-5363)

1997년 11월 18 일(화)

제 10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유를 억압하면서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바라며, 보안관찰법에 의해 과거 양심수들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서준식 씨는 면회과정에서 “검찰도 인권영화제보다는 내 집필활동과 인권운동 활동에 대해 짐증조사를 벌이고 있다. 표적·보복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회 모임

- 민경우(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 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나창순(국보법 친양·고무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김해련외3(국보법 친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취재수첩>

####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국회의 출석입법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전투경찰의 행렬로 계속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경 한국은행 소속 노동자들이 금융개혁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진출을 시도한 데 이어, 낮 12시부터는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소속 조합원들이 신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시각 긴너편에선 시민·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이 모여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형사소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위를 갖기도 했다. 정권교체기를 틈타 각종 인권관련 악법이 무더기로 처리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몸짓이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전투경찰 십여 개 중대를 투입해 국회정문에서부터 3중4중의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응했으며, 심지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일반인들의 출입마저도 통제해 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당국의 물리적인 차단에 앞서, 이미 국회 스스로가 국민에게서 떠나버렸다는 점이다.

국민인권을 좌지우지하는 전자주민카드와 형사소송법을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리해버릴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들은 이미 민의의 대표자라는 허울을 벗어버린지 오래였다. 국민소환 및 탄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우리 현실을 심문 비웃듯 이날 국회는 또 하나의 죄악을 저질렀다. 시위대가 떠난 뒤 불과 수시간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보관 듯이 통과시킨 것이다.

## “서준식 석방, 전자주민카드 도입철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참가자 결의문 채택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연세대에서 열린 '97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국내외 참가자 일동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대표의 석방과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2일 발표된 이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 인권상황 개선에 앞장서 온 서 대표의 구속은 한국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필요한 상영물도 당국의 지속적인 간섭에 시달렸다면서 “이는 한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망에 의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최근 벌이지고 있는 상황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심각한 수준에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국가보안법 철폐 △표현과 사상의 자유 완전 보장 △모든 검열과 통제를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0여명 긴급체포

국보법 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부천민주노동청년회 회장 박재현 씨를 비롯한 11명의 회원이 17일 오전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부천민주노동청년회는 현재 대선과 관련해 '97대선 노동 청년 사업단'(대노단)을 구성, 지역과 전국차원에서 대선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박재현 씨는 대노단 대표를 맡고 있다. 연행된 이들 중 양희순(박재현 씨 부인) 사무장은 현재 임신 6개월이며, 이들 부부의 연행과정을 지켜본 양희순 씨 어머님이 충격으로 쓰러진 상태이다. 또한 회원 이은영 씨와 양승철 씨는 12월7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현재 연행자들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행자 명단: 박재현, 양희순, 오장열(교육부장), 이옥선, 장경희, 배동관, 천옥남, 이은영, 양승철, 신익선(이상 회원) 등

## 유가협 회장 배은심 씨 선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5일 오후 4시부터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제12차총회를 갖고 회장에 배은심(이한열 열사 어머니), 부회장에 김혜수(강민호 열사 어머니)·임분이(의문사 당한 정연관 씨 어머니) 씨를 선출했다.

## 주/간/인/권/호/름

(97년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 ◆ 10일(월)

한국장애인부모회·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삼성동 소재 장애인 특수학교인 ‘지애학교’ 설립 촉구/국제앰네스티, 일본내 외국인 재소자들이 폭력과 인종적 차별, 성적인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일본관리들이 이를 은폐하거나 무시하려 하고 있다고 전해

### ◆ 11일(화)

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의 배후조종해온 혐의(국보법 위반)로 원용수(28·서울대 공법학과 4년 제3적) 씨 등 11명 구속/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 소속 장애인과 회원 30여 명,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 열리는 KBS 1층 로비에서 수화 및 자막방송 실시 요구하며 항의시위/유럽사법재판소, 남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공분야에서 등등한 자격을 갖춘 남성보다 여성에게 승진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유럽연합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유네스코, ‘인간 개념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 공식 채택

### ◆ 12일(수)

통계청 발표, 지난 1년동안 실업자 7만9천명 증가(20.2%) 해 총 47만명으로 집계/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대해 30일간 형집행 정지

### ◆ 13일(목)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강행/3당 총무간담회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해 추가신청할 수 있도록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합의/28개 사회단체, 가톨릭회관에서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정부,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소파(SOFA) 개정협상 다음달 재개할 것을 미국 쪽에 촉구키로

### ◆ 14일(금)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고성호 판사, 죄없는 시민을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보내놓고도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활용하(64·행정서사), 김경복(54·부천 중부경찰서 형사주임) 씨 등 전·현직 경찰관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과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국회 법사위,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보험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안 통과/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시행뒤 처음으로 위반행위 39건에 모두 1억1천7백만원의 과징금 물려/국회 환경노동위, 기업부도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 우선 변제기간을 대폭 축소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동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 ◆ 16일(일)

한국은행과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원 등 2천여 명, 종묘공원에서 금융감독기구 강제통합저지 등을 위한 결기대회/한양대병원 노조 조합원 3백여명 해고된 전노조위원회 차수련 씨의 복지 약속 이행요구하며 2일째 파업/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 웨이징성(47) 씨 석방

##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아석 대(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하루소식 1천호가 발간되는 날 오후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접견했다. 구금 상태에 있는 그를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 징역을 교박 살고 난 후 다시 사회안전법의 보안처분을 받아 10년을 더 청주보 안감호소에 있었는데 88년 석방된 후 불과 3년 뒤인 91년 6월 다시 성동구 치소에 구금되었다. 겉으로 그에게 적용된 법률은 보안관찰법 위반등이었으나 실상은 당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에서 그가 수사기관에 맞서 끝까지 강기훈 씨의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겹겹이 경찰병력으로 둘러싸인 명동성당에 강 씨와 남아 검찰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강 씨가 분신자 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그의 자살을 사주하였다고 잘못 믿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들을 상대로 강 씨의 무고함을 대변해 왔다. 결국 강 씨는 자진 출두하여 구속되었고 그 또한 같은 날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해 여름에 시작하여 쌀쌀한 늦가을까지 계속된 그의 접견에서 우리는 주로 김기설 씨가 남긴 편지 자료를 같이 검토하는 등으로 재판 준비를 하였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가 그무렵 같은 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여러 재소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자주 언급하던 것이 기억난다. 장장 2천4백여쪽에 3권으로 출판된 「유서사건 총자료집」은 그가 성동구치소에서 출감된 이후 접점을 가지고 펴낸 것이다(요즘 잘 팔리는 책과는 달리 인쇄비를 아끼기 위하여 여백을 없애고 한면을 반으로 나눈 뒤 읽는데도 눈이 아프도록 작은 활자를 촘촘히 배열되어 있다). 거기에는 수사기록과 공판 기록을 비롯하여 각종 신문, 잡지 기

사, 편지 감정에 관한 관련 문현 및 인권단체들의 성명서 등 유서사건에 관한 모든 국내외의 자료들이 집대성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책으로는 처음 펴낸 제대로 된 사건 기록이다. 지금도 그 책을 열면 거기엔 그의 비타협적이고 치열한 진실에의 열정이 두꺼운 책 냄새와 함께 다가온다.

장안동 대공분실 면회실에서 우리는 그가 조사받은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인권하루소식」 1천호가 나오는 날 여기서 지내며 자축하게 되었으니 이걸 행운이라고 해야 할까



요 허허... 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몇해 전 「인권하루소식」이 발간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무렵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였던 일이 생각났다. 당시 미국무부는 연례적으로 작성하는 한국관련 인권보고서에 참고로 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공안사건의 변론에 관여한 한국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다. 미국대사관의 담당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렵의 중요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즉 말해 주었는데 그의 파악이 비교적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함을 알고 놀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책상위에 놓여 있던 「인권하루소식」을 들어 보였다.

요즘 검찰이 주도하여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봉쇄를 목적으로 국회에

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금년 초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한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적극 시행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인권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번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은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서대표의 경우 이와 같은 영장실질심사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변호인들의 기대와 달리 법원은 서대표에 대한 심문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1월 8일 오전 11시 20분 서부지원에서 그 심리가 있었다. 재판은 1시간 남짓 후에 끝났다. 서대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증거가 인멸될 여지가 없고, 도망가기는 커녕 사랑방의 대표로서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진술하였으나, 석방청구는 기각되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la.net • http://www.interpla.net/~rights

1997년 11월 19 일(수)

제 10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2백여 명이 관람한 속에 〈레드헌트〉를 상영했다. 또 20~21일 군산 오룡동 성당에서 열리는 군산 인권영화제에서도 〈레드헌트〉를 상영할 예정이다.

##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촉구

공대위,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lt;레드헌트&gt;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레드헌트〉 상영을 문제삼아 지난 5

일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가 구속된 이후 지방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초 〈레드헌트〉 상영 중 단협박에서 시작된 당국의 압력은 인권영화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별다른 마찰없이 상영이 끝난 수원, 안양지역에서 관할구청 및 경찰측이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고발조치 등을 취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 지역은 〈레드헌트〉를 상영하지 않았다.

전주 성당, 〈레드헌트〉 항의상영

한편 인권영화제와 관련한 탄압에 맞서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는 〈레드헌트〉 동시다발 상영등을 통한 국보법 어기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전주 서화동 성당(문규현 신부)에서 성당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발부등 경찰당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연법·음비법 위반 고발조치

수원시 권선구청장은 13일 권용택(수원 인권영화제 추진위원장) 씨 앞으로 "지난 6일부터 3일간 대한성공회 수원교동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상영한 것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이라며 법집행전 절차로 청문통보서를 보내왔다. 이 일로 18일 구청에 다녀온 송원찬(다산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씨에 따르면, 구청측은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게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안양시 만안구청은 인권영화제 상영장소인 카톨릭 안양근로자회관 층에 공연법 위반혐의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안양경찰서 층은 13일자로 이금연(카톨릭안양근로자회관 관장) 씨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에서는 〈레드헌트〉 상영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741-2407)

서기 그친 XXX년...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95. 1. 9 명동성당 농성) 쇄시술을 목에 걸고 절규를 토해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모습은 문민정부가 떠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현안이었다.

## 노동의 댓가 모멸과 착취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s)는 국내 인력난 해소와 값싼 노동력 공급을 위해 80년대 말부터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해 96년말에 이르러 21만명 선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과 영세기업 등에 고용되면서 어느덧 국내 노동시장의 주요 구성원 역할을 맡게 됐지만,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인간 이하의 모멸과 착취였다.

“매일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밖에서 열쇠가 체워진 공장안에서 일을 했고 일이 끝난 후에도 간신히 체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 잣은 구타와 폭행을 당하면서 일을 했지만 사장은 몇 달씩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이 손가락이 몇 개씩 잘리고 팔이 심하게 부러지고도 보상은 커녕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94. 1. 13 경실련 강당 농성장에서)

## 합법을 가장한 노동력 착취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식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연수생에 대한 낮은 임금은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취업 전선으로 내몰았고,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냈던 것이다.

## ‘국제사회 ‘인권탄압국’’ 지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으로 낙인찍히는 수모마저 겪고 있다. 95년 필리핀 마닐라의 한국대사관 앞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졌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놈 개새끼」라는 책이 불티나개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종교·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지속되는 등, 문민정부는 국내외의 압력에 직면했지만, 결국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재계 등의 로비와 입김에 밀려 인권보장책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97년 초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 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 막판에 철회한 것은 자본 편향의 정부에게서 충분히 예상되는 선택이었다.

##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96년 8월 남태평양의 원양어선에서는 끔찍한 선상반란 행위가 벌어졌다. 〈페스카마호〉 한국인 선원들에 의해 고깃밥만도 못한 처우와 학대를 당하던 조선족 동포 선원들이 11명의 목숨을 살해한 것이다. 반란주모자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 (38) 씨는 이렇게 전했다. “매일 육과 몽둥이, 쇠파이프 등으로 맞아 진저리가 났고, 하루에 21시간씩 작업을 하며 흐리멍텅한 정신상태로 지냈습니다. 나는 개라 불렸고, 아내는 암캐라 불렸습니다.”

〈페스카마호〉의 비극은 ‘반차별 및 강제노동 종식’이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을 도외시한 결과였다.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은 원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국내 노동자들과의 근거없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

터 풀어야 한다. 대선 이후 새롭게 등장할 차기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또 한번 무시한다면, 〈페스카마호〉의 비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지 못하리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 91. 11. 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시행
- ▷ 94년
- 1. 1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 (28일간 지속)
- 2. 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 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 95년
- 1. 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 (9일간 지속)
- 2. 3 노동부,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도 개선책 발표
- 2. 13 노동부, 고용허가제 마련 예정
- 9. 19 대법원, 불법취업 노동자 산재 재해 인정
- ▷ 96년
- 4. 26 국내 종교·사회단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 6. 10 명동성당 농성돌입 (37일간)
- 6. 13 천안전방 탈출 산업연수생 폭로 “한달임금 4만원, 공휴일노동 16시간”
- 7월 여야 3당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약속
- 10. 8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서 국회제출 (5만6천2백12명 서명)
- ▷ 97년
- 5. 22 경제장관 간담회, 고용허가제 도입 합의
- 7. 13 명동성당 단식농성 (6일간)
- 8. 26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도 퇴직금 지급” 판결
- 9. 9 경제장관 간담회의, 고용허가제 폐기,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골격 유지키로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net ·http://www.interpi.net/~rights

## 이번엔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19일 경찰청이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 회장 박재현(33) 씨를 포함한 관계자 11명을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한데 대해 ‘부민노청 침탈공대위’측은 이적단체 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박현재 씨등을 면회한 이들에 따르면 경찰측은 진보민중청년연합(의장 김봉태, 진보민청)의 강령과 그 산하 단체인 부민노청의 규약을 문제삼아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희순(29·임신 6개월, 박재현 씨 부인, 불구속입건) 씨를 제외한 연행자 대부분이 17일 오전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뒤부터 18일 오후 경찰서로 이감되기까지 거의 잠을 못자 자신이 진술한 내용도 기억

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 잠안재우기 수사

부민노청 공대위측은 “규약에는 부민노청이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있을뿐”이라며 “이적성 시비는 결국 모든 민주단체들의 존립 자체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보민청의 한 관계자도 “진보민청 강령은 ‘청년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민중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뿐, 진보민청은 물론 부민노청의 강령 및 규약등이 이적성을 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승리21 부천시지부는 “이번 구속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민주단체에 대한 공안탄압이다. 특히 박재현 씨가 대노단(97대선 노동청년사업단) 대표까지 맡는등 부민노청이 대선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시점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아 국민승리21의 대선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 대선활동 제동걸기

부민노청은 93년 창립한 단체로, 상급단체인 진보민청과 함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는데, 올 대선을 맞아 지난 1일 ‘97대선 노동청년사업단’(대노단)을 발족해 국민승리21에 결합했다. 7일에는 ‘남은 40일, 노동자 중심의 대선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백5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선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19일 오후 현재 박재현 씨를 비롯한

1997년 11월 20 일(목)  
제 10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1명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2차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와관련해 가족 및 대책위는 20일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이석범·한정화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 〈레드헌트〉 테입 압수 방침

군산 오룡동성당 경찰 검문 강화

〈레드헌트〉 상영을 포함해 20, 21일 이틀간 인권영화제 행사를 갖는 군산 영화제조직위는 19일 군산 인권영화제 탄압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영화제조직위에 따르면 경찰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9일 오전부터 상영장인 군산 오룡동성당 입구와 주변을 에워싸고 사복경찰을 배치해 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레드헌트〉 테입과 영화상영에 관련된 기자재를 압수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조직위는 성명을 통해 △오룡동성당 입구와 주변에 대한 검문중단과 경찰병력 철수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무죄석방 △표현의 자유보장과 검열제도 철폐 등을 요구했다.

## 인권영화제 민족예술상 수상

## “표현의 자유 신장 기여”

제2회 인권영화제가 민족예술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구중서)은 지난 15일 목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인권영화제는 △지역문화역량의 연대에 기여 △영상매체를 통해 인권문제를 홍보함으로써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 △표현의 자유 증진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lt;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만5년 인권정책 평가&gt; ⑥ 미군범죄

##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주한미군의 범죄는 문민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45년 미군의 진주 이후 50여 년간 끊임 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미군범죄가 본격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93년 발족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의 활동이 기여한 바가 크다.

## 미군범죄 하루평균 2건 발생

지난 10월 운동본부가 폐낸 주한미군 범죄백서에 따르면, 45년 이후 발생한 미군범죄는 무려 10만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93년 이후 96년 6월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2천2백93건으로 하루평균 1.8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군범죄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무수한 미군범죄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음에 따라 범죄가 계속 양산된다는 사실에 있다.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앞서 언급한 2천2백93건의 미군범죄 가운데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고작 2%에 불과하다(일본의 경우 95년도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를 30% 수준).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 한미행정협정(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SOFA)에 의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2조 혐사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미군군속이나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저벌할 수 없다'(1항) '한국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은 전속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다'(2항)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군도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7항)며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내 땅 아닌 내 땅 미군공여지  
미군에 의한 인권침해는 단순 폭행이나 강력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96년 동두천 쇠목마을 투쟁을 통해 부각된 미군공여지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현안이었다. 공여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의 사용권이 보장된 땅으로서, 여

관의 설치△미군 수감시설의 확충 및 재조정△피해자 손해배상절차 간소화 및 손해배상 청구 확대△미군 사병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한미양국간의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는 일이다.

오만한 가해자, 조아리는 피해자  
95년 오키나와 주일미군에 의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미국은 '주일미군 반성의 날'을 선포하고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국민들에게 사과를 표시했다.

반면, 95년 미군의 충무로 난동사건 당시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국민들은 미군범죄가 견갑을 수 없게 된 것처럼 유도되고 있으며, 문제는 미군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무책임한 언론이 격앙된 국민들에게 특유의 선정적인 방식으로 이를 묘사하여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데 있다."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면서도 한껏 조아리기만 하는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미군범죄의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미군범죄 주요사건

- 존 병장의 김국혜(53) 씨 성폭행 사건(93. 5. 29) - 존 병장, 95년 1월 형 확정으로 천안교도소 수감됐으나, 95년 8·15특사로 석방
- 더프와 웹 병사의 한창열 씨 택시 강도 사건(93. 12. 16)
- 용산 미군현병 4명의 정양환 씨 강제연행 사건(94. 1. 28)
- 미군속 대니엘의 윤현아 씨 성폭행 사건(94. 4. 9-5. 1. 9)
- 용산 미군현병대의 세 모녀 강금폭행 사건(94. 10. 25)
- 동두천 미군 5명의 이영직 씨 집단폭행 사건(94. 10. 17)
-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난동 사건(95. 5. 19)
- 실형 선고받은 미군속 케이리, 감시소홀 틈타 미국으로 도주(95. 6. 9)
- 벤넷 이병의 천금숙 씨 강간치상 사건(95. 11. 29)
- 미군속 헨리의 강운경 씨 살해 사건(96. 1. 18)
- 윌리암스 일병의 애바다농아원생 성추행 사건(96. 6. 10)
- 뮤니크 이병의 이기순 씨 살해 사건(96. 9. 7)
- 흥이대생 조종필 씨 살해 사건(97. 4. 3)
- 차니 병사의 이현주 어린이 성추행 사건(97. 5. 31)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apia.net · http://www.interapia.net/~rights

1997년 11월 21 일(금)

제 10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통일을 바라는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안기부가 이번 사건을 공안정국조성의 계기로 악용해 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사법부가 국가기밀누설(간첩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린 점에 불만을 표시하며, "간첩에 대한 법해석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향후 공안수사의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안기부는 "부부간첩을 신고한 정대연(울산연합 집행위원장)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등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 씨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검토했음을 드러냈다. 안기부는 또 "정 씨의 신고는 그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힌 후 전국연합과 울산연합측의 강한 비난을 받았다. 전국연합 등은 "정 씨의 기자회견을 매도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북풍, '입조심·몸조심' 경고  
간첩사건 빌미 언론·진보활동 위축 우려

예상하던 북풍이 불어왔다.  
안기부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부부간첩' 사건과 '고청간첩 고영복, 심정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기부는 두 가지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부부간첩'의 국내활동과 관련해 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 및 동향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기부는 수사발표에 앞서 진보적 지식인이나 재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공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첨신 안기부 대공담당특보는 "일부 특정신문과 잡지가 북한의 대남공작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정신문은 앙심수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을 광고로 계재하는 등 국민의 건전한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고, 무분별한 대북 동정심을 부추기고 있다"며 잇따라 진보언론에 시위를 겨누었다. 안기부가 지목한 언론은 〈한겨례신문〉 월간 〈밀〉 〈길〉 등과 전국연합, 민족회의, 한청협 등 재야사회단체의 기관지들이다. 또한 '부부간첩' 사건에 대한 엘바고(보도통제)를 깨뜨린 〈시사저널〉을 겨냥한 듯 "일부 언론이 간첩검거 사실을 미리 보도함으로써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안기부는 또 "광범위한 좌익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주장 아래 "1천5백명

서준식 대표 면회·편지 가능합니다.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치소 수감번호 3444(152-081)
- 면회를 원하는 분은 사랑방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741-5363)



##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임기내에 실천했다. 하지만 이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보다는 폭발적으로 발생되어 온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여성·사회단체의 노력이 끌어낸 결과였다. 특별법과 처벌법의 제·개정을 통해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법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결국 문민정부 아래서의 여성들의 승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여성 인권운동의 승리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란 말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갖지 못했다. 강간, 아동성학대, 아내구타, 성희롱 등은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가정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권인숙 씨, 서울대 조교 우희정 씨의 폭로 등을 거치면서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여성운동단체 등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점, 전통적으로 단단했던 가족구조가 변화를 겪고 있는 점과 개인의 문제들을 사회구조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확산된 것 등에 힘입은 바도 크다.

### 80년 대 이후 사회문제로 인식

93년 제정된 특별법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업무상의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겨져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후 성폭력에 대한 시민, 사법부 및 경찰 등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96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최병학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우산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동을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며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3월 28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권성부장판사)가 강간을 모면하려고 가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흥 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

반면, 교수에 의한 성희롱이라는 전대미문의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대 우희정 씨 사건이 95년 7월 25일 항소심에서 우조교의 폐소로 판결난 것은 성폭력방지운동을 벌이던 각계에 충격과 실망, 분노를 안겨주었다. 또한 피해자 고소율이 제정 이전 17.0%에서 제정 이후 17.7%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나지 않는 등 특별법의 많은 미비점들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제정과 동시에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표 참조)

### 미완으로 출발한 특별법

결국 여성단체 등의 계속적인 노력과 투쟁은 올해의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특별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과 친고죄 폐지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 까지 확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가능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피해자

### 피해유형별 전체 상담 중 고소한 비율

성폭력특별법 제정 전	피해유형	성폭력특별법 제정 후
15.1%	강간	19.5%
52.8%	윤간	23.5%
53.3%	강간미수	26.2%
13.6%	일반성추행	14.5%
4.8%	언어 추행	6.5%

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해 여성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되기도보다는 정조의 관점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문제로 가두게 된 점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 인식전환 등 속제로

한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각계의 요구도 커다란 성과를 얻어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처벌법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피해자가 요구할 때 경찰관 등이 긴급출동을 해야 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혐오처벌이 가능도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사회봉사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계의 요구를 1백% 가까이 수용한 선진적인 것이었다.

### 선진적인 가정폭력 처벌법 마련

여성을 비롯한 각계의 노력이 특별법과 처벌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다.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실효성있는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처벌법 또한 입법 정신에 걸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 각계의 감시와 감독도 더욱 요청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1997년 11월 22 일(토)

제 10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행됐다.

한편, 경찰은 성당 진입로에 전투경찰을 배치하고 사복형사 30여 명을 동원했으나, 별다른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 언론노련 민주언론상 특별상 날치기법 철회 위한 통신지원단

올해로 7회를 맞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민주언론상 대상이 〈한겨레신문〉 김현철 씨 비리 취재팀과 노동악법 철회를 위한 방송총파업을 이끈 방송사노조위원장단에게 돌아갔다. 또한 특별상은 총파업 당시 공정한 보도에 힘쓴 마산 MBC 라디오광장 임혜숙 PD와 통신공간에서 뛰어나며 속보를 전한 '노동악법, 안기부법 전면 철회를 위한 통신지원단'에게 각각 수여되었다.

통신지원단 단장 홍석만(27·지식인연대 간사) 씨는 "국내 통신공간에서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연대 차원에서 국내문제를 정확·신속하게 알려낸 것을 높게 평가한 듯 싶다"며 기쁨을 표시했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지난 17일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끝으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를 위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당국의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디큐멘터리 〈레드헌트〉가 군산에서

### 11월 구독료 납부하셨나요?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구독료만으로 운영됩니다. 자료용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은행에 비치된 자료용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로번호: 7618848

21일 낮 12시 종로2가 YMCA 앞에서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회」 소속 단체 회원 20여 명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서명 및 홍보작업을 벌였다. 서명작업은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공동대회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과 함께 전자주민카드 빌금거부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대회는 △후진적인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불필요하게 등초본을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인기부, 경찰청등 공안망의 정보파일 공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 &lt;인권하루소식&gt; 전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gt; ⑥ 신매카시즘

##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20일, 안기부는 울산부부간첩사건과 서울대 고영복 고정간첩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간첩사건은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안기부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계속되는 간첩수사로 인해 또 다시 매카시 풍운이 일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안기부의 발표 속에 2백여 명 내사, 1천 5백명의 명단 등이 그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진보·친북이라는 등식을 강조함으로써 그런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매카시즘은 50년대 미국 정계를 강타했던 초보수주의였다. 매카시즘의 특징은 도그마한 이데올로기로 공포정치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성이나 비판과 토론이 들어설 자리를 잃는다. 한국 현대사는 바로 매카시즘의 극대화를 통한 독재권력의 안정화의 역사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빨갱이' 이란 말에는 어떤 겸증도 필요없었다. 국가보안법은 이 '빨갱이'를 권력과 공안기관의 의도대로 손쉽게 제조해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왔다.

## '주사파'라는 가공할 상징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매카시즘은 일단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다. 93년 3월에 단행된 출소 장기수 이인모씨의 북송은 그야말로 '문민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통한 지배를 종식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기대를 갖게 했다. 그해 12월에는 안기부법이 개정되어 그런 기대는 헛된 것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은 인지했을 것이다. 통계로 보더라도 91년 구속 양심수는 1천3백

## 서준식 대표 면회·편지 가능합니다.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치소 수감번호 3444(152-081)  
• 입장을 듣는 데는 사랑방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741-5363)

56명, 92년에는 1천1백45명이었던 것에 비해 93년에는 총 1백95명으로 거의 1/6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94년부터 이런 기대는 쉽게 허물어졌다. 권력의 뒷켠으로 물려나 있던 보수세력은 북한 밭목공 사건, 한총련의 정권 탄도선언, 전기협 노동자들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그 터전을 뒤더니 김일성 주석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매카시즘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따라서 양심수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더니 급기야 96년에는 이전의 정권 때보다도 월씬 넘어서게 되었다.

하지 않는 도그마된 이데올로기로서의 신매카시즘의 정체를 잘 보여준다.

이런 극단적인 논리에 대한 비판은 주사파를 두둔하는 것으로 매도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포와 첨목의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런 신매카시즘의 등장과 발전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공안세력은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였다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따라서 양심수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더니 급기야 96년에는 이전의 정권 때보다도 월씬 넘어서게 되었다.

## 검찰 공안부가 주도권 장악

두 번째의 특징은 이전의 정권에서는 안기부가 공안세력의 중심을 자처해왔으나, 이제는 검찰(대검 공안부)가 주도권을 장악하여 검찰 독재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점이다.

셋째, 신매카시즘은 언론에 의해 다분히 주도되고 있는 점이다. 과거에는 공안기관의 주문(보도지침)에 따라 수동적인 보도로 일관했다면, 현정권에서는 독자적인 자신의 논리를 갖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몰아가면서 신매카시즘의 선봉에 언론이 서왔다. 매시기마다 <조선일보> 등의 선동으로 매카시즘의 분위기는 조성되기 마련이었다.

넷째, 과거의 활동을 문제삼아 구속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종종 무죄판결도 나오게 되었다.

## "너는 누구의 편이냐?"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본질적으로 갖는 냉전적 흑백논리를 혜택하지 못하는 한, 신매카시즘은 언제나 부활할 수 있음을 현 정권에서 보았다. 40년 전 미국에서 종언을 고한 매카시즘은 아직도 "누구의 편이냐"는 물음에 움츠려드는 이 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가둬두고 있다.

## 94년부터 전개된 신공안정국

95년 안기부는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으로 전국연합 박충렬 씨를 20일간 고문수사를 벌였지만, 1심에서 무죄선고가 판결이 내려졌다. 96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의 연행자를 낸 연세대 사태와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사회분위기를 초보수화로 이끌더니 급기야는 그에 말 노동법과 함께 개악된 안기부법을 날치기해 버리게 된다. 97년에 들어와 4월에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가 대검 공안부에 의해 발족하고, 이후 한총련 출범식을 빌미로 대대적인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검거작전으로 이어진다.

이런 일련의 신매카시즘의 과정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의해 선도되고 뒷받침되었다.

"서울 도심을 쑥대밭으로 만든 난동 배들은 본질에 있어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조선노동당' 재남 행동대원들이자 김정일의 충실한 하수인들이지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다."

(조선일보, 96년 8월 16일자 사설)  
위와 같은 논조는 이미 비판을 허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la.net • http://www.interpla.net/~rights

1997년 11월 25 일(화)

제 10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95년 12월 서울지법 유원석 판사와 96년 2월 서울지법 정혜창 판사는 각각 박충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접견불허 처분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막은 한층 얹어졌으며, 이에 따라 수사초기 단계의 변호인 접견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거부행위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각성이 요구된다.

## .....오늘의 주요 금지

• 민경우/이천재(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이종린/나창순(국보법 친양·고무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2면으로 계속

##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도 축소에 앞장서 피의자 인권을 후퇴시키더니, 이번엔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새벽 연행된 서울대 정병도(총학생회장 당선자) 씨와 배병화(부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김도형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경 관악경찰서를 방문, 연행된 서울대생과의 접견을 요구했지만, 경찰서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요구하며 접견을 불허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피의자 면접권을 설명하며 재차 접견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91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한주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백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법원 "수사기관 접견 불허는 위법"  
이번 사건은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

&lt;판례&gt;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 판결요지: 변호인의 피의자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당사자: 원고- 김한주, 피고- 대한민국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2백만원 및 이에 대한 1991년 4월 30일부터 1991년 9월 19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판단: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변호인의 접견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위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 즉 현행법상 행형법 제62조,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바... (증례)... 피고는 공무원인 박정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사 이재철

## 서준식 대표 연락처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치소 수감번호 3444(152-081)  
• 면회를 원하는 분은 사랑방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741-5363)

## 〈박노해 문화제를 다녀와서〉

### 경찰 방해공작 불구 '희망' 확인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의 박노해문화제가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한양대학교 등이 주최한 박노해문화제는 원래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압력으로 무산되고, 학교측이 그나마 노천극장을 허가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사당일 겨울을 재촉하는 바까지 내려 주최측조차도 행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했다.

이런저런 걱정을 뒤로하며 행사 1시간 전에 도착한 한양대학교는 정문부터 어수선했다. 사전에 행사를 봉쇄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밝히지 않은 성동경찰서에서 전투경찰들을 동원해 겹겹이 정문을 막고 출입을 통제했다. 교문 앞에는 행사관람을 위해 교내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짹을 지어 응성거리고 있었고, 교문 안쪽에서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행사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주최측 관계자는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행사 전날 광고를 통해 행사가 무산되었음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이 체육관을 빌려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말을 해 예정대로 준비했다'며 경찰측의 행태에 분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인권위 오창익 사무국장은 강행의 뜻을 밝혔고, 검문을 끊고 1천여 명의 관중들이 공연장을 메웠다. 또한 일부 관중들은 안지환, 할리퀸, 리아, 꽃다지 등의 출연가수들이 노래를 시작할 때마다 우산도 쓰지 않고 열광했으며, 가수들도 문화 공연조차 막는 현실에 대해 성토를 했다. 행사 끝무렵, 박노해 씨 부인 김진주 씨는 "양심수는 있다. 박노해가 있고 백태웅 씨가 있고 서준식 씨도 있다"고 외쳤으며, 1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큰 소리로 화답해 공연장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공연은 여러 가지 여건상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출연진 순서가 뒤틀리거나 미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제를 지켜낸 1천여 명의 관람객들은 '결국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이날의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쁨 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 인권의 주요 경과.....

☞ 1면에서 계속

- 전행관의 1(기차교통방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 김명례의 2(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 유덕상의 5(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이용석(국보법 친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속행
- 이경우(국보법) 오후2시 11단독 526호

## 주/간/인/권/흐/름

(97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 ◆ 17일(월)

국회,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빠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95년 기준)은 3억5300만t으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20억3800만t의 1.6% 차지(세계 12위 수준)/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안두희(김구 선생 암살범) 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 씨에게 징역3년 선고한 원심확정

### ◆ 18일(화)

영장실질심사제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 국회, 일본 전범의 국내입국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서울지하철공사노조, 최근 빈발한 지하철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공사, 시민단체 노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대책기구' 구성추진/덕성여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3명, 관선의사 과견 통한 학원정상화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 소속 농민 2만여명,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전국농민대회 열고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가부채 해결' 등 촉구/ 안기부, 한총련 대표로 쿠바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해 북한 대표들을 만난 혐의(국보법 위반)로 조응주(23·여·서강대 신방4) 씨 구속

### ◆ 19일(수)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지침이 11월말까지 마련되지 않을 경우 12월 2일부터 총파업 돌입 방침/경찰, 병력을 한양대병원에 투입해 5일째 농성중인 이연아 노조위원장등 1백16명 연행

### ◆ 20일(목)

안기부, 고정간접으로 활동해온 혐의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69) 씨와 서울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소장 심정웅(55) 씨 등 4명 구속/이라크가 러시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유엔 무기사찰단 즉각 복귀에 동의함에 따라 3주만에 이라크 사태 평화적 해결/오스트레일리아에 본부를 둔 동티모르 분리독립운동단체, 인도네시아 군인들에 의한 끔찍한 학살현장을 담은 사진 공개

### ◆ 21일(금)

경제협력개발기구,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하기 위한 뇌물방지협약 최종타결/내년 3월 송파구에 국내 최초로 장애인 전용목욕탕 개업/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희 부장판사),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1년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시민에게 무죄선고

### ◆ 22일(토)

관악경찰서, 새벽 4시경 서울대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인 정병도 씨와 배병화 씨를 한총련 미탈퇴 혐의(국보법 위반)로 연행한데 이어,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막아 물의 빚어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표현의 자유

###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최근 관객 1백만을 동원, 흥행에 성공한 영화 〈접속〉은 남녀간의 사랑을 컴퓨터 통신이란 매체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비결은 진부한 사랑애기를 사이버 공간이란 특이한 소재로 다가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불과 4·5년동안 우리사회는 '컴퓨터 통신'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컴퓨터 통신으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장미빛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환상을 동시에 꿈꾼다. 그러나 감시와 통제가 도사리고 있는 사회에서 장미빛 미래는 그저 환상일뿐 '검열'의 칼날은 언제든지 당신의 존재를 소리소문없이 제거할 수 있다.

#### 장미빛 미래 대신 감시와 통제

통신공간에서 검열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9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검열을 집행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아이디를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데, 이때 광범위한 사전·사후 검열이 진행된다.

최근에는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어 어수선했던 97년 1월 11일 '통신보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가 발표되었다. 시행령 16조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을 제한조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신연대, 민변 등 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 통신보안법 활개

통신공간에서 무자비한 가위질은 최근들어 더욱 심각하다. 97년 국정감사

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컴퓨터통신 아이디(ID) 사용정지와 폐쇄건수는 3천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치 2천4백13건보다 많은 것이다. 업체별로는 테이콤이 1천8백38명, 나우콤이 6백23명, 한국피시통신이 3백59명의 아이디를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정지시켰고 삼성에스디에스는 2백6명의 아이디를 폐쇄했다.

#### 통제에 길들여지는 표현의 자유

국가검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통제의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장여경, 통신연대)가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4개 컴퓨터통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6%

가 '자기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검열은 결국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스스로 제한하게 한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93년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씨 사건(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등 조직유인물 게제)이나 94년 진상호 씨 사건(공산

당 선언 게제), 96년 윤석진 씨 사건(강릉잠수함 무장공비 관련 글 게제) 등을 통해서 볼 때, 결국 공안당국이 의도하는 것은 통신공간에서 '자체검열'이라 할 수 있다.

#### 통신기본권 지키기 운동 활발

그러나, 통신공간에서 통신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96년 7월부터 통신연대는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공간에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6년 한국을 방문하여, 인권상황을 조사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시안 씨는 한국의 검열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행정적 간섭을 제한하고, 특히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전제약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절차를 공적인 법절차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

## 주요 통신탄압 일지

▷ 93년 12월 7일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 사노맹 등 조직 유인물 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 - 구속, 유죄

▷ 94년 현대철학동우회 진상호 - 도서 『붉은산 검은피』 게제 및 공산당선언 게제- 1심 유죄, 2심 무죄

▷ 96년 4월 총선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적용, 통신 이용자 2명 구속, 18명 불구속 수사

▷ 96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북한에 관한 캐나다 홈페이지 국내 접속 차단

▷ 96년 8월 나우누리 한총련 CUG 폐쇄

▷ 96년 9월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게시한 통신 이용자 33명 불구속 수사,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글 게재한 윤석진 씨 구속, 무죄 판결

▷ 97년 5, 6월 정보통신부,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반 혐의로 전혜투 등 단체 아이디 및 일반자료 이용자 아이디를 포함하여 최소 61개의 아이디와 몇백 건의 게시물 집단 삭제

▷ 97년 10월 대선에 관해 토론한 통신인 3명,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인하대, 전국순회상영 첫발

경찰측 압력 ... <레드헌트> 상영신청 쇄도

<레드헌트> 전국순회상영의 막이 올랐다. 동시에 당국의 탄압도 재개되었다. <레드헌트>는 아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인천 인하대에서는 전투경찰 4개 중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사복 형사 수십명이 교내에 배치되는 산엄한 분위기 속에 <레드헌트>가 상영됐다. 예상대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한 당국의 방침은 강경대응이었다. 경찰 측은 인하대 당국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학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렸고, 학교측도 "영화상영시 전기를 끊어버리고, 경찰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하겠다"고 학생회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3시 학생회관에서 상영예정이던 영화는 오후 5시30분 6호관 126호 강의실로 옮겨 상영됐다.

경찰, 상영 빌미로 구속 협박

또한 경찰은 이날 행사 주관자도 아닌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을 가하는 치출한 모습마저 보였다. <레드헌트> 전국순회상영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등)가 주관하고 있으며, 인하대 생들은 상영공간을 제공해 준 것뿐이었지만, 경찰은 이를 빌미로 총학생회 간부를 구속하겠다는 압력까지 가한 것이다. 인하대 부총학생회장 박정용(경영학부 4년) 씨에 따르면,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레드헌트>를 상영하면 영장을 집행하고, 상영을 취소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을 전달했다.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70여 명 정도이며, 영화관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

## 만화사랑방



1997년 11월 26 일(수)

제 10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지뢰제거, 통일의 출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지뢰회의)는 25일 낮 12시 광화문빌딩 앞에서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집회를 가졌다.

지난 6일 지뢰회의가 출범한 뒤 처음 갖은 이날 집회에는 지뢰 피해자 김종식(69, 파주군 농민) 씨 등 2명이 참가해 지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지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정현(지뢰회의 공동대표) 신부는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남북통일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뢰회의는 조미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김창수(통일맞이 연구원) 씨를 12월 1일부터 열리는 캐나다 오타와 대인지뢰금지협약 회의에 파견해 한국의 지뢰 상황을 알리고 국제적 지원과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lt;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gt; (10) 사법개혁

##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도입된 제도인데, 1년만에 후퇴함으로써 문민정부의 사법개혁은 꽂봉 오리도 맷기 전에 시들어 버렸다.

### 세추위가 벌인 사법개혁

한 나라의 인권보장 수준은 그 나라의 사법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점에서 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 영역의 개혁에 빌맞추어 국민여론의 요구와 함께 시작된 사법개혁 논의는 문민정부에 대한 장미빛 환상을 갖게 했다.

93년 1월초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 개선안' 발표로 시작된 사법부의 개혁 논의는 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년 내내 떠들썩했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들어서면서부터 논의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다. 결국 93년부터 시작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가시적 결과라 하면 법조인의 증원을 위해 사법시험합격자수를 5백명으로 증원한 것뿐이다(97년 6백명). 이렇듯 거창한 구호와 함께 시작한 문민정부의 사법개혁 움직임은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여전  
시끌벅적한 사법개혁 움직임과는 달

### 폭행·감금·고문 등 고소·고발 사건 접수처리 현황

(97년 국감 자료- 내무위)

년도	접수(건)	처리(건)						수사 중
		기소	기소 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기타	
93. 1. 1 - 96. 8. 31	609	15	41	432	46	32	35	8
96. 9. 1 - 97. 8. 31	262	3	36	177	-	11	17	18

리는 등 임의동행형식의 강제연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이후 수사과정의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판결이 93년 한해 잇따라 내려졌다. 또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구속시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한 판결이 내려져, 수사기관의 불법수사관행에 의해 사문화되어버린 형사소송법 규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94년초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정모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했고, 이를 계기로 경찰은 전국 경찰관에 소위 미란다 카드를 배포기도 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송제기와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은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가져오게 된다. 살아나다시피 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체포영장제와 체포적부심사제를 도입하고 긴급구속제를 폐지하는 대신 긴급체포제도를 신설하는 등 구속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 당직변호사제도 실시

또한 개별적 사건에 있어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내려졌으며,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그 적용범위를 엄격화하고자 하는 판결과 위헌제청이 있었다. 95년 1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박태범 부장판사)의 국보법 7조 1·3·5항 위헌심판 제청(96년 현재 합헌 결정), 같은해 4월 이창복 전 국연합 의장관련 국보법 7조 5항 무죄 선고(96년 대법원 파기환송), 96년 3월 서울지법 형사3단독(박시환 판사) 국보법 19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등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어 왔다.

끝으로 93년 5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당직변호사제도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 위협… 경기도교육청 방관

평택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오늘로 만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단의 강제노동 및 학대에 견디다 못한 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한 이래,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에바다 사태는 원점을 땜돌고 있다.

현재 에바다 농아원생 20명은 농아원에서 3km 남짓 떨어져 위치한 임시거처(해아래집)에서 숙식과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아학교 교사 12명과 통학생 18명도 함께하고 있다. 1년 가까이 잠기능성을 벌여온 에바다 원생들이 학교로 복귀했던 것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평택시청 등 관할관청이 시정조치를 약속한 뒤였다. 그러나 복귀 열흘만인 10월 28일 그동안 농성에 반대해온 원생 일부가 교사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농성에 참가했던 원생들이 교내에서 협박과 폭행을 당하면서 농성은 재개되었다.

재단측은 “원생들이 스스로 내쫓은 것이라 밀릴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쫓긴 농성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권오일(학생주임) 교사는 “학교 복귀후 27일까지 정상적으로 학생들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27일 교장과 재단측에 내년도 위탁교육을 신청하라는 이야기를 하고난 뒤, 갑자기 28일 오전 출근을 저지당했다”며 “재단측이 일부 정신지체아 또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동원해 우리를 내몬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사의 설명에 따르면, 재단측이 학내 정상화가 안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내년도 위탁교육을 신청하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임여교사를 해고하려는 의도

라는 것이다. 물론, 해고대상자는 1년간 농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들이다.

재단, 국회 지적사항 전면 거부 농아원측은 또 현 이사진의 전면개편과 관선이사 파견 등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또 지난 1년 사이 재단이사장과 일부 직원이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재단측 인사들이 재단 운영 전면에 나선 상황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학교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아이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그저 관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위헌재청은 지난해 7월 동두천 쇠목마을 공여지 분쟁과 관련, 김석규 씨 등이 제기한 ‘사용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김 씨측의 위헌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 와의 공판 안내 .....

박소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학의5부 404호 신건

김나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학의5부 404호 신건

박상은(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학의23부 319호 선고

- 서울 형사지법

###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목요집회

27일 오후 2-3시 탑골공원 정문 앞

민가협·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1997년 11월 27일(목)

제 10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화부모, 관련단체 인사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권 교사는 “교무실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오줌물을 뒤집어쓰는 등 지난 1년 동안 당한 고통은 상상도 못한다. 하지만, 전국의 수백 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에바다농아원을 지켜보고 있다. 4백만 장애인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싸움을 포기한다면, 장애인들은 희망을 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법원, 한미행협 위헌제청

미군공여지 사용문제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26일 서울 민사37단독 장상균 판사는 “미군공여지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날 위헌재청은 지난해 7월 동두천 쇠목마을 공여지 분쟁과 관련, 김석규 씨 등이 제기한 ‘사용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김 씨측의 위헌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 와의 공판 안내 .....

박소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학의5부 404호 신건

김나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학의5부 404호 신건

박상은(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학의23부 319호 선고

- 서울 형사지법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 국제인권조약

##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보호를 향유하며, 산업기술연수생은 강제노동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95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초 정부보고서 심의자리에서 허승 주제네바 대사가 한 말이다. <인권하루소식 95.5.17 참조>

위의 말대로 정부는 95년 1월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면서도 인권증진의 한 방면으로 이 조약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가입’을 통한 대내 외적 효과에만 신경을 쏟았을 뿐, 국제인권조약 가입을 통한 국내 인권상황 개선에 관심이 없었다.

우리사회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 그 방법의 하나는 우리의 법·제도를 국제인권기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는 대부분 국제인권조약에 가입을 했을 뿐, 그에 따른 국내법 개정 노력은 등한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ILO조약 중 비준국수가 1백개 이상되어 ‘노동인권조약’이라고 까지 불리는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105호(강제노동폐지 조약) 조약 등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94년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를 비롯해, 그해 6월 A구약 민간보고서 제출, 아동권리조약(95년 7월) 고문방지조약(96년 11월)에 대한 민간보고서 제출… 민간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냄으로써 ‘문민정부’의 반인권성을 알려내는 역할을 해냈으며, 이에따른 국제인권단체의 정부에 대한 압력은 다시 국내 인권운동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 돌아왔다.

96년 3월 제52차 유엔 인권위에서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마리스와 미 씨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보고서 체택은 그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개혁 조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대우 문제에 대해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보호를 향유하며, 산업기술연수생은 강제노동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노사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된 ‘국제노동기준에 맞춘 개혁조치’가 지난해 12월 26일 노동법 날치기 개악으로 이어진 데서 보듯이 정부에게 인권 신장을 위한 후속조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 국내 민간단체의 활약

반면 민간단체의 유엔 인권위 등 국제무대에서의 활동과 이를 통한 국내 인권개선의 노력은 높이 평가된다.

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를 기점으로 국내 13개 단체들은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한국 인권단체협의회’의 모태)를 구성, 국제무대에 첫발을 내딛는다. 특히 세계인권대회는 68년 테헤란대회 이후 25년만에 열린 것으로, 냉전시대 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소중한 장이었으며, 인권운동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갖게한 계기가 되었다.

94년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를 비롯해, 그해 6월 A구약 민간보고서 제출, 아동권리조약(95년 7월) 고문방지조약(96년 11월)에 대한 민간보고서 제출… 민간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냄으로써 ‘문민정부’의 반인권성을 알려내는 역할을 해냈으며, 이에따른 국제인권단체의 정부에 대한 압력은 다시 국내 인권운동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 돌아왔다.

96년 3월 제52차 유엔 인권위에서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마리스와 미 씨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보고서 체택은 그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회를 중심으로한 민간단체의 활약이 거둔 커다란 성과이다.

아울러 95년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95년 9월 북경 세계여성대회, 96년 6월 이스탄불 세계주거회의 등을 통해 국제연대의장을 넓혀 나갔다. 또 유엔 인권위 제소등 국제인권 기구에 국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92년 7월 손종규 씨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유엔 인권위에 제소했으며, 92년 8월 전노협 및 93년 10월 전노대가 노동관 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95년 12월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ILO에 제소하기도 했다.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정부 무반응 인권피해자 및 인권단체들의 제소와 더불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줄을 잊고 있다.

·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 93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 권고

· 93년 4월 유엔인권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장의규·김성만·황대권 씨의 구금을 ‘불법구금’으로 결정

· 94년 9월 유엔인권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이근희·최진섭·황석영 씨 등의 구금을 ‘불법구금’으로 결정

· 96년 6월 ILO 집행이사회, 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 및 민주노총·전교조 등 합법화 등 권고

· 96년 11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정부초보 보고서 심의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권고

이렇듯 계속되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등을 내세우며 그 이행을 미루고 있다. 권고를 현실화시켜 우리의 제도와 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단체의 ‘감시와 펌’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interpic.net · E-mail:rights@interpic.net/~rights

##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27일 사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법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것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거의 가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의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안관찰법을 통한 인권 제한이 단순히 신고의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등 공안당국은 보안관찰대상자를 위법 혐의로 기소할 때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떠나, 대상자의 활동 자체를 문제삼아 왔다. 그리고 이는 보안관찰대상자의 표현·집회·여행·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침해로 나타났다.

형식적으로 신고 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로 활동 제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된 함세환(65)씨의 경우, 검찰은 “함 씨가 비전향출 소장기수들과 ‘회합’하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집회에서의 연설과 구호를 통

해 북한을 친양·고무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들어 그를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함 씨가 이같은 행위를 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행위 자체’였던 것이다.

또한 최근 구속된 서준식 씨의 경우, 검찰은 그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위법행위로 몰고 있다. 그러나 서 씨의 동태는 매일 매일 담당경찰관을 통해 날마다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 씨는 지난 8일 구속적부심에서 “담당경찰관의 전화나 방문시 숨김없이 모든 것을 알려 주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형식적으로 신고 여부를 문제삼은 듯 보이나, 그것은 서준식 씨를 처벌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이었다.

#### “보안관찰법은 이중처벌”

결국 “보안관찰법이 ‘최소한의 자유’만을 제한한다”는 현재의 판단은 명백한 오관이며 반인권적 결정이라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보안관찰법은 일반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한번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 현재의 판결에 앞서 서준식 씨는 △보안관찰처분을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내리도록 한 것이 삼권분

1997년 11월 28 일(금)

제 10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립원칙과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전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별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거, 가족상황,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헌법 제14, 17, 18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불법검문 피해 3백만원 배상”

한편, 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불법검문을 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경찰이 불법검문 개시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 아무개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판사는 “외관상으로도 장 씨의 가방 속에 흉기가 없음이 명백해 가방을 검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장 씨가 가방을 열 때까지 장 씨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소지품 검사를 강제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던 불법검문 관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드헌트〉 상영! 인권신장을 위한 한걸음입니다.**

■ 교회, 학교, 단체, 생산현장 등 어느 곳이든 신청하십시오.

■ 신청 및 연락은 인권운동사랑방(741-2407)

## 경찰, 문규현 신부 출석요구

성균관대 &lt;레드헌트&gt; 상영… 서울대는 무산

문규현 신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전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전주 서학동 성당(주임신부 문규현)에서 <레드헌트>가 상영된 것과 관련, 문 신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문의”를 이유로 27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문 신부는 이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경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신부는 서준식 씨 구속 이후,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된 첫 소환자이다.

한편 지난 20일 인하대 상영을 시작으로 <레드헌트> 순회상영에 돌입한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공동대표 이돈명 등)는 27일에도 성균관대와 서울 시흥동성당(주임신부 김승훈)에서 <레드헌트> 상영회를 가졌다.

이날 성균관대 상영에는 <레드헌트>를 제작한 조성봉 감독이 참석해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반면, 26일 서울대에서 예정됐던 <레드헌트> 상영은 경찰과 검찰의 압력에 의해 무산됐다. 서울대 영화동아리 관계자는 “25일 경찰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걸려왔고, 검찰에서도 압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 측에서도 <레드헌트> 상영시엔 장소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혀 부득이하게 상영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드헌트>를 제작하고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다른 작품들은 이날 서울대에서 별다른 무리없이 상영됐다.

뉴욕에 본부를 둔 케네디인권센터는 87년 김근태(현 국회의원) 씨에게로 버트케네디인권상을 수상한 단체로, 각국의 인권침해상황을 조사·공개하는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 서준식 석방 촉구 목요집회

&lt;레드헌트&gt; 조성봉 감독 참석

27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는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목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김동원(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집행위원장·영화감독) 김지영(서준식 씨 부인) 김해준(한국영화연구소 기획실장) 씨 등이 참가했다.

민변은 “검찰이 부부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를 흥보하기 위해 진행된 퍼포먼스에

는 조성봉(37·<레드헌트> 감독) 씨가 직접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집회를 마친 뒤 조 감독은 “영화를 만든 사람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감독은 그냥 놔두고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서준식 씨를 구속시킨 것 자체가 너무도 비상식적이다. 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경 보안2과는 지난 21, 25일 두 차례 조 감독 앞으로 출두요구서를 보냈는데, 조 감독은 현재 진행중인 작업을 끝내고 12월 초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과학서점 2명 구속기소

10월말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관매)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회과학서점 주인 4명 가운데 이재필(논장서점 사장), 신영균(서강인) 씨가 26일 기소되었다. 지난 4월 같은 건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나온 바 있는 김용운(장백서점) 씨는 검찰의 구속취소로 27일 새벽 석방됐다. 또 연대앞 ‘오늘의 책’ 전 사장 김봉환 씨는 이미 13일 보석결정을 받았다.

## ■ 행사와 동정

### □ 경제살리기 만민공동회

- 때: 11월 28일(금) 낮 12~1시
- 곳: 탑골공원 내
- 주최: 참여연대(☎ 723-5300)

### □ 전국연합 창립 6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 때: 12월 1일(월) 오후 6시
- 곳: 전국연합 사무실(☎ 921-4090)

### □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대회

- 때: 12월 1일(월) 오후 2~4시
- 곳: 가톨릭회관 7층
- 문의: 3673-3031~3

### □ '97 인권주간 기념 심포지엄

- 때: 12월 1일(월) 오후 7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주최: 천주교 인권위(☎ 777-0643)

###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때: 12월 3일 오후 4~8시
- 곳: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 문의: 521-5364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28일 기소됐다.

현재 정확한 공소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초 서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형법(현주간조물침입죄)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각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법적 용의 임의성 및 부당성 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서 씨에게 적용된 법률 가운데 음비법은 '사전심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포 등)을 적용시킨 것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같은 영화가 상영됐다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 시비와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 영화의 내용 자체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27일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광희 변호

### 서준식 대표 연락처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염동포구치소 수감번호 3444(152-081)
- 연회를 원하는 분은 사랑방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741-5363)

1997년 11월 29 일(토)

제 10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진 사실과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 왔다. 따라서 법정으로 옮겨진 〈레드헌트〉 공방과 각종 반인권 법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김영삼정부 인권상황평가 대한변협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함정호)는 오는 12월 2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에서 제49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행사로 김영삼정부 5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차병직(대한변협 공보위원회) 변호사가 주제발제를 하며, 경찰폭력의 피해자 이철용 씨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 새책소개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83년 창립이후 아내구타와 성폭력 등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꾸준히 도전해 온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연구총서 첫번째로 「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를 내놓았다.

이 책은 여성의 전화가 지난 87년 구타당해도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방 한 칸 짜리 쉼터를 마련한지 10년만의 결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목표하고 있는 바람직한 쉼터의 방향과 대안은 그동안 쉼터를 이용했던 여성들과 그들과 함께한 상담원, 사회복지사 등 많은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인숙, 김혜선, 신은주. 세 명의 연구진은 97년 현재 민간과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13개소에 지나지 않는 쉼터의 열악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에게 주어야 할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보는 아내구타 문제는 "결혼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라는 남성의 '자기' 여자에 대한 통제전략이 주요 동기이고, 주도적인 가해자는 남편이며, 그 폭력의 수위는 여성이 굴복할 때까지 상승·심화된다. 또한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유지된다는 면에서 '가부장적 테러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다양하나 그중 아내구타 문제를 다루는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는 위급할 때 긴급히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여성 자신이 길들여진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책은 쉼터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을 통해 쉼터의 방향과 대안을 찾고 있다.

(김인숙·김혜선·신은주 지음/나남펴냄/7천원)

## 〈인권하루소식〉 97년 11월분 총목차 (998-1018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998	11/1	1	삼미특수강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한국후꼬꾸 노조 재정사업/대한변협 노조 창립
		2·3	10월 총목차 (976-997호)
999	11/4	1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협력한 시각/주요 공관
		2	〈성명서〉 진흙탕싸움을 견어치워라(인권운동사랑방)/주간인권흐름(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3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장호순 교수)
1000	11/5	1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체포, "양심수는 있다"/기획소개-김영삼 문민정부 5년 인권정책 평가
		2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전해투 보금자리 마련 집들이/주요공관 안내/『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9차 공판 예정
		3	〈인권하루소식 1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걸어온 길
		4·5	〈인권하루소식 1천호 특집〉 독자가 바라본 인권하루소식①
		1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1001	11/6	1	한국타이어 성폭행 사건 미제로- 검찰, 정황조사 외면한 채 수사종결/〈현장스케치〉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 '인권의 밤'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①삶의 질
		3·4	〈인권하루소식 1천호 특집〉 독자가 바라본 인권하루소식②
1002	11/7	1	서울대교수 고정간첩 혐의, 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서준식 씨 수사 방향선회, 북한인권 토론파료·해외체류 문제삼아
		2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민주노총·경실련, "서준식 씨 구속은 대선용 탄압"/ 수원 인권영화제 〈레드헌트〉 제외한 채 개막
호외2	11/7	1	〈서준식 대표 수사속보 2〉 인권운동사랑방 활동, 규약, 조직 등 집중수사
호외3	11/8	1	〈서준식 대표 수사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1003	11/8	1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모란공원 열사추모비 건립/ 삼미특수강사태 국제 관심사로, 캐나다노조 포철에 항의서한/ 국민승리21, 양심수 석방 촉구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②대형참사
1004	11/11	1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대회 개막/ 민변·참여연대,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인터넷 서명운동, 서준식 씨 석방촉구
		2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주요공관/ 주간인권흐름(11월 3일부터 9일까지)
1005	11/12	1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사랑방 만평(영장실질심사)
		2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두산기계 박덕기 씨 사망 파장/ 출판·사상 탄압 대응 대책기구 발족
		3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③후퇴하는 주거권
1006	11/13	1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2	영장실질심사제 개정에 대한 검찰·법원 입장 비교
1007	11/14	1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전자주민카드·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불교 6개단체, 부부간첩 사건 공개수사 및 서준식 씨 석방 촉구/ 고려대 '청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유죄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④노동권

## 〈인권하루소식〉 97년 11월분 총목차 (998-1018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008	11/15	1	인권후퇴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 공대위 규탄집회/ 민가협, 양심장례식 차려
		2	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3	〈영장실질심사 관련 특별기고〉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문체규 안동대 교수)
호외	11/15	1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기습시위, 신한국당 총재 면담 요청
1009	11/18	1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 신청 등 정면대응"/ AI 사무부총장, 서 씨 구속은 정치적 의도"/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2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참가자 결의문 채택, "서준식 석방, 전자주민카드 도입 철회"/ 부천민주노동 청년회 10여명 긴급체포, 국보법상 이적단체 혐의/ 유가협 회장 배은심 씨 선출/ 주간인권흐름(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3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이석태 변호사)
1010	11/19	1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사랑방 만남(전자주민카드)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⑤외국인노동자
1011	11/20	1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레드헌트〉 테입 압수 방침, 군산오룡동 성당 경찰 검문 강화/ 인권영화제 민족예술상 수상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⑥미군범죄
1012	11/21	1	복종, '입조심·몸조심' 경고, 간첩사건 빌미 언론·진보활동 위축 우려/ 사랑방 만평(간첩사건)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⑦성폭력, 가정폭력
1013	11/22	1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촉구, 베를린영화제 등 〈레드헌트〉 상영타진/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날치기법 철회 통신지원단, 민주언론상 특별상 수상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⑧신패카시즘
1014	11/25	1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관례〉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주요 공관
		2	〈박노혜 문화제를 다녀와서〉 경찰 방해공작 불구 '희망' 확인/ 주간인권흐름(11월 17일부터 22일 까지)
		3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⑨통신, 표현의 자유
1015	11/26	1	인하대, 〈레드헌트〉 전국순회상영 첫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사랑방 만평(대인지뢰)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⑩사법개혁
1016	11/27	1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위협…경기교육청 방관/ 법원, 한미행협 위헌제청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⑪국제인권조약
1017	11/28	1	현재,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서울지법, "불법적 불심검문에 국가배상" 판결
		2	경찰, 문규현 신부 출석요구…〈레드헌트〉 성균관대 상영, 서울대는 무산/ "공안몰이 중단하라" 민변, 이장희 교수 영장기각 환영/ 캐네디인권센터, "서준식 석방, 국보법 폐지" 촉구/ 서준식 석방 촉구 목요집회, 〈레드헌트〉 조성봉 감독 참가/ 사회과학서점 2명 구속기소
1018	11/29	1	서준식 씨 기소/ 〈책소개〉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대한면협, 김영삼정부 인권상황 평가토론회
		2	11월분 총목차(998-1018호)

# 인권하루소식

## 97년 12월

### (제1019호 - 제1035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 히) · E-mail:rights@interapia.net · http://www.interapia.net/~rights

1997년 12월 2 일(화)

제 10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레드헌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로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날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주최로 〈레드헌트〉가 상영될 예정이던 인하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레드헌트〉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했지만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미 다른 곳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작품이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내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린 결정이었으며, 법리에 맞게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시 인하대 총학생회측에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상영취소 압력을 넣었으며, 부총학생회장인 박정용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흘리기도 했다. 박 씨는 “영화 상영 이후 지금 까지 영장발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분히 ‘협박용’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천지법의 결정은 공안당국의 〈레드헌트〉 이적성 시비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관

심을 끌고 있다.

###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

####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도시빈민 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주려는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창립을 준비온 도시빈민여성연합(위원장 현호월, 빈여연)이 1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3백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 현호월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빈여연 회원들은 지역단위 지회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을 극복하고 지역 정치 실현을 통해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빈여연은 △빈민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 △순환식 개발을 원칙으로 한 주거권, 생존권 실현 △생활협동사업을 통해 모범마을 만들기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의 복지를

여학생 성추행 사건 항고 기각

여연, “성폭력 비호 검찰 비판”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지은희 등 공동대표)은 지난 11월28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권력에 의한 96년 연세대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항고를 기각한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성명을 통해 “세계는 권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범죄를 막아내기는커녕 스스로 성폭행을 자행하기까지 하는 경찰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6년 11월 21일 여연과 피해여학생 7명 공동으로 당시 연세대사태 현장 진압경찰과 시위책임자, 박일룡 당시 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으며, 검찰은 올해 3월 20일 이를 기각한데 이어 항고마저 기각한 것이다.

### .....주요 공판 안내

#### ▶ 2일 (화)

-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 (범민련,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최애경 (고대 청년, 국보법)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권오혁 (한총련 및 선거사건, 국보법) 오후3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 이영두 (국보법) 오전 10시 11단독 526호 선고

#### ▶ 3일 (수)

- 김태윤 (서래스님, 국보법 금품수수 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신건
- 최인기/오경민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신건
- 함운경 (국보법 불고지죄) 오후3시 합의7부 423호 신건

#### ▶ 4일 (목)

- 김영복/박기동 (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서울고법 형사국

## <서준식을 옮아만 법률> ①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하루소식>은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한 현행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속에는 여전히 ‘사전심의’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이 담겨있다.

음비법 제17조(심의)는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항, 97.4.10 개정)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을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하거나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음비법 위헌법률 제청, 헌법재판소 계류증

이와 관련, 11월 6일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도 음비법 제17조와 25조(17조 위반시 별칙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열제도가 허용될 경우,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될 염려가 있다”며 “음비법 17조와 25조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위헌제청이 있은지 불과 1년만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한” 죄로 서준식 씨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편, 올해 4월 음비법이 새롭게 개정됐다. 심의기구를 기존의 심의기구를 공연윤리위원회(공윤)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로 대체한 것이다. 그러나 김기중 변호사는 “인사문제나 예산문제 등으로 볼 때, 공진협 역시 국가기관에 불과하다”며 “공진협의 심의는 국가기관의 검열이므로 당연히 위헌”이라고 잘라 말했다.

⇒ <공판> 1면에서 이어짐

- ▶ 5일(금)
  - 윤석진(국보법) 오후4시 합의5부 425호 변론재개
  - 이교관의 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1시 10단독 519호 속행

## 주/간/인/권/호/름 (97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 ◆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 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 ◆ 25일(화)

남양주시, 지난 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남양주 장학재단’ 설립/한국노동연 구원 발표, 전체 노동자의 10.3% (61만명)가 비정규직에 종사/보건복지부 의료보호급여기간을 내년부터 3백일로 증가/광주지법 제2형사부, 한총련 의장 강의원 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죄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한리중공업, 전체 임직원의 1/2인 3천명 감원키로/80년대말~90년대 초 신문·방송사 노조위원장, 언론노동조합연맹 간부 등 을 지난 언론사 간부 50여명 ‘새언론포럼’(가칭) 창립

### ◆ 26일(수)

여연,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동티모르 현지 여성들을 폭행·학살하는 사진에 국제사회에 공개된 것과 관련,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여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한국보고서’를 라티카 쿠마라 스와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삼성, 전 계열사의 조직을 30% 축소 등 초긴축 감량 경영 단행 결정/통계청 발표, 국민 10명 중 2.3명 꿀로 전 화폭력을 경험했고 1천가구당 주요범죄 피해 건수는 125.4 건/법무부, 12월부터 ‘사전석방준비제도’ 실시예정/서울지법 흥준표 영장전담 판사, 아동용 통일도서 <나는야 통일! 세대> 저자 이장희 교수와 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주 천재출판사)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민주노총,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범국민대책기구 구성 등 촉구/일본 도쿄 고등 재판소, 재일동포 정향균 씨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관리직 수협자격 인정과 2백만엔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원고승소 및 배상금 40만엔 지급 판결

### ◆ 27일(목)

전국민주태시노조연맹, ‘택시제도 개혁 및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전국 택시노동자 대국민선언대회’ 개최/보건복지부 발표, 올해 생활보호 대상인원 전체인구의 2.3%인 1백4만8천명으로 96년에 비해 10% 감소/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 경찰의 불심검문과 관련해 장 아무개씨가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백만원 지급 판결/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 ◆ 28일(금)

광주지법 장병우 영장전담 판사, 대학교재 <진실 인식과 논술방법>의 이적성을 인정해 박지동(58) 광주대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발부/정부, 98년 2월부터 택시운전사의 수납액에 근거한 월급제 본격 시행예정

### ◆ 29일(토)

검찰,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유흥준 교수, 신경림 시인 등의 글 삭제 요구

### ◆ 30일(일)

정부, 외국인근로자 연차적으로 대폭 감소예정

## 서준식은 출장중

### 차병직(변호사)

구속된 서준식 선생을 대신해 차병직 변호사께서 <인권시평>을 당분간 맡아 주십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차 변호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편집자주>

서준식은 지금 부재중이다. 그가 일정한 시간에 있어야 할 장소에 없다는 말이다. 아침이면 일어나 사랑방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점검하고, 계획에 따라 누구를 만나든지 강연을 하고, 일이 대충 마무리되면 집으로 돌아가 헤승이 공부도 빠주고 헤수와 장난도 쳐야한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어느 곳에도 없다. 그토록 애착을 갖고 있는 인권하루소식 1000호 발행 기념식장에서도 볼 수 없었고, 인권영화제 지방상영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놈의 인권칼럼(<인권>칼럼이 필요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도 그의 순서인데, 할 수 없이 광대신 닦격으로 내가 맡았다. 특히 간접사건 발표에 이어 공안기관에서 교수들의 저서와 논문에 이미 시비를 걸었고 학위논문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상검증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흥흉한데, 그는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그가 구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긴 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그가 단순히 <레드 헌트>라는 영화 때문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어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지금 다른 곳에 가서 그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인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상자는 처음에는 경찰과 대공분실 수사관들이었고, 지금은 담당검사와 검찰주사다. 일정에 따라 판사들이 그 다음 순서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한가로운 말장난이 아니다. 인권을 평생의 회두로 삼고자 작정한 그에게, 적어도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될 수사종사자들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법관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행태는 참을 수 없

는 고통인 것이다. 그래서 바쁜 중에도 잠시간을 할애하여 출장교육을 자처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오히려 인권운동가로서는 기쁨이다. 이 기회를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여 교정을 시도함으로써 하나님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며, 석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밖의 사람들에게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의 숨은 뜻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의 첫번째 교육은 압수수색에 관한 것이다. 지난 11월 4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하였다. 혐의 사실은 아직표현물 <레드 헌트>와 관련한 국가보안법위반 등이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혐의 자체가 그야말로 하찮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체포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이 사랑방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끝날 즈음인 오후 6시부터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가 없는 사이 수사관들은 책, 수첩, 녹음테이프, 세미나자료 등을 다량 거두어 갔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강제처분의 하나인 압수는 범행에 대한 증거방법으로 의미있는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다. 따라서 압수 대상은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수사관들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개연성이 없는 물건까지 이것 저것 들고 갔다. 그는 우선 그 점을 문제삼았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구술시험을 실시했다. 수사관의 답변은, “흙 속에 진주가 있다”는 것이다. 명쾌하나 낙제점에 해당하는 답안이다. 과문한 나로서도 조개 속이면 몰라도 땅을 파면 진주가 나온다는 말은 처음이다. 그들은 개인의 가치와 권리(흙)으로, 그들의 기준에 맞는 반민주질서의 상징을 <진주>로 표현한 것이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에게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체포하여 연행한 후 그가 없는 틈을 이용하였다. 일몰 시간 후의 야간집행은 영장에 특별한 기재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러한 내용이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없었다면 그것도 위법이다. 또한 압수수색은 압수로 밝히려는 범죄혐의와 압수에 의해 침해되는 다른 이의 사이의 균형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사적인 메모에 해당하는 전화번호수첩에 대한 압수도 위법이다. 그 근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의 자유발현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다. 나의 소유지분이 절반인 사적인 녹음테이프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영장의 피의사실과 관계없는 것들에만 집중되고 있어 그는 진술을 거부하였다. 목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한 압수와 불법한 수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언제쯤 기약없는 출장교육을 마치고 돌아올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없는 사이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비록 가진 돈은 없지만 함께 삶을 하나 제정하면 어떨까. 매년 연말이면 10대 가수상이나 연기대상이나 또는 베스트드레서에 웨스트드레서를 뽑기도하는데, 금년 최고의 법관과 최악의 법관을 선정하자고 제의하고 싶다.

한해는 이미 저물어 가고 그는 없으니, 우선 혼자서 수상을 결정한 다음 그의 주인을 얻을까 한다. 최고의 법관은 서울지법의 흥준표 판사다. 이장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기 때문보다는 실질심사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악의 법관은, 구속의 전제적 요건인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한 의심도 없이 피의자에 대한 사전심문을 생략한 채 서준식을 구속한 서부지원 최정렬 판사의 몫이다. 최고의 법관에게는 <흙>으로 만든 트로피를 전해주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난민

###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북한식량난민 13명이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오히려 이를 베트남정부에 인계하여 사지로 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현재 지뢰밭으로 피신한 난민 가운데 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북한난민들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한국대사관)으로 주선한 것이 안기부이며, 외무부와 안기부등의 요청으로 국내 언론에서는 보도마저 봉쇄된 상황이다.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통일강령이보내기모임(강령이모임)은 2일 오전 10시30분 가톨릭센타 7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주중국대사, 안기부에 의해 사지로 내몰린 북한식량난민 13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식량난민과 함께 베트남 국경을 넘어 10월 20일 한국대사관으로 인도되자까지 생사고락을 같이한 김재오 전도사가 증언했다. 김재오 전도사에 따르면 흥 아무개(35·여, 무산역에서 굶어죽기 직전 인신 매매단에 팔려 중국으로 옴)씨 등 13명은 4월 초기 식량난으로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현지에서 생명의 위협과 현지인들의 비인간적 위협에 견디다 못해 한국 망명을 결심하게 된다.

베트남 주재 한국한국대사관으로 이들이 중국 연변에서 북한 식량원조 활동을 벌이던 강령이모임을 만난 것은 4, 5월경이다. 그뒤 7월 28일 북한 주재 한국대사관에 집단망명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주중한국대사관 박종호 서기관은 “그들은 동포지 대한국민 국민은 아니다. 그들은 범법자이기 때문

에 도와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들은 대사관 공개난입을 결심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안기부가 신원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베트남을 주선하게 된다.

9월 16-26일 북한난민과 강령이모임 회원등 18명은 베트남 국경폭포를 넘는 등 목숨을 건 7천km의 대장정을 하게 된다. 드디어 10월 20일 한국대사관에 이들을 인도한 뒤, 21일 김재오 전도사 일행은 한국으로 귀국한다.

#### 강제추방, 7명 생사 불명

그러나 강령이모임 회원들은 11월 중순 중월 국경지대인 중국 남방에서 흥 씨가 구조요청을 해왔다는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된다. 흥 씨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국대사관측이 이들을 베트남 정부측에 인도했고, 다시 베트남 정부는 이들을 인접국으로 강제추방을 했다. 하지만 중국 군대 역시 난민들을 다시 베트남쪽으로 내몰았고, 이를 전원은 베트남 군대에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왔다. 베트남 내무성 책임자로부터 “한국정부가 받지 않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안에 넘겨 북송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중국쪽으로 내몰린 난민들은 체포를 피해 지뢰밭으로 달아난 것이다.

현재 13명 중 강 아무개 씨 가족등 5명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보호하고

1997년 12월 3일(수)

제 10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있으며, 구조요청을 해온 흥 아무개 씨는 강령이모임이 보호하고 있으나, 지뢰밭으로 들어간 나머지 7명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한국정부를 믿었다”

김재오 전도사는 “정부에 공개적으로 망명신청을 했더니 환장염을 데려올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비공개적으로 진행하자고 말해 이 말을 믿었다. 하지만 국경의 지뢰밭을 피해 국경폭포를 지나 죽음을 감수하면서 베트남으로 넘어왔을 때 대사관측이 한말은 ‘국경으로 다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안기부 직원은 ‘이들을 한국에 데려올 것이다. 텔레비전만 봐달라’고 말해 이를 믿었다”고 말했다. 흥 씨가 위급한 상황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미뤄온 것은 안기부측이 이 사실을 공개하면 북한난민 13명을 데려올 수 없다는 협박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도사는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절차를 밟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한국정부가 이들을 송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는 지난 11월 27일, 29일 베트남과 중국 현지 조사작업을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외무부등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기부는 강령이모임 등에 보도 자체를 요청한 것외에도, 지금까지 언론사측에 보도통제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보도기자는 “외무부와 안기부는 보도 자체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 토론회: <레드헌트> 이적 표현물인가

때·4일(목) 오후3시 / 장소·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서준식무죄석방공대위

##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김 영삼 정부하의 인권상황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 정부에게 낙제점수를 주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즉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 △경찰·안기부·검찰·법원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반인권적 법령 및 관행 △일반 시민과 법집행관리들의 인권의식 함양 등 모든 과제들이 실패 또는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그나마 개선된 부분도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요구에 의해 얻어진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 무정책, 무개념, 무의지

김영삼 정부의 인권정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선 참석자 모두 “정부의 무정책, 무개념, 무의지”를 질타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선(방송대 법학) 교수는 “정부가 소수자보호라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권의 진전이 실패로 끝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종철 한겨레 논설위원은 “인권을 이해못한 김영삼 정부에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환상이었다”고 말했다. 유선영 변호사도 “토끼몰이와 마녀사냥식 정국운영에만 매달리면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등 인권탄압기구를 온존시키는 등, 김영삼 정부는 인권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었던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인권개선이 실패한 데는 인권운동이 자기 뜻을 못한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그는 “90년대 인권운동도 여전히 사건을 뒤쫓아가기 바쁜 모습이었으며, 여러 인권단체들의 각개약진을 전체 인권문제에 대한 연대의 틀로 묶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기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과제들도 제출됐다.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의 인권

대표단은 일본후꼬꾸 사장인 가와모또 씨와의 면담 및 노동성 방문, 일본 노동단체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단은 가와모또 씨와의 면담을 통해 “교섭 재개, 노조 인정, 용역깡패 철수”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가와모또 씨와의 담판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좀 더 강력한 규탄투쟁도 시도할 계획이다.

#### 전자주민카드 예산 삭감 촉구

주민등록법개정안 공포 보류 요청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대책위)는 2일 “IMF의 재정축소 요구와 관련,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총 2천7백여 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앞으로도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데다,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을 우선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대통령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문민정부의 첫번째 인권과제는 과거 청산이었다. “과거에 발생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인권문제의 청산”은 스스로 ‘문민정부’를 자처하며 등장한 현 정권의 인권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우리 나라의 현대사는 불처벌 (impunity)로 점철된 역사였다. 해방전 국에서 친일파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다시 권력의 중심부에 등장하였고, 그들은 과거의 행적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제주 4·3 다큐멘터리 <잠들지 않는 핵성-제주 4·3>에 대한 뒤늦은 입건이나 <레드 헌트>를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으로 서준식 씨를 구속시킨 사례는 아직도 이 나라에는 과거청산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현 정권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체계화된 인권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았듯이 과거청산에 대해서도 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손을 대지 못했다.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

그 첫 번째 반응은 의외로 일찍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5월 13일 광주도청 순회를 하면서 광주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선언했다. 사실 이 선언은 그 자체보다 과거청산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솔직한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김찰은 신군부세력에 대한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란 결정을 내렸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급기야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한 순간에 뒤집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창하게 되고, 95년 12월 5·18특별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제정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 신군세력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사

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 더니 급기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들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과거청산 위한 노력 부진

이처럼 과거청산을 추진하는 세력은 5·18 특별법 제정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다. 96년 12월 17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5·18국민위원회를 계승하여 출범하였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해 왔다. 반면,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세력은 다시 권력 핵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과거청산에 어떠한 노력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집요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런 과거청산 반대세력은 매우 광범

하게 우리 사회의 핵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95년 신귀영 씨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바람에 좌절 되었다. 제2의 광주학살로 불리는 삼

청교육대도 사법부가 공소시효를 문제 삼아 기각하는 바람에 청산될 기회를 잃었다. 이로써 행정부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법부마저 과거청산에 대한 집요한 방해세력임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과거청산은 현 정권에서는 무망하게 되었다.

현 정권에서 과거청산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것이 있다면, 매우 제한된 일부 양심수에 대한 사면, 복권과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복직,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 대한 법원의 배상관결 정도였다. 그밖에 제주 4·3의 문제도, 전쟁 시기 저질려진 양민학살도, 고문피해의 문제, 의문사,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독재 시대에 만들어져서 군사독재 통치에 활용되었던 수많은 법과 제도도 그대로 온존되고 있다.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필수과제  
이로써 ‘역사 바로 세우기’란 구호가 무색하게 현 정권에서 과거청산은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과거청산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오늘과 미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자칫 과거를 끌어들이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이 과거청산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이로부터 교훈을 삼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우선은 철저한 진실의 규명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책임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인권 가해자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까지 인권탄압을 통해 승승장구 출세하는 부정의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국민들의 원한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제 과거청산은 문민 제2기인 다음 정권으로 인계되었다. 과거청산이 차기 정권에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악행과 인권유린이 다시 21세기에도 재현될지도 모른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여성 장애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사회적 차별’이며, 이와 관련 여성장애인들의 ‘일할 권리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벌인 ‘여성장애인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은 사회적 차별(69.5점) 가족 나들이 차별(65.9점) 주위의 편견(54.2점) 취업 단계에서의 차별(51.6점) 급여·인사차별(43.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70% 이상이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한데,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들은 성교육과 직업교육, 고용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약 두달간(8. 12-10. 10) 18세 이상의 여성장애인 7백19명을 대상으로 벌어졌으며, 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린 ‘여성장애인 전국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체은하(전주 한일신학대학) 교수는 “

여성장애인들의 상당수가 가족이나 독

지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육과

고용에서의 소외와 차별이 이들에게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

의 정도를 더욱 심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 교수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으나 여성장애

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어 실효성

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장애인

고용을 위한 책임부서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장애인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집안사정이 어려

워’(34.1%), ‘주위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어서’(27.6%) 등으로

조사됐고, 특히 ‘가족들의 반대 때문’

이라는 응답도 6.5%나 차지했다.

여성장애인들은 ‘정부가 여성장애인 정

책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질

문에 대해 37.1%가 전혀없다고 답하

는 등 63.5%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의 집」 설치 △여성장애인 고용부처의 신설 △가사와 임신·육아를 위한 가정 도우미 제도 실시 △여성장애인 정책 결정 시 이들의 참여를 위한 여성장애인 활동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국위기, 노조와 협의해야”  
국제노조기구, IMF에 권고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사무총장 존 에빈스)와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사무총장 빌 조든, ICFTU)은 최근 한국의 위기상황과 IMF 구제금융 협상과정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국제노조기구는 “안정화 정책이 초래할 심각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F와의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IMF는 한국경제 안정화 논의에 한국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이뤄지는 대량해고와 감원조치는 대대적인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한국정부가 올해초 총파업을 촉발했던 것과 같은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국제노조기구는 “올바른 구제정책은 금융자본의 관점에서만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일반 근로대중의 관점에서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TUAC는 29개 OECD 회원국의 51개 노총을 회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기구이며, ICFTU는 1백37개국 노총 조직이 가입·구성한 조직이다.

##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는 이적표현물인가?

-문화예술 검열철폐를 위한 토론회-

▶ 때: 12월 4일(목) 오후 3-6시 ▶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주최: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741-5364)

▶ 발제 및 토론: <레드 헌트> 촉탁 상영(10분 이내)

1. 제주 4·3 사건을 통해서 본 현대사 인식

·발제: 양한권(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토론: 양정심(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2.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들: 다큐 <레드 헌트>를 중심으로

·발제: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 교수)

·토론: 조성봉(<레드 헌트> 연출가), 김혜준(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3.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발제: 김순태(방송대 법학 교수) ·토론: 조광희(변호사)

&lt;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gt; &lt;13-1&gt;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

사회: <인권하루소식>에서는 1천호를 맞아 문민정부 인권정책을 평가했는데, 이는 김영삼 정권의 전반적 평가보다는 새로이 나타난 특징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획은 전제적 평가를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활동가들이 현장을 뛰다니며 느끼는 점을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김기식: 김영삼 정부가 인권정책이라 걸 한 적이 있었나 싶다. 적극적인 인권정책이라기 보다는 인권문제와 연관된 정책적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백승현: 김영삼 대통령 또는 정책임 안자들에게 있어 인권이라는 개념은 어떤 정책수립이나 진행과정에서 고려요소는 아니었다. 김영삼 정권은 개혁이라든지, 세계화라든지, 경제살리길 듣지 여려 모토를 내걸었는데, 그 모토 결정에 있어 인권은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 간혹 고문방지조약을 가입하거나, 국민인권기구 세우겠다는 약속 등을 했지만 그 시기의 다른 모토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았다. 오로지 김영삼 정권의 건수율리기, 행정관료들의 건수율리기, 대외과시용에 그쳤기 때문이다.

결국 김영삼 정권의 여러 행위가 ‘인권이 어떻게 관계가 맺어졌는가’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인권정책이 무엇이냐’는 것은 우리도 정의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쪽도 정의내린 바가 없다. 생각해 본 바가 없다는 것이다.

남규선: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결국 인권은 국가나 정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과 국가의 관계가 ‘언제나 지배적’이라고 이미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는 없다. 가장 단적인 예가 외국인노동자 문제이다. 그것은 꼭 국가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점에서 우리 사회는 ‘관용’이 대단히 부족한 사회가 아닌가 싶다.

김영삼 정부에서 인권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마틴 루터킹 상’을 받았을 때였던 것 같다. 그때 인권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된 것이 정부가 인권이란 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 〈토론자〉

백승현(민변 사무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 〈정리〉

김수경(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때: 11월 26일 오후 6시30분-8시

· 곳: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관용이 부족한 사회’

사회: 인권정책은 없다는 부분에 다 공감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넘어가 인권상황의 특징은 어떻게 지적될 수 있을까.

백: 과거의 인권침해라는 것이 위낙

직설적으로 침해되기도 했지만, 정부

가 언론과 재벌 등을 장악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는 한가지 경로가 주

를 이루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도 있었지만 언론과

재벌이 전면에 서서 정부와 더불어 때

로는 정부를 앞장서서 자유권, 사회권

예를 들면 이번 이장희 교수 사건은 실제로 이미 사법부에 의해 반론 보도 요청까지 받아들여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갖고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전체를 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노동법 개정문제라든지 지금의 노동권 축소등 경제난국의 문제에 대해 여당내에서도 최소한 합리적 논의마저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제 인권상황은 정부에 의해 직설적이고 단선적으로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선적이고 간접적이고 또한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점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인권상황이 표면적으로는 후퇴한 것이 아닐지도 그 경향은 결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

### 인권침해 전면적으로 진행

김: 김영삼 정부의 기본정책은 차별정책이다. 노동자라든가, 진보적 인사라든가 빈민이라든가 소외계층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일관되는 반면에 다른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고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 약화되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사람은 여전히 인권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전 정치적 자유 정도는 다 해결된 것 아니냐고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화 정책

사회: 인권상황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자유권 분야에 있어 인권상황은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는지 평가해 보자.

⇒ 3면으로 이어짐

&lt;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gt; &lt;13-2&gt;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 “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남: 이인모 선생을 북송할 때 당시엔 통일정책 하에 보낸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다. 그런데 얼마전 어느 한 교수 말에 의하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즉흥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5·18특별법이나 전·노 구속도 마찬 가지이다. 이러한 독불장군식이고 즉흥적인 경향은 문민정부하에서 많이 드러났다.

양심수 문제를 보면 문민정부 초기 그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93년 초반의 현상일 뿐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93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과거 30년간 군사체제에 의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사기구들, 고문기관들의 청산문제로 연결된다. 문민정부 들어 사전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이 보안기구들을 정리해 내지 못했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전·노 정권과 차이가 없었다.

대신 박종철, 권인숙 사건 이후 당시 이뤄졌던 고문등 가혹행위가 현재는 많이 줄었다. 더불어 지금도 안기부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등 가혹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쪽으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얼마전 범민련 관계자 나창순 씨가 안기부에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어디에도 이를 관심있게 보거나 보도하거나 하다못해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정부당국에 항의를 한다거나, 노력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는 정부보다는 먼저 활동가들의 무관심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또한 공공연한 폭력이 아주 심각하게 행사되고 있음에도 이 역시 묵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96년

한총련 사태 당시 국민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을 보았다. 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은 매우 부족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의 노력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후평가와

대체마련 역시 없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임은 자명하다.

김: 최근에 나타난 양상을 보면 정치적 반대자나 소외계층의 문제는 서구사회에서 얘기하는 소수자의 인권문제처럼 될 것 같다.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도 소수자의 문제로 인식되고 취급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문제,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문제 등은 소수자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이번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선거활동에 대한 자유를 요구했던 것을 끝까지 봉쇄했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 자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자〉  
백승현(민변 사무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명백한 제한이라고 생각한다.

### 국민 참정권 침해 심각

사회: 일부 회색된 측면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실 권리주의가 청산된 것은 없다. 권리적 속성이나 본질적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과거와 같이 이슈화되지는 못한다. 간첩사건이 터진다해도 예전같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김: 시민권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문제만으로 좁게 보아서는 안된다. 이제는 공권력에 의한 억압만 아니라 사회적 억압, 특히 언론에 의한 사회적 억압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권력구조안에서 한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 국제경쟁력 강화 앞에 노동권 후퇴 심각

사회: 사회권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다면.

김: 사회권 범주에서 보면 일정하게 제도적 수준에서의 전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별다른 개선이 없었고 경향적으로 굉장히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친재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권의 핵심이 노동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노동권의 후퇴, 사회권의 후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도적 범주에서 보면, 95년 고용보험의 실시시작과 몇 가지 진전이 있지만 이는 사실 사회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서라기 보다는 이미 그 이전 성과의 측면으로 일법이 예고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반영될 것 일뿐, 김영삼 정부가 의지적으로 한 측면은 별로 없다.

김영삼 정부에서 사회권 문제를 이해하려면 소위 ‘국제경쟁력 강화 논리’와 ‘세계화 논리’ 그리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 또한 WTO 체제하에서 다국적 자본주도하에 진행되는 국제질서적인 자본질서의 재편문제와 연관지어 파악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양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실태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사회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번 노동법 파동이다. 지금 사회권 부분에 있어 아주 심각한 후퇴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 내일자에 계속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레드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 “4·3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구속 한달째를 맞는 4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는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인가?’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견열 철폐를 위한 제3차 토론회가 열렸다.

영화인, 대학생,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레드헌트’가 다른 제주 4·3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규정은 타당한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 4·3은 미국의 학살극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한권(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사무차장) 씨는 “레드헌트의 이적성 시비는 결국 제주 4·3 학살에 대한 검찰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경은 기본적으로 4·3을 폭동으로, 주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에 신고된 1만5천여 명의 희생자 가운데 80% 이상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주도 주민들은 친일잔재의 청산과 통일정부의 수립, 미군정의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것이다. 4·3은 이에 대한 미국의 학살극”이라고 규정했다.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규정과 관련해 김순태(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

서준식 대표 연락처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  
치소 수감번호 3444(152-081)

1997년 12월 5일(금)

제 10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그는 “표현의 자유는 진보적 개혁세력의 전유물도 아닐 뿐더러 진보적 개혁세력의 지지안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는 없다”며 “보수중산층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범계 충적인 연대, 뉴미디어의 활용, 교육제도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통일논의·학문연구 위축”

#####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찬국 등)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은 이장희 교수의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및 출국금지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검찰의 태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통일논의와 학문연구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하며 “시대착오적인 공안물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AI, 이장희 사건 우려 표시

국제앰네스티 에릭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2일 한국정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이장희 교수’ 사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시했다.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한국 검찰이 이장희 교수 등을 구속한다면, 앤네스티는 그들을 양심수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며 “사회과학서점 주인 등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표현의 자유 투쟁, 저변 확산 관건 또한 조광희 변호사는 “이적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인류의 양심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언제나 자기만 옳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적성’이라는 잣대를 쳐별의 근거로 삼는 국가보안법은 법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현의 자유보장과 관련해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결코 정부를 설득해서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결국 세력화보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선 그 응호자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 이 관건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3-3>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

사회: 이제 김영삼정부 하에서 진행된 개혁조치 등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을 살펴보자.

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을 들수 있다. 앞서 말한 차별적 포섭전략의 하나로, 여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다는 것이다.

백: 앞으로 여성권, 아동권 부분에 있어 큰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에는 조직적 저항이 없는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는 생색을 내면서 일을 건 아무 것도 없다. 이것과 가정민주화나 여권신장과의 연결성을 본다면 ‘이것만으로는 독립변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듈다.

실제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이해를 제한하면서 인권보장 측면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난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제라든지 금융실명제 등이 난파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 김영삼 정권의 커다란 개혁정책의 하나로 93년말 안기부법 개정을 들 수 있다. 물론 그것마저 2년이 무위로 돌아갔다.

변호인접견권은 노태우 정부 때보다 나아졌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한 변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된 측면이 강하다.

#### 일보전진 ‘변호인 접견권 보장’

백: 같은 생각이다. 아까 말했듯이 거시적 측면에서는 비판적이나, 미시적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것 중 집행유예 석방자들이나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예정자에 한해 포승을 안팎겠다라는 것 등인데, 이것은 경개의 경우 인권정책의 진일보라는 것을 부인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이라고 말하기에

는 부족하다.

남: 상급심에서 뒤집혀지긴 했지만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이나 시사자널 밀가루 사건 및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영장기각 등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소장판사들에 의해 일정정도 진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 김영삼 정부 초기와 중반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 초기에 사회복지부 분에서 고용보험실시시작과 의료보험 통합등은 긍정적이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등은 국민의 참정권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의 시행형태와 내용이 법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수

〈토론자〉  
백승현(민변 사무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남규선(민기협 총무)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자체로는 진전된 것이다.

백: 한계를 말하자면, 예컨대 주거권에 있어서 예전에도 법은 정비되지 않았고 대항해서 싸우면서 법률한계를 넘어 보장되어 나가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이슈가 집중이 안되는 측면도 있지만 합법적인 것 자체가 봉쇄되어있는 면이 있다.

사회단체 대응, 여전히 즉자적

사회: 인권상황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의 영향력은 약화되어 가고 영향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의 대응 및 활동과 문제점을 평가를 해보자.

남: 문민정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이슈를 가진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고, 시민사회단체의 영향이 많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변화 속에서 사회운동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야하는데 장기적 안목과 정책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 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즉자적인 대응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백: 김영삼정부는 소위 개혁정책을 집권초기의 쇄신분위기에서 추진하여 하려다 급격히 후퇴 반동의 과정으로 들어섰는데, 이는 그 분위기를 제도화하거나 사회적 흐름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거나 당초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회단체들은 ‘반결음 앞장 선 노력’, ‘견인의 노력’이 준비되어 있었는가하고 비판해 보아야 한다.

사회: 문제는 연대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각계약진하면서 하나의 공동사안들을 찾아 합의해내고 있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남: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사회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인권운동의 성과로는 ‘국제연대운동’을 들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만해도 88, 89년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그려들었다. 그러한 것은 국제연대운동 속에서 불을 지펴낸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국내 인권운동의 노력은 한국 인권현실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려내는 역할을 했다. 이 노력은 문민정부에서 꾸준히 이어졌는데, 단지 이것이 ‘국내의 인권개선으로 이어지고 작은 긍정적 조치들을 이루어냈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김: 단체의 활동이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그 활동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문제는 변화된 상황에 따른 새로운 전략, 방법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사업은 오히려 너무 날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효과적이고 아주 힘있는 전형은 올해초 노동법파동에 있어 범대위 같은 모습이었다. 정부나 기득권층의 차별화정책을 뒤집고 소위 중산층과 기층민중이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했던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 성과들이 왜 가능했고 어떻게 발전했어야 했고,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어야 하는가라는 좀 발전된 사고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인권운동도 노령수당 소송을 끈 이기남 할아버지사건 등처럼 하나님의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갖고 '다른 단체는 왜 안 하냐'고 물을 수는 없다. 그 이슈를 잡은 집단이 이를 계속 벌여나가고 거기에 일정한 계기적 요소가 있을 때 다른 단체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보장연대기구 결성 필요

사회: 차기정권의 인권정책은 어떠할까 논의해 보자.

남: 결국 정권교체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되면 적어도 자유권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백: 김영삼 정부 출범초기가 그랬듯이 새정부가 들어서면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부정적 조건이 오히려

많을 것이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총체적 경제파탄 상태인데, 경제파탄의 일차적 책임을 재벌 등 기득권층이 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공황이후에 파시즘이 들어섰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층을 희생양으로 하고, 기득권의 일언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추진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 세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 있는데, 경제살리기를 비롯해 전·노사연대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부정이다.

사회: 차기정권이 누가되던 간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초반에 전·정권과 같은 차별화전략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장한 부분도 상당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시민운동, 더 시민 속으로

백: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해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80년대 시기 큰 틀의 싸움에는 능했지만 전문화하거나 작은 권리 문제에 있어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90년대 들어 작은 권리 부분에 있어 맹아들이 생겨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사회전체 이슈화하는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 점에서 작은 권리, 전문성에 있어서는 권리를 찾아간 반면에 큰 테두리에 있어서는 자기 주체(내재적 동의)를 형성해야 할 것 같다.

또하나는 우리는 대정부투쟁에는 익숙한데 이제 정부를 포섭해가는 과정뿐 아니라 사회를 포섭해가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시민운동이 더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남: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뤄낼 것인가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인적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인권 운동의 당면한 첫 과제이다.

남: 새정부 들어서도 과거청산이 당면과제가 될 텐데, 이와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50년 과거청산을 해내지 못하고, 여전히 레드 캠플렉스와 분단이데올로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과거청산국민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것이 최소한 시도라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봄을 맞는 과제이다.

사회: 차기정권이 누가되던 간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초반에 전·정권과 같은 차별화전략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장한 부분도 상당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시민운동, 더 시민 속으로

백: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해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80년대 시기 큰 틀의 싸움에는 능했지만 전문화하거나 작은 권리 문제에 있어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90년대 들어 작은 권리 부분에 있어 맹아들이 생겨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사회전체 이슈화하는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 점에서 작은 권리, 전문성에 있어서는 권리를 찾아간 반면에 큰 테두리에 있어서는 자기 주체(내재적 동의)를 형성해야 할 것 같다.

또하나는 우리는 대정부투쟁에는 익숙한데 이제 정부를 포섭해가는 과정뿐 아니라 사회를 포섭해가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시민운동이 더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남: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뤄낼 것인가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인적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인권 운동의 당면한 첫 과제이다.

남: 새정부 들어서도 과거청산이 당면과제가 될 텐데, 이와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50년 과거청산을 해내지 못하고, 여전히 레드 캠플렉스와 분단이데올로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과거청산국민위원회에서 얘기했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함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목적으로 한 보안관찰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레드 헌트〉 상영과 관련해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준식(50) 씨가 구속기소된 외에 최근 방양균(43) 씨가 불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여기에 지난 9월 같은 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함세환(66) 씨까지 합치면 3명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거의 동시에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비전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꾀했다는 이유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 보안관찰대상 이유로 출국정지

방양균 씨는 89년 12월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96년 7월 만기출소했는데, 줄곧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안관찰법 대상자 신고를 거부해 왔다. 그는 지난해 8월 대만 앰네스티의 초청을 받아 출국하고자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결과 D급(보류자)으로 판정받아 지금껏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광주지검(검사 김용철)은 지난 11월 25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주예정지 관할 광주 서부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씨를 불구속기소했다.

1997년 12월 6 일(토)

제 10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레드 헌트〉 상영이유로 경찰조사 또한 11월 15일 전주 서화동성당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한 것과 관련해 문규현 신부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데, 보안관찰대상자인 문 신부에게 보안관찰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 있다. 문 신부는 95년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1월 27일 현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씨 등의 재판은 또다시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서준식을 옮아맨 법률 ② 보안관찰법

##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대부분의 시국사법들에겐 일정한 형기를 마침과 동시에 또 하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유신·5공 시절엔 사회안전법이었고, 89년 이후엔 보안관찰법이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생활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안관찰법 제18조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는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장소·내용 △여행에 관한 사항 △기타 관할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등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동시에 검찰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행동 및 환경 관찰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 금지 △신고사항 이행 지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금지 등(동법 제19조)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법의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동시에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대상자의 전향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관찰처분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기소된 서준식 씨에겐 보안관찰법 제18조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 씨는 보안관찰법 폐지운동을 누구보다도 지속적으로 벌여온 사람이다. 그는 91년 강기훈 유서사건과 관련, 최초의 보안관찰법 위반 구속자로 기록된 이래,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원회판제청, 헌법소원 등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서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가 인권운동가의 뒷통수를 친 격이다.

## &lt;성명서&gt; 제4회 서울단편영화제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4회 서울단편영화제를 맞이하여 한국영화의 미래를 가늠하는 단편영화제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영화제가 새로운 창작정신을 보장하는 창작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출품작들이 영화법에서 3회까지 받게되어 있는 엄연한 검열에서 벗어나 온전히 관객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제가 3회 이상 개최되었기 때문에 출품작들이 이곳에 한정하여 심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제 이후에 일반관객들에게 공개적인 상영을 할 때는 검열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더이상 상영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화법에서 등급심의조차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삭제에 의한 자기 검열로서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멀티미디어시대에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만큼, 영상문화와 단편영화의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 지원을 못해줄 망정 영화정책의 편협함으로 이런 식의 부조리한 현실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한, 한국영화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행보 대신 퇴보와 편법의 영화악법으로 단편영화를 비롯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정권의 문화전반에 걸친 물이해가 넓은 영화정책의 문제점 때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선을 얼마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추상적이고 애매한 기대심리에 불과하여도 대선 이후에 올바른 영화정책으로서 진정한 변화를 열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현정권에서 지켜내지 못한 심의의 폐지 내지는 민간 자율심의 등이 일종의 사탕발림식의 공약으로 그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한국영화진흥의 의지등 영화정책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우리의 지난한 요구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 4·3사건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에 접근한 <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반포) 등으로 아직까지도 구속되어 있는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관심의를 받고 공식상영했던 <레드헌트>를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였기 때문에 구속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벗어나 대선을 앞둔 시기에 그동안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수사당국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부르짖었던 현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만큼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이 시대의 필요한 양심을 구속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수사당국의 <레드헌트> 이적성 시비를 규탄하며 부당한 탄압을 철회할 것과 서준식 집행위원장은 조속히 석방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양심적인 영화인들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제4회 서울단편영화제: 집행위원 김홍준, 정성일/ 심사위원: 김동원, 김소영, 왕가위, 정지우

씨네마페고상 심사위원: 문화학교 서울(서울), 씨네마페고 1/24, 영화로 세상보기(광주), 온고을 영화터(전주), 제7예술(대구), 씨네마페고 컬트(대전), 강릉 씨네마페고(강릉), 씨네 오딧세이(청주), 영화만세(제주), 씨네하우스(대구), 씨네마페고 시선(성남), 일팔구오(대전)

본선경쟁 진출작 출품작: 김지현, 김지훈, 김정구, 김태용, 민규동, 박유경, 박한준, 박은경, 송의현, 송일곤, 오점균, 이민정, 우범준, 윤종찬, 조은령, 정윤철, 최두호, 최진호, 황서용

세미나 발제 및 토론자: 김지석(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김태일(푸른영상) 변영주(기록영화제작소 '보임') 심현우(영화제작소 '청년') 이지영(노동자뉴스제작단) 최진아(독립영화협의회) 홍령숙(서울영상집단)

1997년 12월 5일

제4회 서울단편영화제의 폐막식에서

## '97 인권주간 기념예배 및 인권상 시상식

## 수상자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때: 12월 8일(월) 오후2시

곳: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 서준식 석방 및

## 표현의 자유쟁취를 위한 명동농성

때: 12월 7일(일) ~ 10일(수)

곳: 명동성당

주최: 서준식무작석방공대위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 “자유민주적 질서유지 · 보장 위한 수단”

사건 92현바28 보안관찰법 제2조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등

## 주문

- 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 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제4조(보안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제18조(신고사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19조(지도)에 대한 심판구는 이를 각하한다.

## 이유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교도소 출소이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이른바 민가협 공동의장 겸 장기수가족협의회 회장, 전민련 인권위원장 및 유서대필사건공동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와같은 구체적인 활동이 과연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2) 보안관찰처분은 본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법이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보안관찰처분결정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 소정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이법 제18조 소정의 신고의무규정은 청구인의 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 법이 청구인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고 사상전향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피보안관찰자의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3. 판단

- 다음으로, 법 제2조, 제3조, 제4

행동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 신고의무외에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별 다른 의무를 부과하거나, 신체의 자유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거의 가지 아니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조항들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에 비추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청하는 합리성, 정당성 및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d)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중략) 이러한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벌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 예상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3) 나아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주장에 관하여 본다.

(중략) 위 조항들은 보안관찰제도의 정당한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된 뿐만 아니라,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의 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997. 11. 27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 김문희 · 이재화 · 조승형 · 정경식 · 고중석 · 신창언 · 이영모 · 한대현(주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interpi.net · E-mail: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레드 헌트> 전국 상영

### 서준식 공대위, 10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 대책위』(공대위, 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등)가 8일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구속 등 표현의 자유 탄압과 대선을 앞둔 공안몰이에 대한 항의로서,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일까지 3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공대위는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공안당국에 항의하는 뜻으로 인권주간(12월 8-10일) 동안 전국 1백20여 곳에서 <레드 헌트> 함께보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대위는 <레드 헌트>는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4·3의 학살 만행을 증거하고 있다며 "이 작품의 이적성 여부는 공안당국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 전국 성당·교회 등 120곳 상영

상영장은 농성장인 명동성당을 비롯해 성당 50여 곳, 교회 10여 곳, 대학 20여 곳, 사회단체 40여 곳 등이며, 인권주간에 앞서 이미 대학 15곳과 교회 5곳, 단체 6곳 등 27개 장소에서 <레드 헌트> 상영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영화제를 비롯해 미국의 마틴벨로재단, 대만인권협회 등 사회단체와 독일·일본 등지에서도 <레드 헌트> 상영을 신청해 왔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공대위는 오는 10일 49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일을 맞아 공안탄압 규탄집회를 개최한 뒤 농성을 마무리할 계

1997년 12월 9일(화)

제 10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한영, 멕시코서 노동운동탄압 참여연대 국제연대 호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소장 채수일)는 최근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영기업의 노동운동 탄압과 관련해, "정부와 한영기업 및 현대그룹은 한영기업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각 단체에 국제항의운동을 요청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멕시코 자유무역지대인 티후아나에 위치한 현대정공 협력업체 한영기업의 현지노동자들은 그지역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민주노조를 결성했다. 하지만 한영기업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12명의 노조간부를 해고했으며, 노조를 지지한 노동자들마저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 노동인권단체들은 원청회사인 현대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현대자동차 불매운동까지 벌일 것을 결의하고 나선 실정이다.

### .....주요 공판 안내

#### ▶ 9일(화)

- 김나영·박소연(국보법 친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 김인(특수공무집행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최종진(일반교통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 10일(수)

- 최영일외1·김봉임(특공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 박성광(집시법, 한총련)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 정수일(깐수교수, 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속행
- 양창훈(특수공무방해치상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신건
- 최성봉(국보법 탈출미수등) 오전10시 합의6부 425호 선고
- 나현균(전혜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오후4시 4단독 524호 속행

#### ▶ 11일(목)

- 양주량(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 이용석(국보법 친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 김혜련외 3(국보법 친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 12일(금)

- 김상해(국보법 친양·고무)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서울고법 형사국

### 서준식 씨 NCC 인권상 수상

#### "인권운동의 저변확대와 대중화 공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97 인권주간 기념예배 및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인권상은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구속수감중인 서준식(49·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게 수여되었다. NCC 인권상 시상분과는 88년 이후 사회안전법 폐지와 비전향장기수 문제에 대한 여론화, 91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92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설립과 이를 통한 인권운동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는 점을 수상이유로 밝혔다.

이날 수감중인 서준식 씨를 대신하여 수상한 부인 김지영 씨는 "12월 초 면회 때 남편은 인권상 수상 소식을 듣고 자신보다는 목요집회 2백회를 맞이한 민가협이나 경찰의 불신검문과 소지품 검사에 맞서서 승소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상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인생의 1/3 이상을 보낸 감옥에 다시 갇힌 서준식 씨에게 이렇게 큰 상으로 격려해 주신 NCC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장 탁월한 인권운동가가 영등포 구치소의 차가운 감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권의 현주소"라며 "서 대표가 석방되어 우리와 함께 하는 날이 빨리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10일까지 계속되는 명동성당 농성에 동참을

#### ◇ 서준식 씨 수상소감

##### 오랜만에 돌아온 감옥에서...

오랜만에 들어온 감옥은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변했다'라는 주장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문민시대다" "시민사회다" "세상이 변했고 우리의 의식도 방식도 변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작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회설이 되어' 불의와 억압의 과녁을 향해 과감히 날아가곤 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의 우리를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감옥이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감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큼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양심수 1천명', 변함없이 양심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나라가 양심수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인권운동가로서만이 아닌, 한 사람의 양심수로서 귀단체의 인권상을 받게되어 기쁩니다.

### 주/간/인/권/호/름

(97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 ◆ 1일(월)

민주택시연맹, 2일 예정된 총파업 유보결정

#### ◆ 2일(화)

통일강령이보내기모임·천주교인권위, 북한시령난민 13명이 한국정부등 각국의 거부로 사지에 내몰려 그중 7명이 지뢰밭에서 실종되었다고 발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표, 전국 여성장애인 7백1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여성장애인의 69.5%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노조연맹 조합원 3백여명, 명동에서 '나라경제살리기 및 강제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비상결의대회' 가져/민예총·작가회의, 검찰이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유흥준 씨등 일부 작가의 글을 삭제·수정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교과서 검열행위 즉각 중단" 촉구/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됐다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일본법원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며 기각

#### ◆ 3일(수)

대우그룹, 감원대신 임직원들의 임금을 10~15% 삭감·동결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인건비 20% 삭감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 촉구예정

#### ◆ 4일(목)

한겨레신문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4단체, 국제심포지움 '북녘돕기 운동의 평가와 전망' 개최/국제자유노련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자문위원회, 국제통화기금쪽에 한국노조들과 대화촉구하는 성명 발표/서준식무죄석방 공대위,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레드 헌트> 토론회/덕성여대 학내분규가 재단족의 이사진 전면교체 조처로 2개월여만에 해결 실마리/서울지법 최중현 영장전담판사, <나는야 통일세대>의 저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주)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 대인지뢰금지조약 서명 위한 캐나다 오타와회의에서 125개국이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혀

#### ◆ 5일(금)

한미행정협정에서 미국인 범죄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후 인도'로 하기로 양국 잠정합의/대한변협, 을들어 10월까지 16명의 변호사가 2백건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져/정부가 IMF와 별도 협상과정에서 '근로자 파견법 조기제정'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완화' 등에 합의했다는 세부내용이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반발/안기부와 검찰, 8월 밀입북한 오의제 전 천도교교령이 최근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앞으로 편지를 보낸 사실 발표

#### ◆ 6일(토)

민주노총, 전국에서 '경제주권 수호와 고용안정 촉구 노동자대회' 개최/민주개혁 사회단체 연대회의, 종묘공원에서 '경제실정 규탄과 고용안정 촉구 국민대행진' 개최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 방북사건 방양군 씨, "가혹행위 당해"

89년 6월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96년 7월 만기출소한 방양군(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 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 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방양군 씨는 89년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93년 11월 안기부 수사관 김 군성 씨와 안종택 검사를 독직폭행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94년 6월 서울지검 박성득 검사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 결정에 대해 방 씨가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기각 사유로 △방 씨가 89년 8월 서울지검에서 변호인(박상천, 조승현, 강철선 변호사) 접견시, 안기부나 검찰에서 고문 등 가

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방 씨가 안기부에서 약전 침대용 각목 및 손등으로 전신을 구타 당해 상처가 남아있다며 서울형사지법에 신체검증 및 감정의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이정빈(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조사기간동안 구타 등으로 신체손상을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접견시 검찰 등석

"보복 두려워 눈물만 흘렸을뿐"

반면 방양군 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다르다. 방 씨는 공소장에서 "89년 변호인들과의 접견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변호인접견시 안종 택 검사가 바로 옆에 앉아 접견권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변호인이 "고문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안종택 검사가 얼른 "그런 질문은 곤란하다"고 변호사에게 항변하면서 방 씨의 대답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신체감정결과도 왜곡

또한 변호인측은 "이정빈 교수의 신 체감정결과는 오히려 원고의 부상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을 때"이라며 제2형사부가 감정서 문언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박성득 검사의 불기소처 분과 제2형사부의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자의적인 검찰권 또는 재판권의 행사로 이로 인해 원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식

#### 및 공안탄압 규탄집회

- 때: 12월 10일 오후 6시30분
- 곳: 명동성당
- 내용: 서준식 선생 구속 항의 학문연구의 자유 탄압 규탄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규탄 등
- 특별공연: 노래를 찾는 사람들
- 사전행사: 레드핸트 상영(5시30분)

1997년 12월 10일(수)

제 1025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 -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 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날을 세계는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바라보며 지난 50년간의 교훈을 되새기고 인권 보장을 새롭게 다짐하는 각종 실천프로그램이 차수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의 날 기념 메세지에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사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보편적 인권을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폭정과 불의에 대한 투쟁이었다. 인권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다. 인권에 생명을 불어넣자."

○…그러나, 인권의 날을 맞는 국내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지만 각 단체의 기념행사에서 지난 정권보다 나아진 인권 사안

#### '97 국정감사 자료집 드디어 나왔습니다

-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 외무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육, 통신과학기술, 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 97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주요 상임위원회의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97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자료집에 어떤 목록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사랑방 정보자료실로 연락주십시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 자료집의 분량은 환경노동위(798쪽) 법제사법위(632쪽) 내무위(785쪽) 교육·국방·통신과학기술위(77쪽) 보건복지위(243쪽) 외무통일위(159쪽)
- 문의: 741-5363 (인권정보자료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정부 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인권침해로 악명높은 국 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면서 △교문 및 가혹행위 종식 △양심수 즉각 석방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국민인권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국민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결고했다.

○…또한 앤네스티 한국지부는 기념식과 더불어 한해동안 세계평화와 인권 신장 및 표현의 자유에 기여한 언론인을 선정해 오늘 7시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앤네스티 언론상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첫 수상자는 파키스탄 사령수의 억울한 사연을 취재하고, 아동 성학대 등을 제작방송한 문화방송 PD 수첩 제작팀과 광주매일일보의 박현주, 임재식 기자이다.

○…한편, 법무부 인권과에서는 경제

악화를 이유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하기로 한 기념행사를 철회하고 올해의 인권옹호 유공수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서 표창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권과에 따르면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하경철 변호사, 모란장에 고려대 심재우 교수, 동백장에 서울구치소 종교위원 노병설 씨 등 35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된다.



경제 살리기 - 결국 '사람답게' 살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 인권의 날에 새삼 꼽씹어본 동수생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apia.net · http://www.interapia.net/~rights

##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물이' 비판

지난 11월 28일 공안당국이 대학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을 문제삼아 저자인 박지동(58·광주대 신문방송학과, 언론대학원장)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학문의 자유를 유린한 공안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박 교수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당국의 인도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현직교수 신분확실, 지명치료증

10일 오전 9시30분 광주 시청앞 금수장호텔 2층에서 「박지동 교수 석방과 학문의 자유수호를 위한 광주전남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박 교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지난 7월 14일 박 교수를 같은 문제로 입건했으나 기소하지 않다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묘한 시기에 구속한 데 대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 교수가 신분이 확실한 교수이며 지병인 고혈압과 심근경색증으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감한 것은 당국의 불순한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합병증 발병시 치명적"

박지동 교수의 건강상태는 상당히 심각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박 교수는 95년 1월부터 96년 2월까지 1년여 동안 무려 6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세 차례의 관상동맥협착증 수술에 이어 흉골 및 늑연골 감염으로 다시 세 차례 수술을 받은 것이다. 작년 4월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일월서각)이 발행된 뒤, 올해 5월 말 이와관련 전남지방경찰청에 출두조사를 받았

는데, 그 직후 디스크가 발병해 6월 2일 디스크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 2달간 입원치료까지 받았다.

지난 8일 전남대병원장 나국주 의사 는 진단서를 통해 "(박 교수가 95년부터 앓아온) 관상동맥협착증은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의해 질환이 재발하거나 심장정지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증이) 생길 경우 치명적이다. 또 흉골 및 늑연골 감염의 경우, 연골부위의 감염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부위로 저항력이 떨어질

#### 〈현장스케치〉 49주년 인권의 날, 우리의 자화상

촛불이 하나둘 명동거리의 어둠을 밝히기 시작했다. 자유와 평등, 인권의 세상을 염원하는 촛불이다.

10일 저녁 8시경 명동성당 입구에서는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석방과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작은 촛불의식이 거행됐다. 올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80여 명이 참석해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날은 49주년을 맞는 인권의 날이었다. 2차대전의 참화를 겪은 전세계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의 소중함을 확인하며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이날을 경축할 수 없었다.

"인권의 날을 맞는 오늘,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아직도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평등과 자유,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의식에 앞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최근 광주대 박지동 교수의 구속, 이장희(『나는야 통일1세대』 저자)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교과서에 대한 이적성 시비 등 공안탄압이 거세지고, 한편에선 소수 자본가들에 의해 초래된 경제파탄의 책임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현실, 그리고 곧이어 닥치게 될 실업의 위기와 생존권의 위협은 이러한 참담함의 이유였다.

인권의 날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와 9백여 양심수들의 존재 역시 명동성당의 밤공기처럼 차가운 현실의 반영이다.

명동의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이제 49주년 인권의 날을 맞아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감옥에 갇힌 인권운동가와 명동에서 촛불을 밝히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권의 자화상이었다.

1997년 12월 11일(목)

제 10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경우 재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 23일 구속적부심

현재 박 교수는 광주교도소 병사병동에 수감중이다. 가족은 물론 주위사람들은 근심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부인 정양자(53) 씨는 "큰 수술을 여례번 받아 저항력이 없는 상태로 평소 식이요법을 해오는 등 조심해왔다. 교도소내에서도 몸상태가 나빠지면 조치야 취하겠지만 다시 재감염되면 치명적"며 별탈이 없기만을 기원했다. 박 교수 담당변호인은 정웅태, 김동주, 정규현, 안상운 변호사이며, 오는 23일 구속적부심이 있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 4자회담 의제 '대인지뢰문제' 상정 촉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국제지뢰금지운동 공동성명

10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는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자회담에 즈음해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조디 월리엄스)과 공동으로 한반도에서의 대인지뢰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지난 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제지뢰금지조약 서명식에서 협의하여 공동발표된 것이다.

이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남북한은 모두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과 이동을 금지하고 기매설된 지뢰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류해야 하며 △9일부터 열리는 4자회담에서 대인지뢰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야 하고 △남북한 모두 '대인지뢰금지국제조약'에 즉각 서명하고, 98년말까지 비준하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오타와회의에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대표해서 조미리(대책회의 공동대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씨와 김창수(대책회의 정책·홍보담당, 통일맞이 자료실장) 씨가 참석해 국제지뢰금지운동과 한반도캠페인에 대해 협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안국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조미리, 김창수 씨로부터 캐나다 오타와회의 참관 보고를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문의: 723-5300)

### '97 국정감사 자료집 드디어 나왔습니다

■ 97년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 외무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육, 통신과학기술, 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 자료집의 분량은  
환경노동위(798쪽) 법제사법위(632쪽)  
내무위(785쪽) 교육·국방·통신과학기술위(77쪽) 보건복지위(243쪽) 외무통일위(159쪽)

■ 문의 : 741-5363 (인권정보자료실)

또한 같은 날 불교방송 프로 '거룩한 만남'에서는 기념관 성금마련을 위해 오전 9시5분부터 특집방송을 한다

### 국민승리21

#### 1초 25만원 모금운동

국민승리 21은 TV 유세 및 법정홍보 물 모금운동을 진행중이다. 선거운동을 위해 최소 15억원이 필요하며, 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후원회 모집외에 투·개표 참관수당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투·개표 참관인에 신청을 기다린다. 국민: 827-21-0446-735 (최승희)

#### 자료: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인식론, 제2장 세계인식[세계관 형성]을 위한 자료들, 제3장 사상·의지의 표현과 논술방법, 제4장 사회과학 연구방법과 논문

제1장 인식론은 2개의 절로 나뉘어 있고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의 기본이론이 서술되어 있다.

제2장 세계인식[세계관 형성]을 위한 자료들은 2개의 절로 구분된다.

제2장-I. 물질의 운동법칙에 대한 이해(53-96면)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이 설명되고 있다. 먼저 관념론과 유물론의 개념과 그 차이점이 서술되고 변증법에 의한 물질의 운동·변화의 원칙과 법칙이 소개된다. 마지막 부분 80면에서부터 96면까지 몇 군데에서 주체철학이 서술되고 있다.

제2장-II. 한민족사회의 어제와 오늘에 관한 이해(97-240면)는 〈논문 예1-민족 자주의식 왜곡·분열의 원인규명을 위한 일제하 언론분석〉(필자 박지동)과 〈논문 예2-미국 군대의 조선 점령·주둔과 조국분단 「미군 점령 4년사」 중에서〉(필자 송광성)가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제3장 사상·의지의 표현과 논술방법(241-330면)은 여러 예문을 통해 논리적 글쓰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 사회과학 연구방법과 논문에서는 I. 연구방법론의 역사에서 실증주의·기능주의 방법론을 유물사관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II. 연구과정 및 보고서(논문) 구성절차에서 〈논문 예3-청소년의 언론매체 이용 수준과 부모와의 관계 고찰(여론조사 연구의 경우)〉(필자 박지동)가 예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맨 마지막에서 〈논문 예4-자주·평등의식 마비·왜곡의 원인규명을 위한 외세화 폭력 및 교육·언론 분석〉(필자 박지동)이 서술되어 있다. 예로 제시된 4개의 논문은 이 책 총 401면 중 193면으로 책 전체 분량의 약 50%를 차지한다.

이중 송광성의 논문 안에는 다음의 5명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1) 「친일 경찰의 대부 죽연」(안소영) 2) 「친일 사찰경찰의 총수 죽운하」(오유석) 3) 「친일 고문 경찰의 대명사 노덕술」(안진) 4) 「식민지 체제 및 법제도의 유지정책」(박태균) 5) 「친일파의 역사적 존재 양태와 극우 반동 독재」(서중석의 강연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에서 발췌). 1) 2) 3) 세 글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행된 『청산하지 못할 역사』 3권에서 인용되었다.

이처럼 많은 분량의 논문이 삽입된 것은 이 책이 논문 참고 교재일뿐 아니라 논문 연구 방법론의 지침서이자 연구보고서의 작성법을 듣기 위한 의도에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민주화를 위한 광주전남고수협의회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interpiia.net • http://www.interpiia.net/~rights

## 재벌퇴진 · 토지공유제 확대

###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쟁점 결행

"30대 재벌총수를 퇴진시키고 부정축  
재한 재벌총수의 재산을 환수하자"  
국민승리21 대통령후보인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는 현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같은 처방을 내놓았다.

권 후보는 11일 명동성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재벌제체를 해제하고, 환수한 재벌총수의 재산으로 부실채권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도산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재벌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제도의 폐지 △상속·증여 세의 강화 △노조의 경영 참여 △사회 이사와 사회감사제 도입 △소액주주제

### '97 국정감사 자료집 드디어 나왔습니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 외무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육, 통신과학기술, 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 97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주요 상임위원회의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97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자료집에 어떠한 목록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사랑방 정보자료실로 연락주십시오. 글 보내드리겠습니다.

■ 자료집의 분량은

환경노동위(798쪽) 법제사법위(632쪽)  
내무위(785쪽) 교육·국방·통신과학기술위(775쪽) 보건복지위(243쪽) 외무통일위(159쪽) 문의 : 741-5363

### "이사진 전면 개편 요구" 에바다대책위 무기한 텐트농성

에바다 비리재단에 맞선 농아원생들의 농성이 10일 현재 3백76일째를 맞는 가운데,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에바다대책위)는 평택역 광장에서 무기한 텐트농성을 돌입했다. 텐트농성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되며, 농아학부모 및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학생, 지역 대책위에서 참가하고 있다.

이번 농성에서 에바다대책위의 요구사항은 단 한가지다. 국정감사에서 김 선기 평택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평택시장은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부 국감의 증인신문에서 평택시장은 11월 말까지 정상화가 안 되면 관선이사장 파견과 현 이사진 전원승인 취소 후 전문적 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로 이사진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11월 27일자 참조>

1997년 12월 12일(금)

제 10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자신인수방식의 탈법적 정리하고 규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리하고 방지 등을 제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부조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등 보수3당의 고용대책과 관련해 권 후보는 "보수3당 후보들은 대선 직후 국회를 소집해 기업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상에 정리하고 조항을 삽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오히려 은행대출금 상환유예를 주장하고 금융실명제 유보 또는 폐지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오로지 재벌 편들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 장대협, 김호일 의원 사과 요구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재)는 11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이회창 후보 지지연설도중 있었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장대협은 김 의원이 13일까지 공식사과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으로 △기업의 인수합병·구조조정시 정리하고 규제완화 방침 철회 △근로자파견법 도입 계획 철회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김동필 (참언론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시상)

통신공간의 언론자유가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검열과 폭력으로 인권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서울

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 통신회사도 공동책임

통신인들이 정치관련 글을 게재함에 있어 모든 사법적인 책임을 통신인들에게 묻는다면 이는 통신회사의 '이용자 보호'라는 단어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관련 글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글을 게재한 당사자에게 있지만, 통신회사는 현재까지 자체 검열을 통해 이용자의 글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동등한 '삭제 권한'이 있다. 따라서 민·형사의 일정부분 책임을 통신회사도 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검열철폐'

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현행 '선거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검열철폐는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PC통신 공간에 대한 검열 및 탄압은 수많은 네티즌들을 판단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끝이며 전세계인의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치관련 글로 인해 인신고속 및 탄압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양심수'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쌍방향 언론인 자유로운 통신공간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감놔라 배놔라' 할 성격이 아닌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민의 입을 일방적 언론을 통해서 막아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현재 통신이용자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비판 및 견증하는 쌍방향 언론인 통신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정치인들과 국민의 공복자는 더욱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 선거사범구속자 4명 모두 통신인

각 통신회사 계시관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의 정치 관련 글들이 올려지고 있지만, 많은 통신인들은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글을 게재함에 있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처럼 국민의 공복자를 선택함에 있어 최소한의 비판적인 목소리마저도 현행 선거법의 독소 조항을 들어 죄송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온갖 유언비어와 인신비방의 근원인 정치권은 '면죄부'라도 받은 듯 인신비방 및 흑색선전을 자행하고 있지만, 정작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사법으로 구속된 4명은 모두 통신인이라는 사실이 많은 통신

### 요원한 전자민주주의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아직은 멀기만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교환을 막고 있는 '통신검열'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현 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선거법' 독소 조항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

부분 통신인들이 국가기관의 검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당국은 명심하여 '정보통신검열'을 하루빨리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잡습니다.

12월 11일자 1면 박지동 교수 관련기사 중 박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아직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박지동 교수 석방과 학문의 자유수호를 위한 광주전남비상대책위」는 광주전남이 아직 표현물로 문제삼은 박 교수의 저서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에 대해 리영희·최장집 교수에게 감정서를 의뢰할 예정이며, 감정서가 제출되는 데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 행사와 동정

□ 정세토론회 : '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IMF 구제금융, 한국경제, 노동운동-

· 때: 14일(일) 오후 1~6시  
· 장소: 농업기술진흥관(4호선 이촌역)  
· 빌제: 현시기 화환, 금융위기의 배경과 의미(체만수)/IMF 구제금융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김상조)/현정세와 노동운동의 진로(박성인)  
· 주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지식인연대(준)(문의: 778-4001)

### ■ 전국연합 '98년 수첩 판매

전국연합 수첩에는 한청협·전농·전교조·민주노총 등 민주단체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록하고 있다. 날권 판매는 2천원이며, 대량구입은 별도로 주문하면 된다.(문의: 921-4090)

### ■ 연극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참여연대 열린사회를 위한 무대는 지난해 12월 김지숙 씨의 모노드라마 『로젤』을 공연한데 이어 두 번째 연극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원작 홍세화, 연출 임진택, 극단 길라잡이)를 무대에 올린다. 재불망명객 홍세화 씨의 베스트셀러 수필을 연극으로 재구성한 이 작품은 12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혜화동 아리랑 소극장에서 공연된다.(문의: 723-4254)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경찰과 시민이 서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최선정(인천 초등학교 27) 교사는 "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뱡소니 혐의를 조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뱡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체유석(인천시경 보안수사대 36) 경사는 "피해자인 탓에 오히려 사건을 조작한 양 때도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배자 검거 명분, 차량 검문  
최 교사는 30일 저녁 7시30분경 자신의 차량(푸른색 아벨라)을 타고 인천 교대에서 나와 진행하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당시 동승하고 있던 남아무개(공의요원 근무) 씨에 따르면,

골목길을 빠져나와 교대앞 사거리 신호에 걸렸을 때, 경찰이 다가와 수배 중인 학생을 찾는다며 차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교사 등은 신분을 밝힐 것과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10여 분 후 경찰은 임진식(인천교대생) 씨의 이름이 적힌 긴급체포영장을 가져왔고, 이에 최 교사 등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항의했다. 이후 정복경찰이 나

#### 서준식 선생에게 편지를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치소 수감번호 3444(152-081)
- 연회를 원하는 분은 사랑방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741-5363)

1997년 12월 13일(토)

제 10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으로 접어들고 있다.

채 경사는 제출한 전처 12주 진단서가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인천 ㅎ병원측은 지난 5일 부천 세종병원에서 실시된 R.I. bone scan 검사 결과, 채 씨의 척추골절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 ㅎ병원측은 담초 채 씨에게 끊어졌던 12주 진단서를 전처 3주 진단서(팔 부위 부상)로 바꿔 재발급 했다.

인천지법 구속적부심, 최 교사 석방  
12일 인천지법 제3형사부(이종립 판사)는 최 교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최 교사를 석방했다. 반면 채 경사는 척추통증을 호소하며 인천 종암 길병원에 입원중이다. 판이한 주장 가운데 어느쪽이 진실로 판명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결혼퇴직제 철폐요구

여성노동자협, 청와대 희신 요청

12일 (사)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이사장 정지환)는 청와대의 기혼여성 결혼퇴직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공개요구서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지난 6일 문화일보를 통해 청와대가 기혼 여성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한국 여성노동자협의회는 "정부는 평등한 여성고용정책 시행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한다"며 "관행적인 결혼퇴직제의 철폐와 함께 기혼여성들의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희신을 요청했다.

타나 트렁크를 열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한 뒤,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인근 계양파출소로 갔다.

검찰 경찰, "뺑소니 당했다" 주장  
사건은 이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체육복 상의를 입은 사람(채 경사)이 "검문을 하려는데 나를 치고 뱡소니를 쳤다"고 진술하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왔고, 이로 인해 최 교사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채 경사는 인천 ㅎ신경외과에서 척추골절에 의한 12주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최 교사는 12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최 교사측은 "경찰이 최 교사를 파렴치법으로 몰아 불심검문의 무리함을 덮어 버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 "피해자인데 매도당하고 있다"  
반면, 채 경사는 "당시 나흘간 잠복 근무를 하던 끝에 최 씨의 차량에 수배자가 탑승한 사실을 발견했고, 골목길에서 최 씨의 차량이 잠시 정지하게 됐을 때, 다가가 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 씨가 이를 무시한 채 전진해 버렸고, 그 순간 백미터에 부딪히며 쓰러졌다"고 말했다. 채 경사는 "나를 치고 달아난 뒤, 어딘가에서 수배자를 내려주었을 것"이라며 "최 씨 등의 주장은 운동권 출신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진단서, 교통사고와 무관 드러나  
그러나, 최 교사가 구속된 이후 새로 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

##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된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12월 4일 연례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언론서비스(IPS)의 보도를 통해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미국과 여타 강대국은 경제적 이득과 여타의 이권 추구로 97년에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을 외면했다."

연례보고서는 특히 빌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부를 지목하여 심각한 인권침해에는 관용적이면서 국제적 인권제도의 강화를 방해하는 데는 '오만'하게 굴었다고 지적했다. 65개국의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는 HRW보고서는 미국의 오만함의 증거로서, 제안된 국제형사법정(ICC)을 약화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대인자금지협약에도 반대했다는 점을 들었다.

HRW는 1백여 개국이 넘는 국가가 자금지지협약에 서명하는 결과를 넣았고, 강대국에 기대지 않고도 국제인권의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민간단체와 중소 규모 국가들간의 새로운 협력을 주목했다.

"민간단체와 중소 규모 국가들 간의 협력이 현재 위상에서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거대 권력의 오만함을 능가할 수 있는 날까지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야만 한다." 아마도 이것은 클린턴의 인권정책에 대한 HRW의 가장 강력한 공격일 것이다.

#### 오만한 클린턴 정부

보고서는 또한 인권은 보편적이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와 중앙아프리카에서 97년 내내 끊이지 않았던 인권에 대한 공격을 부각시켰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일부 지도자들의 제기는 개인의 자유에 앞서 사회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런 주장은 지난 7월 모하메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이 세계인권선언의 공식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데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7월 이후 동남아시아를 휩쓴

경제·환경적 위기는 앞서 제기된 주장을 무색케 했다. 그 가운데 동남아시아는 정부 책임성의 부재에 노출되었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정부 집행력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서구의 지원자들에게 "군인 황태자"로 불려온 중앙아프리카의 새로운 지도자들도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적 해결"이라는 구호 아래 "아시아적 가치"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했다. 이것은 단지 "일당 국가의 재순환되는 변형판"일 뿐이다.

전쟁, 혼란과 집단학살에서 회복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개인의 자유에 앞서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97년, 이디오피아와 우간다의 결사의 자유 억압에서부터 콩고와 르완다의 수천만 명의 민간인 학살에 이르기까지 '억압'은 정당화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비판하지 않는 서구의 "도덕적 근시안"을 비난하였다.

"중앙아프리카에서의 엄청난 인권침해에 관대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특히 눈에 띤다"고 언급하면서, 보고서는 "남아프리카의 상당수가 인권에 대한 굳은 약속을 막 보여준 시점에서 중앙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묵인은 특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말라위, 잠비아에서의 강력한 인권 문화의 증진을 격찬했다.

#### 제3세계 인권침해 목록

미국에 대해 특히 냉혹한 HRW 보고서는 워싱턴이 인권문제에 대해 "선택적인 관여"를 하고 국제인권제도 강화 노력에 친물을 깨얹는 것은 "이미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성문화하기 만 한다면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인권인데도 이를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과 여타 부유한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과의 교환을 위해 중국의 인권개선에 대해 "악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

앙아프리카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대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며 미국을 꼽았고, 콩고에서 저질러진 잔학행위에 대해 "침묵"한 대부분의 유럽 지도자들을 힐난했다.

인권침해를 목인하는 반면에, "자국 군대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위험도 피하고자 하는 펜타곤(미국방부)의 횡포적인 선점"은 보스니아에서 전범의 체포를 가로막았고, 싸움으로 피폐해진 이나라의 장기적 평화의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NGO와 정부 협력이 지도력 발휘  
그러나, 세계 인권에 대한 조사가 전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대인자금지협약의 체결로 인해, 민간단체와 중소 규모 정부 간의 "새로운 협력"은 "주류세력의 참여가 부족한 시기"에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강력한 옹호를 주장함으로써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 '97 국정감사 자료집 드디어 나왔습니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외무·법무·환경부를 비롯하여 교육·통신·과학기술·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 97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주요 정부위원회의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자료집에 어떠한 목록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사랑방 정보자료실로 연락주시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 자료집의 분량은  
환경노동위(798쪽)·법제사법위(632쪽)  
내무위(785쪽)·교육·국방·통신과학기술·  
국방위원회(772쪽)·보건복지위(243쪽)·외무통  
일위(159쪽)·문화위(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lia.net · http://www.interplia.net/~rights

##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 후고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지난 2일부터 일본원정투쟁에 나섰던 한국후고꾸 노동자 대표단이 13일 동경시내 동경탑을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이다 일본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윤동만 후고꾸 노조위원장과 한광수 사무장, 이시정 금속연맹기념부지부 사무국장 등 원정투쟁단 3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동경탑에 올라가 "일본후고꾸(사장 가와모토)의 성실한 사태해결, 한국후고꾸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를 벌였다. 이시정 사무국장은 1시간 뒤 탑에서 내려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다 연행됐으며, 윤 위원장과 한 사무장도 오후 9시경 연행됐다.

이들은 15일 현재 일본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비자 만기일인 16일 전원 강제출국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각계에 지원 호소

이번 일본원정 기간동안 한국후고꾸 노동자들은 시내 아케하바라역, 다마치 역 등지에서 일본 시민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백방으로 뛰어 다니며 일본내 각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일본내 「진출기업을 생각하는 모임」 측이 일본 변호사들과 함께 일본 시민조사단을 구성해 한국에 파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민주당 소속 다케무라 야스코 침의 원은 일본 국회에서 후고꾸 문제를 다룰 것을 약속하는 등 몇 가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일본 금속연맹측도 지난 9일부터 일본후고꾸측과 교섭에 나서 한국후고꾸 사태의 해결을 촉구

1997년 12월 16 일(화)

제 10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성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일본기업의 노사문제는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태해결의 열쇠를쥔 일본 후고꾸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원정단은 원정 나흘째인 지난 5일 오전 8시에 위치한 일본 후고꾸 공장을 방문해 교섭을 요청했지만, 일본후고꾸측은 "한국후고꾸에 있는 용역깡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섭은 한국후고꾸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면담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정투쟁단은 회사 정문앞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규탄집회를 갖고 돌아오는 데 그쳤다. 또 이에 앞서 4일 일본노동성을 방문해 한국후고꾸 노조탄압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노동

### .....주요 공판 안내

#### ▶ 16일(화)

김영복, 박기동(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박종철, 임의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장원주, 오병기(국보법)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신건  
박진호(국보법)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속행  
김민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속행  
권오혁(국보법, 한총련 및 선거사건)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유덕상외5(업무방해) 오후2시 3단독 423호 속행

#### ▶ 17일(수)

김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이영무(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재개

#### ▶ 18일(목)

이종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신건  
권혁진(집시법,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속행  
안혜숙(국보법)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신건

#### ▶ 19일(금)

강순정(국보법 간접등, 범민련)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속행  
양경숙(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신건  
김해식(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최애경(국보법, 고대 청년사건)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이천재, 민경우, 이종린, 나창순(국보법, 범민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서울고법 형사국

## 경찰, 문정현 신부 출석요구

### 〈레드 헌트〉 상영 이유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상영과 관련, 문구현 신부를 비롯해 인하대 부총학생회장 등이 지난 4일 경찰조사를 받은 데 이어 11일자로 문정현(군산 오룡동성당) 신부 또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군산경찰서 보안2계는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 할 일이 있으나 15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에 문정현 신부는 출석을 거부했다. 문 신부는 지난 11월20일 오룡동성당에서 표현의 자유보장과 겸열제도 철폐, 서준식 씨 무죄석방 등을 요구하며, 〈레드 헌트〉를 상영한 바 있다.

### "열사 명예회복 대선공약으로"

#### 유가협, 국민회의 약속받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협) 회원 11명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대선공약화를 촉구하며, 지난 13일 한나라당 등 3당 당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27일, 12월 2일에 이어 세번째이다. 유가협측에 따르면, 국민회의 김충조 사무총장으로부터 대선공약화 요구를 받아냈을 뿐 한나라당에서는 내쫓김까지 당했다.

##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천리안의 한총련 ID(SCHCY)가 13일자로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안기부와 경찰의 통신검열 중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 '97 국정감사 자료집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 외무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육, 통신과학기술, 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문의 : 741-5363

## 주/간/인/권/호/름

(97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 ◆ 8일(월)

내무부, 일선 자치단체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공문 보내 98년 예산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지원지지/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문명관 교수등 1백68명이 검찰을 상대로 낸 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 제출명령 신청 받아들여/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보고, 97년 1월말 현재 파악된 난민은 총 2천2백72만명이며, 이중 1천3백여만명은 타국 전전

#### ◆ 9일(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삼미종합특수강 노동자 2백1명이 창원종합특수강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과 관련해 '인수시 노동자 전원고용' 결론/경실련, 정부가 일부 관변단체 등에 추가로 예산지원한 데 대해 즉각 철회 촉구/ILO,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지구온난화 방지논의를 위한 제3차 기후변화협약 교토 전체회의, 선진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포함된 최종안 마련

#### ◆ 10일(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NCC 인권상 수상/삼성, 기아, 한화에 이어 선경, 한진등 주요 그룹 임금삭감·동결등 감량경영 방침/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에바나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등, 평택역 광장에서 텐트농성 돌입/박지동교수 공대위, 하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하며 박 교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서준식 석방공대위,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식 및 공안탄압 규탄집회 명동성당에서 가져

#### ◆ 11일(목)

권영길 국민승리21 후보, 명동성당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극복과 일자리지키기 비상기자회견' 연두식 치른다/가져/남양주시 행정사무감사자료, 올해 산림훼손 신청건 수 1백92건으로 지난해 52% 증가/정부, 현재 21%인 장애아 교육수혜율을 오는 2002년까지 1백%로 올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을 추진키로

#### ◆ 14일(일)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 체류 조선족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동안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민주노총, 종묘공원서 조합원 2천여 명 참가한 가운데 집회열어 IMF와 재협상 △고용안정특별법 즉각 제정 등 요구 /3당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이회창후보 도입에 긍정적 입장 보여/정부, 기업들이 인수합병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

인권  
시평

## 영화 &lt;하이눈&gt;과 매카시즘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달 KBS 명화극장은 할리우드 서부극의 고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하이눈>을 방영했다. 1952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 <하이눈>은 그해 아카데미 상 4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이었다. 게리 쿠퍼가 분한 정의의 보안관이 4명의 악당무리와 결투를 벌여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하이눈>은 존 웨인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서부 영화처럼 폭력이 난무하다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상투적 서부영화가 아니다. <하이눈>은 서부극의 형식을 빌어 매카시즘에 포로가 된 1950년대 미국사회를 고발한 "인권영화"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소의 냉전체제가 굳어지자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좌익 숙청작업을 벌였다. 한반도에서 분단체제가 굳어질 무렵 미국내에도 반공열풍이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반공회오리가 불어닥친 곳은 할리우드였다. 할리우드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우익정치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목표였다. 1930년대 이후 할리우드에서는 자본주의에 병든 미국사회를 비판하는 많은 영화가 제작되었다.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할리우드는 우익세력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반공의지를 미국인들에게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8년 할리우드에서 연방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20여 명의 배우, 작가, 감독 등이 소환되었다. 이중 10명의 영화인들은 공산당원을 색출한다는 평계로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것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에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심정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했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할리우드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첫번째 대결장이었던 할리우드에서 기세를 올린 매카시즘은 종교계,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 미국사회 전체를 훔쓸게 되었다. 결국 1950년대 초 미국사회는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한 동토의 왕국이 되고 말았다.

한편 한국전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공산주의 위협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카시즘의 병폐를 감지한 미국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은 매카시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조차 "빨갱이"로 의심받는 분위기였다. 1951년에 제작된 <하이눈>은 서부영화의 형식을 빌어 매카시즘에 대응하는 미국인들의 태도를 통렬히 고발했다. <하이눈>의 기동줄거리는 전형적인 서부극에서처럼



보안관과 악당의 대결이 아니라 보안관과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이다. 보안관을 돋기보다는 그를 몰아내고 악당과 타협하려는 영화속의 마을사람들은 매카시즘 공포에 사로잡힌 미국인들의 자화상이었다.

<하이눈>은 보안관 케인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함께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마을을 떠나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과거 체포했던 악당 프랭크 밀러가 사면되어 다시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복수를 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라며 보안관에게 마을을 떠날 것을 재촉한다. 그러나 보안관은 마을에 남아 악당들과 대결하기로 결정한다. 보안관 케인은 매카시즘으로부터 인권을 지키려는 양심적 인권운동세력을 상징한다.

보안관은 마을사람들이 단결한다면 굳이 총격전을 벌이지 않고서 악당들

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려 한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싸우겠다는 사람들은 없다. 보안관은 교회를 찾아가지만 목사와 신도 모두 의견만 무성할 뿐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마을의 치안관사마저 밀려일당은 "잔인하고 광폭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난다. 법치주의와 기본권보호를 외쳐댔던 미국의 법조계마저 매카시즘 선종이 불어닥치자 인권과 정의를 외면했음을 풍자한 것이다. 한편 공산주의자를 상징하는 마을의 창녀는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간다.

결국 보안관은 혼자 악당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보안관의 총솜씨 때문이 아니라 악당들의 무모한 행동,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남편을 도운 아내의 덕택이었다. <하이눈>은 보안관의 승리로 끝나지만 해피엔딩은 아니다. 결투가 끝나고 케인은 보안관 뱃지를 땅에 버리고 아내와 함께 쓰러한 분노를 삭이며 마을을 떠난다. 미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이나 양심 모두 매카시즘 선종 앞에선 무력하게 훔쓸려 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혐오의 표현이다.

영화 <하이눈>에서 보안관과 악당들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매카시즘에 훔쓸린 미국인들의 반응, 바로 그것이다. 누구도 악당에 대해 정면 대결을 통해 싸우려고 들지 않는다. 법의 집행자인 치안관사도, 도덕적 지주인 교회 목사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할 뿐이다.

영화 <하이눈>은 악의 근원은 악당들에서 비롯된다기 보다는 악과 대결을 거부하는 비굴한 마을 주민들에 있음을 보여준다. 매카시즘의 병폐는 매카시즘을 선동한 극우정치인들 보다는 매카시즘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한 미국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 <하이눈>에 등장한 마을은 1950년대 미국사회인 동시에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2월 17 일(수)

제 10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3당 인권공약 빙곤

##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으로부터 꾸 두달 전인 10월 16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인권보호의 신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 AI, 인권정책 공약화 요구

당시 앰네스티는 대선후보들에게 △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심 △ 인권침해 진실규명, 국민인권기구 설립 등 인권보호장치 증진 △ 고문종식, 구금장소의 환경개선, 전형제도 폐지 △ 국가보안법 개정, 안기부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사형제도 폐지 등 인권 관련 법률 개정 △ ILO 협약 87, 98조 비준 등 노동관련 법률 개정,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 각당 선거공약 인권정책 부족

그러나 인권증진을 위한 각 당의 선거공약은 여려모로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한나라당은 대시면 단행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공안사법, 파렴치법 등 국법질서와 국민정서상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민기협 등 인권단체에서 요구해온 양심수 석방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여성의 산전후 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12주로 확대하며, "전국민의 사회보험화를 통해 모든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다른 당과 차별적인 내용은 아니다.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 △법관·검사 정원 및 변호사 수의 대폭증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미 김영삼 정부에서 약속한 바 있는 국민인권기구의 설치도 공약화되었다.

노동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청소년 교육측면에서는 91년 정부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조약 수준으로 청소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 인권단체 움직임 부족

3당의 인권정책 공약이 빙곤하다는 평가와 함께 인권정책 공약화를 위한 인권단체들의 노력 또한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면서 차기정권에 대한 인권과제와 정책을 제기하는 작업이 마땅히 진행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엔 갔다 왔다고? 한푼의 외화가 아쉬운 판에 당신들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그래도 좋아 ^^  
제발 관심좀  
가져 봐라 !!



18일자는 대통령선거 경계로 합니다.

D09712

### 서준식을 읊어낸 결집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89년 전국교직원노조 창립대회 모금 관련, 이수호(당시 전교조 사무처장) 씨 유죄 선고
- 95년 민주노총 설립 모금운동 관련,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 구속기소
- 97년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 관련, 전국연합 내사 및 사무실 압수수색
- 97년 인권영화제 후원회원 모집 관련,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구속기소

이상은 모두 기부금품모집규제법(95년 이전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에 의해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4조 1항) 한다. 동시에 이 조항을 어길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15조 1항의 1)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조는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이 법 제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례들은 기부금법이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흡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올 여름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전국민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검찰은 전국연합이 성금을 유용했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며, 급기야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수사는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았다. 이로인해 북한동포돕기 운동이 적잖은 상처를 입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부금법을 적용하는 당국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바꿔기 전의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96년 2월 서울지방법원(판사 최동식)이 권영길 씨 사건과 관련, 기부금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자의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기부하는 행위는 선행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며 "위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동선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90년대 들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주축이 되고 있는 시민운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 바,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들의 인권교육을 위해 개최된 인권영화제는 그 취지에 따라 무료로 상영되었고,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수입이나, 홍보·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후원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충당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행위조차도 파렴치한 범법행위인 양 몰고감으로써 흡집내기

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식과 정의에 뒤쳐진 법률이 또 한번 인권증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장기복역 양심수에게 연하장을!

3.40년에 이르는 시간을 헌신 안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우리가 쓰는 편지 한 장이 가장 희망스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광주교도소 (500-110) 광주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 63호  
이재룡(54세, 26년) 5059번 김동기(66세, 32년) 5042번  
양희철(64세, 35년) 5029번 이경찬(63세, 33년) 5047번  
이공순(64세, 31년) 5041번 함주명(68세, 15년) 5012번  
최수일(58세, 33년) 5015번

대구교도소 (711-830) 경북 달성군 화원우체국 사서함 1호  
박동운(53세, 17년) 3111번 안승윤(66세, 16년) 3151번  
박수관(54세, 15년) 3245번 김장호(57세, 15년) 3122번  
서경윤(58세, 14년) 3185번 양동화(40세, 13년) 3265번  
김정복(63세, 16년) 3119번 정영(57세, 15년) 3236번  
오형식(68세, 29년) 3100번 홍명기(69세, 36년) 3125번  
박영희(35세, 6년) 3156번

대전교도소 (305-251)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136호  
김태룡(50세, 19년) 3565번 나종인(60세, 13년) 3643번  
서순택(68세, 8년) 3635번 유재선(66세, 15년) 3573번  
김익현(35세, 8년) 3855번 김윤수(58세, 13년) 3637번  
강희철(39세, 12년) 3502번 김은환(68세, 29년) 3640번  
김익진(68세, 29년) 3574번 김인수(75세, 36년) 3618번  
박왕규(68세, 31년) 3624번 신인영(68세, 31년) 3556번  
안영기(68세, 36년) 3530번 양정호(67세, 29년) 3630번  
우용각(69세, 40년) 3514번 윤수갑(75세, 31년) 3649번  
윤용기(72세, 39년) 3615번 장병락(64세, 36년) 3645번  
최선목(71세, 36년) 3612번 최하종(71세, 36년) 3561번  
홍경선(73세, 31년) 3501번 김성만(42세, 13년) 3544번  
황대권(43세, 13년) 3641번

안동교도소(760-600) 경북 안동시 안동우체국 사서함 171호  
조상록(52세, 20년) 1310번 김병주(73세, 15년) 1368번  
김기문(68세, 16년) 1330번 이장현(65세, 13년) 1302번  
유정식(58세, 23년) 1311번 강용주(36세, 13년) 1313번  
이상철(48세, 15년) 1325번

전주교도소 (560-280) 전주우체국 사서함 72호  
석달윤(67세, 18년) 2120번 진창식(51세, 19년) 2679번  
손유형(69세, 17년) 2039번 문철태(68세, 13년) 2019번  
최수열(33세, 11년) 2073번 손성모(68세, 17년) 2011번  
신광수(67세, 13년) 2053번 김창원(65세, 29년) 2063번

진주교도소 (660-010) 경남 진주우체국 사서함 68호  
서경원(61세, 9년) 55번

\*연하장을 보내실 때 수번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단체에서 보낼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야 합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 하) • E-mail:rights@interpi.net • http://www.interpi.net/~rights

1997년 12월 19 일(금)

제 10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맞는 등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피해주민들이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에 고소 조치 등을 취하자, 이에 맞서 적준용역측도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 결과 4월 29일 폭행사건으로 적준용역의 도원동 현장소장 장공수(50)씨 등 6명이 검거되었고, 장 씨 등 2명이 구속되었지만 곧 금보석으로 출감했다. 또한 6월 성폭행사건은 쌍방폭행으로 결론나,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흐지부지되었다.

도원동철거민대책위는 현재 22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수용단지 마련과 임대아파트 입주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 전격적인 강제철거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철거용역반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하루소식》 구독료 기다립니다

### 용산구 도원동 다시 철거폭력

#### 쌍방 피해 주장... 가해자 처벌 미궁

철거지역에서 밤낮없이 성폭행과 폭력이 벌어지고 피해주민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르지만, 법적 처리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20분경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서는 적준용역(대표이사 정숙종) 철거깡패 20~30여명이 공가(빈집)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리는 철거민들을 폭행해, 이 가운데 박순호(30·여) 씨와 박혜영(24·여,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씨가 중상을 입고 사당의원에 입원치료중이다.

머리채 뽑히고, 하혈 등 중상  
박혜영 씨의 경우 철거깡패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머리 두 군데가 반경 10cm 이상이 뽑혔으며, 하복부를 집중구타당해 17일 현재까지 심한 하혈 증세를 보이고 있다. 박순호 씨는 팔과 다리 등을 심하게 부상당했으며, 정정남·이애옥·민분남 씨 등 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 경찰, 여전히 뒷짐

현장에 있던 염경숙(49) 씨는 "철거깡패들은 박혜영 씨가 도원동 철거민이 아닌 것을 알고 더욱 심하게 집중구타했으며, 쓰러져 있는 박 씨에게 벽돌까지 던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용문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용산경찰서 정보과 형사 등 7명이 출두했지만 낮 12시경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를 지켜볼 뿐이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철거민, 적준용역 고소·고발

#### 【국제소식】 터키, 신문사 편집장 실형선고 '인민현장' 게재, 반정부단체 지원 혐의

최근 터키에서는 신문에 실린 글이 문제가 돼 주간신문사 편집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독일의 인권단체 「자유민을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szentrum fuer Freie Voelker,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앙카라에서는 진보적 주간신문인 「쿠톨루스」(KURTULUS, '해방'이라는 의미)의 편집장 아이덴(Ayten, 여) 씨 등에 대한 선고재판이 열렸다. 아이덴 씨는 「쿠톨루스」에 '인민현장 초안'이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불법단체인 혁명인민해방전선에 협조한 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아이덴 씨 외에 다른 다섯 명의 피고인도 징역 4년6월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정보센터는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 재판장은 "피고들이 어린이들마저 배후조종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이 처벌받도록 한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오야 아이덴 변호사는 "합법 신문에 실린 글을 문제삼고, 편집장을 불법조직의 구성원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은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도 "어떠한 위협을 가해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정보센터는 이번 사건을 언론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항의를 호소했다.

### 서준식을 끌어낸 법률④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압수수색 관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된 지 19일 현재 45일째를 맞는다. 그간 <인권하루소식>은 서준식 씨를 구속한 각종 법률의 반인권적 요소를 살펴왔다. 그 마지막 순서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면접자주>

### “광범한 압수수색 뒤, 공안당국 입맛대로”

검찰은 서준식 씨를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및 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핸트>를 상영한 것이 바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법 적용이 모순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다. 서부지검 김용호 검사는 “왜 부산영화제에서의 상영은 문제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레드핸트>의 상영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서준식이 영화를 볼 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인권단체들은 물론, 국내의 양심적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 모두가 국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는 까닭이 바로 이 점에 있다. 객관적 범죄사실을 떠나 공안당국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준식 씨에 대한 혐의 가운데 하나가 박노해 시인의 시집『참된 시작』을 취득·소지·보관한 ‘죄’라는 사실은 의미있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 시집은 시중의 대형서점에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이 책을 취득·소지·보관한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은 입증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참된 시작』과 관련된 혐의가 서준식 씨의 당초 구속과는 상관없는 별건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별건의 혐의적용을 가능케 한 것은 부당한 압수수색 관행에 있다.

서 씨가 체포되던 날, 경찰은 인권운동사랑방과 서준식 씨의 자택 등 두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레드핸트’ 관련 및 피의자 국보법 위반 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였다. 경찰의 수사대상은 분명 <레드핸트>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당시 압수수색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진행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0장 제114조에 따르면 “압수, 수색영장에

### 10대 인권뉴스 및 인권침해자·옹호자 설문조사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 가운데,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자와 인권기여자를 품아봅니다.

▶ 22일(월)까지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을 기재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서준식 씨와는 무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실무자의 디스켓, 인권하루소식 핵본호, 인권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등을 압수해 갔으며, 「참된 시작」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처럼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확보한 압수물품을 근거로 별건의 혐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공안사건에서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간첩 등의 무거운 혐의로 구속됐다가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를 차단하는 관행 역시 법률과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형사소송법 제10장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준식 씨의 경우, 압수수색에 앞서 체포·연행됐으며 이에따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피의자의 참여는 부당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후 서준식 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압수수색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물품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법정공방이 진행될 것

으로 보인다.〈끝〉

### ■ 행사와 동정

#### □ 노래극단 희망새 3집 음반발매기념 ‘겨울콘서트’

- 때: 12월20일(토) 오후3시, 6시
- 장소: 서강대 메리홀

#### □ 민가협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9

- 때: 12월23일(화) 오후7시30분
- 곳: 장충체육관(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 출연: 정태준 박은옥 리아 박상민 장혜진 권진원 꽃다지 조국과 청춘 메이데이 황신혜 밴드 원창연 권해효 최희준
- 평화만들기2- 노래를 찾는 사람들 콘서트 <만화경…>
- 때: 12월23일(화) ~12월31일(수)
- 곳: 마당 세실극장(시청역)
- 후원: 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 □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 때: 12월26일(금) 오후 6시부터
- 장소: 성균관대 앞 태평소(742-7928)

#### □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을 위한 따뜻함과 나눔의 자리

- 때: 12월27일(토) 늦은 1~11시
- 곳: 종로5가 연강홀 지하1층 OB 프라자

#### ■ 민변 창설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

- 응모대상: 제한없음(공동저술도 응모가능, 단 대학전임강사 이상 및 판사, 검사, 변호사 제외)
- 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각주 포함)
- 접수마감: 98년 2월15일(민변 521-5364)

#### ■ 장기복역 양심수에게 연하장을!

지금도 감옥에는 8년이상 장기복역한 양심수가 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 한해를 마감하며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12월17일자 <인권하루소식>에는 이들의 수번과 주소를 적었습니다. 이를 양심수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신 분은 민가협(763-2806)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2월 20 일(토)

제 10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경찰은 “수사에 지장있다.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등의 평계를 대며 이를 거부했다.

소송대리인인 이오영 변호사는 소장에서 “관악경찰서측이 원고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짓밟는 횡포로서, 원고는 앞으로 또 초래될 가능성이 노후한 ‘법치주의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전노사면 앞서 양심수 석방부터”

전국연합, 앤네스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김대중 당선자가 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노사면을 건의할 듯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전노사면에 앞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양심수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비록 김대중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전노사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잘못된 처사”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도 “김대중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언급했던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임기초반에 진전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앤네스티는 “김 당선자는 오랜기간 인권의 보편성을 옹호한 사람이었다”고 삼기시키며, “한국의 경제위기가 인권개혁을 뒷전으로 미루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 '97 10대 인권뉴스 선정 설문조사

▶ 22일(월)까지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독자여러분께 설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못받아 보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자 및 인권기여자도 선정해 주십시오.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서울지방법원 결정  
사건: 97보5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와 김홍식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현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정식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뿐 아니라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및 아직 피의자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이른바 내시단계에 있는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위 접견교통권을 위와 달리 해석할 법령상

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와같은 접견교통권을 피고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6. 3. 자 53보18 결정 참조). 제1항에서 본 피신청인 대리인의 진술과 같이 안기부장의 명령에 따라 위 김홍식이 안기부 청사내의 감찰부서에서 그간의 위 김홍식의 행위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면 위 김홍석을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공소사실로 영장을 다시 발부해 심리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우 씨는 19일이 구속만기이며, 이천 재·이종린 씨는 오는 29일, 나창순 씨는 1월 2일이 구속만기이다. 민 씨 등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해 모은 성금을 일본 조총련으로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있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7  
판사 오천석

**멕시코 한영기업 노동자 투쟁 승리**

참여연대, 항의운동 벌여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소장 체수일)는 19일 민주노조설립, 노조간부 해고 등과 관련해 싸워온 멕시코 한영기업의 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했다고 알려왔다.

멕시코 자유무역지대인 티후아나에 위치한 한영기업(현대정공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그 지역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선거를 통해 민주노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한영기업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12명의 노조간부를 해고했고, 노조를 지지하는 노동자들도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데서 사태는 비롯됐다.

이에 따라 11월 20일부터 20여일간 민주노조 신임간부 3명이 단식농성을 벌였고, 결국 16일 한영 노동자들과 한영 경영진, 바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노조를 인정하고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키며, 해고자들에게 해고된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불한다”고 합의했다.

한영기업의 노동탄압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노동인권단체들이 국제적 항의운동을 벌였으며, 특히 미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매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참여연대가 중심이 돼 관련 정부기관과 기업측에 항의공문을 보냈으며, 현대정공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6개월)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공소사실로 영장을 다시 발부해 심리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우 씨는 19일이 구속만기이며, 이천 재·이종린 씨는 오는 29일, 나창순 씨는 1월 2일이 구속만기이다. 민 씨 등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해 모은 성금을 일본 조총련으로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la.net • http://www.interpla.net/~rights

##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지난 13일 일본 동경탑에서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던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이 열흘째 일본 경찰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고 있다(본지 12월 16일자 참조).

일본 경시청은 당시 시위를 벌인 윤동만(한국후꼬꾸 노조위원장), 한광수(노조 사무장), 이시정(금속연맹 경기 남부지부 사무국장) 씨를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해 검찰로 송치했으며, 구속된 노동자들은 동경 시내 세 곳의 경찰서에 나뉘어 구금된 상황이다.

아시하 · 마이니치 ·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들도 14일 “한국의 일본계 기업 노동자들이 혜고철회 등을 주장하며 동경탑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며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했다.

후꼬꾸 노동자들이 구속되자, 현재 일본에서는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본내 노동조합들은 전통일노조, 전국의료노조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속자들을 위해 일본인 변호인을 선임하고 모금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에서는 노재열 민주금속연맹 정체국장이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노동계를 접촉했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송년의 밤을 갖습니다.

■ 때: 26일(금) 오후 6시30분부터  
■ 곳: 성균관대 앞 태평소(742-7928)

1997년 12월 23 일(화)

제 10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구속된 세 사람에겐 조만간 20만엔 가량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연 반대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노 등 12·12, 5·18 관련자들의 사면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진정한 친화와 국민에 대한 사죄를 선행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징금의 자진납부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에게 5·6공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와 그들에 의해 옥에 갇힌 양심수의 석방과 더불어, 차제에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전노사연 규탄과 양심수 석방

####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회복 촉구대회

- 때: 오늘 낮 12시
- 곳: 광화문빌딩 앞(동아일보 사옥 맞은 편)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참석: 전국연합 회원, 유가협·민가협 어머님 등 5백여 명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때: 오늘 오후 7시30분
- 곳: 장충체육관
- 주최: 민가협

##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통신연대(대표 장여경)는 19일 오후 5시 방배동에 위치한 정보문화사랑방에서 송년회 및 <'97 정보통신검열백서> 발간식을 가졌다. 송년회 자리에서는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연대는 97년 정보민주화 10대 사건과 정보민주화 디딤돌과 걸림돌을 발표했다.

올해의 정보민주화 10대 사건은 다음과 같다. ① 1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시행령 16조 개정령(안) 개악 철회 ② 1월 총파업통신지원단 활동 ③ 4월 북한동포돕기 범통신인 999운동 ④ 6월 정보통신부, 한총련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올린 최소 61개의 이용자 ID와 게시물 몇 백건 집단 삭제 ⑤ 7월 그레이스 백화점,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CCTV 설치로 물의 ⑥ 10월 대선에 관해 토론한 3인의 통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⑦ 10월 북한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⑧ 11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통과 ⑨ 11월 '97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 개최 ⑩ 12월 정보공개법 시행

또한 올해 정보민주화의 디딤돌에는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사업단, 전주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 통신팀을 선정했고, 걸림돌에는 손봉호 교수, 전자주민카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꼽았다.

### <레드 헌트> 상영이유로 송년회 장소 불허당해

「지식인연대」 등 진보진영의 송년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유는 송년회 1부 순서로 예정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상영 때문.

22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 소속 남궁원 씨에 따르면, 성균관대학은 총학생회를 통해 26일 오후 7시 구내 학생식당에서 가지려 했던 송년회 불허입장을 밝혀왔다.

### .....오늘의 공판

#### ▶ 23일(화)

- 오명기/장원주/박성관(국보법) 오후 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 유신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 배예리(국보법) 오후 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주/간/인/권/호/름 (97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 ◆ 15일(월)

10월 베트남의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던 탈북자 13명 중 강아무개 씨 일가족 4명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30여년 동안 고정간첩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 및 간첩방조)로 고영복(69), 심정웅(55), 심재훈, 김유순 씨 등 4명 구속기소/국민승리21 전북본부 발표, 역대 대통령선거와 북한의 대남공작을 연결하는 내용의 인기부 유인물이 시외버스터미널에 뿌려져

#### ◆ 16일(화)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 불가피한 추가근무 때문에 퇴사 전 3개월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높게 나왔더라도 회사쪽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 적준용역 철거깡패 20~30여명이 공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리는 철거민들을 폭행해 주민들 다수 다치고 이중 박순호 씨 등 2명 사당의원에 입원치료증/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처음으로 증언해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현안으로 끌어올린 김학순(73) 할머니 지병으로 별세/일본 시민단체인 '전후보상실현 시민기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씨 추도성명 발표

#### ◆ 17일(수)

5·18민중항쟁에 참가했다가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동년·송기숙·명노근 씨 등 1백73명 광주고법과 지법에 무죄재심 신청/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전석 판사, 안기부가 김홍석(전 안기부 직원)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 받아들여/OECD, 파리의 개발기구본부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서명식

#### ◆ 19일(금)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전국연합, 전노사연에 앞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양심수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AI, 김대중 당선자에게 선거기간 동안 언급했던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임기초반에 진전된 조치 취할 것 요구

#### ◆ 20일(토)

<뉴욕타임즈> 보도, 대만이 10년전 해무기 개발능력을 거의 갖췄으나, 성사 직전 단계에서 군수뇌부 안의 한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에 의해 좌절된 사실 밝혀져

#### ◆ 21일(일)

검찰,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복권에서 추징금이 빠진 만큼 끝까지 추징한다는 방침 재확인/교육부, 경제여건 고려해 해마다 5~7%씩 올려온 국립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내년에 동결키로/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 주민들, 주민투표에서 나고에 미군해상헬기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계획 부결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 히) · E-mail:rights@interapia.net · http://www.interapia.net/~rights

##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지난 19일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을 앞둔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영장을 재발부했다(본지 12월20일자 참조).

민 피고인은 지난 6월 이종린·이천재·나창순 씨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뤘으며, 이에 따라 19일로 구속만기일을 채워 석방이 불가피해진 민 피고인을 재구속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지적한 혐의 가운데, 민 씨에게 발부된 최초 구속영장과 종합되지 않는 사실 등을 근거로 영장을 재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변호사는 "형식상으로 법원의 영장발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지만, 법원이 새로 영장을 발부한 목적이 구속기제도를 회피하려는 데 있는 만큼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법절차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날 경우엔 구속기간 만료에 의해 석방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3항)를 피고인에게

26일(금) 오후 6시30분  
성대 앞 태·평·소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송년의 밤을 갖습니다

1997년 12월 24 일(수)  
제 1034 호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터리 &lt;레드 헌트&gt;가 해외에서도 상영되고 있다.

최근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지난 13일 뉴욕 지역, 19일 필라델피아, 시카고 지역에서 &lt;레드 헌트&gt;를 상영했으며, 12월 말이나 신년초 워싱턴 디씨에서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다.

뉴욕지역에서 열린 상영회는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가 매년 연말 진행해온 '제3회 조국의 장기수, 양심수 겨울나기돕기 캠페인'과 함께 열렸다.

### 12월 구독료 납부바랍니다

검찰이 아직표현물로 규정한 다큐멘

### 안전의 책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

### < 살아서 만나리라 >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많은 사람이 실로 많은 사람이 죽어 갔다/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어느 날엔가는... 그가 흘린,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 단체 연대회의(연대회의)가 공동으로 펴낸 이 책은 70년대부터 97년 8월 시점까지 민주화과정에서 산화해간 3백여 명의 열사·희생자들에 대한 자료를 장장 5백 60여 쪽에 담고 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소개 첫 페이지를 넘기면 70년 11월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해간 전태일(당시 22세) 열사를 만날 수 있다. 전태일 열사의 악력과 함께 그가 잡든 곳, 남긴 글,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그의 '삶과 죽음'이 이야기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3백여 명의 열사·희생자들에 대해 각각 2~3 쪽에 걸쳐 그의 악력, 삶과 죽음, 유서, 일기 등 유고문, 결의문, 추모글 등이 실렸다. 의문사의 경우 악력, 유고글 외에도 사건경위와 의문점을 수록했다.

열사·희생자 소개는 △노동편 △학생편 △재야편(농민, 도시빈민, 인권, 일반시민, 재야, 청년) △장기수편으로 나뉜다. 부록으로는 열사들의 주장, 열사가 남긴 글 모음, 연대회의 활동 및 주소록, 유기협 주소록 등이 담겼다.

책 발간을 위해 노력해온 김화철 연대회의 기획국장은 "전태일 동지부터 김준배 동지까지 한 시대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총망라된 자료집이 뮤여 나왔다는 점과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근거와 이후 열사·희생자 자료를 발굴, 보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등에 출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구입문의: 764-2835, 742-3180

## “이제는 나와야 한다” 양심수 석방 촉구·전노사면 규탄 잇따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23일 저녁 1만여 명의 관객이 자리를 가득 메운 장충체육관은 ‘양심수 석방’을 염원하는 함성으로 출렁거렸다.

리아, 최백호, 권해효, 정태춘, 박상민…등. 낯익은 가수와 연기자들이 모습을 보인 이곳에선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열렸다.

“이번으로 세번째 참가하게 됐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믿는다.” 가수 권진원 씨의 말이다.

가수 최희준(국민회의 국회의원) 씨는 “금년으로 양심수를 위한 콘서트는 끝날 것이다.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50년만의 정권교체, 특히 오랜 세월 양심수로서 옥고를 겪었던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으로 ‘양심수 석방’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인 듯하다. 행사를 주최한 남규선(민기협 총무) 씨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 김대중 씨의 당선으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광화문 규탄집회

하지만, 이같은 기대에 앞서 찾아온

것은 전두환·노태우 씨 등 5·18 학살과 5·6공 인권침해 주범들의 석방이었다. 당당한 태도로 교도소 문을 나선 학살자의 가증스런 미소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이날 낮 12시 서울 한복판인 세종로 광화문빌딩 앞에서는 전노사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전노사면 규탄과 양심수 석방, 민주화운동희생자 명예회복 촉구대회’에는 대학생과 사회단체 회원 등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사목적은 인권단체의 컴퓨터 이용과 전자통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활동을 개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관한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한충목 전국연합 사무처장은 “마치 독립투사가 술한 고문과 징역을 마치고 국민 품에 돌아오는 듯한 전두환 씨의 모습에 너무나 당황했다”며 “1천 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살고, 3백여명의 민주열사의 원혼이 하늘 아래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 학살주범의 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 사무처장은 “(전노사면을 통해) 정권교체의 한계를 목격했다”며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때만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는 가능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인권단체 전자통신활동 조사 국제인권정보자료센타

국제인권정보자료센타(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 HURIDOCs)는 내년 1월 11일까지 전세계 인권단체의 컴퓨터 이용실태와 전자통신망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다. 이 설문조사는 컴퓨터 보유대수,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타 네트워크와의 연결정도, 인터넷 이용정도, 전문요원의 활용정도와 교육계획 등에 관한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목적은 인권단체의 컴퓨터 이용과 전자통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활동을 개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내년 3월 22일에서 26일까지 뉴니지아에서 열릴 “인권 정보, 갈등치유 과정에서의 불체별과 도전”이라는 주제의 HURIDOCs 국제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설문에 응답한 단체는 모두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설문지를 받아 볼 수 있다. 문의 및 응답 보낼 곳

(HURIDOCs 팩스 : 41-22-741-1768, Email:huridocs@ohn.comlink.apc.org)

### 주요 긍판

▶ 24일(수)

김대운(서래스님, 국보법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속행

오경만(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김종태(특수공무집행방해처상) 오전 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 26일(금)

송유진(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수일(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이지웅, 박관조(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최인기(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속행

강병식(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3시30분, 합의5부, 425호, 선고

해돋이 구경가는 ‘정동진’ 행 열차안...

<하루소식> 25일자 쉽니다

### 만화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apia.net • http://www.interapia.net/~rights

##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전두환·노태우 씨 등 반인권사범들이 줄줄이 사면된 상황에서도 아직 감옥에는 수백여 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남아 있다.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의 양심수는 9백여 명, 그리고 12월 5일 현재 기록수는 2백22명에 달한다. 그리고 기록수 가운데 1백7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국보법의 위력을 가히 짐작케 한다. 특히 1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가 53명이며, 우용각(남파사건, 40년 복역) 씨 등 3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양심수들은 인권운동·통일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 등 각 부문을 망라해 양산되었으며, 사노맹·구국전위·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현재 구속중인 대표적 양심수들의 명단이다.

■ 인권운동: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97년 구속·미결)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 96년 구속·징역 3년6월)

■ 통일운동: 조성우(전국연합 자통위원장, 96년 구속·징역 2년)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96년 구속·징역 1년6월)

■ 방북사건: 서경원(전 국회의원, 89년 구속·징역 10년) 황석영(소설가, 93년 구속·징역 6년) 김하기(소설가, 96년 구속·징역 3년6월) 정민

■ 송년특집> (2-4면)  
독자가 뽑은 인권 10대 뉴스

1997년 12월 26 일(금)

제 10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용기(39년 구금) 홍명기(36년 구금)  
안영기(36년 구금) 최하종(36년 구금)  
최선목(36년 구금) 김인수(36년 구금)  
장병락(36년 구금) 양희철(남파, 35년 구금)

■ 납북어부 사건: 정 영(인천제철 근무, 83년 구속·무기) 김정묵(어부, 82년 구속·무기) 이상철(대우조선 근무, 83년 구속·징역 17년)

■ 85년 구미유학생 사건: 양동화(조선대, 무기) 황대권(서울대졸, 징역 20년) 김성만(연세대졸, 무기) 강용주(전남대, 징역 20년)

■ 범민련: 강재우(의장, 95년 구속·징역 2년6월) 김병권(중앙위원, 95년 구속·징역 4년)

■ 사노맹: 백태웅(서울대졸, 92년 구속·징역 15년) 박노해(시인·노동운동가, 91년 구속·무기) 현정덕(성균관대졸, 90년 구속·징역 8년) 남진현(서울대졸, 90년 구속·징역 13년)

■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김나중(전 민중당 대표, 무기) 손병선(전 민중당, 무기) 최호경(노동운동가, 무기) 황인욱(서울대졸, 징역 13년) 황인오(노동운동가, 무기) 장창호(한양대졸, 징역 12년) 은재형(서울대졸, 징역 6년) 함정희(상명여대졸, 징역 7년) 이경섭(인천대졸, 징역 10년)

■ 94년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경희대 강사, 무기) 정화려(한백기획, 징역 10년) 류라진(서예가, 징역 8년) 박래군(학원 원장, 징역 4년) 박희국(전 부산연합 정책실, 징역 3년6월) 이영기(한청협 조통위원장, 징역 4년) 김진국(대동출판사, 징역 4년)

■ 남파사건: 우용각(40년 구금) 윤기타: 허정길(노점상, 87년 6월 항쟁 관련, 징역 15년)  
이상 모든 양심수들이 조속히 석방돼 기족과 함께 올 겨울을 보낼 수 있기 를 기원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준식 대표 구속, 인권하루소식 1천호 발행 등 <인권운동사랑방>에 있어 서 97년은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인권하루소식>을 품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뛰겠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98년 1월 6일(화)자로 찾아뵙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인권하루소식>은 17일부터 23일까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사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작업을 벌여 97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4문항) 중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편집자주>

### 설문 응답자 분포

설문응답자 총수	142명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	54명
일반독자(학자, 종교인 포함)	56명
변호사	14명
언론종사자	18명

### 새벽 날치기 잠재운 총파업 저항 87년 이후 최대의 국민저항

연초 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투쟁'은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97년 최대의 인권뉴스다.

연인원 3백60만 명의 파업 돌입. 파업기간 총 24일. 종교인·교수 등 지식인 계층 및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연일 계속된 시위 등. 이번 총파업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의 국민저항으로 기록된다.

총파업의 직접적 계기는 노동법·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였다. 96년 12월 26일 새벽 미명을 틈타 기습적으로 진행된 날치기는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으며, 정리해고의 합법화에 따른 생존권 위협은 1천2백만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안기부법의 개정 역시 지식인 계층의 광범위한 저항을 초래한 원인이었다. 무엇보다도 총파업투쟁을 가능케 한 것은 80년대 이후 끊임없이 성장해온 노동운동의 잠재력이었다. 그리고, 노동운동계의 숙원으로서 95년 건설된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민적 저항의 실질적 지도 역할을 수행했다.

### 설문대상별 10대 뉴스 반응도

- (1) 노동법 날치기에 맞선 총파업투쟁 (90.1%)
- (2)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구속 (77.4%)
- (3)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68.3%)
- (4) 전자주민카드 관계법 국회 통과 (61.9%)
- (5) 북한동포돕기운동 범국민적 확산 (55.6%)
- (6) 경제파란, 봉급생활자 생존권 위기 (40.8%)
- (7) 대법원, 전·노 유죄 확정 (39.4%)
- (8) 영장실질심사제 열 달 만에 개악 (33.0%)
- (9) 헌법재판소, 동성동본 결혼금지 위한 결정 (27.4%)
- (10) 현재 보안관찰법 협정 결정 (27.4%)

### 12·12, 5·18사건 대법원 유죄확정

#### 8개월만에 대통령 특별 사면 면죄부

지난 4월 17일, 대법원은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며 유죄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두환·노태우 등이 학살과 내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억압과 분노의 세월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 그리고 그에 따른 5·18 특별법 제정, 재수사와 기소라는 우여곡절 끝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유죄'라는 사법적 결론은 8개월만에 '사면'이라는 정치적 해결의 뒤통수를 맞게 되었다. 특별사면과 석방이라는 무대에 등장한 전·노는 참으로 당당하게 국민의 집중된 시선을 받아냈다.

전·노 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 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쿠데타 권력에 의해 저질려진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정정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등을 포함한 완전한 과거청산을 추구해왔다. 또한 전·노 사면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뉘우침 없이 당당하게 돌아온 그들을 보며 어떤 국민적 대통합을 이룰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전국을 덥힌 북한동포돕기 물결

#### 정부의 외면과 방해로 얼룩

굶주림에 헹한 북한 어린이의 눈망울이 전국민의 눈시울을 높히게 한 한해였다. 95년과 96년 연이은 대규모 홍수에다 올해의 극심한 가뭄까지 할키고 간 북녘의 굶주림은 실로 처참한 것이었다.

여기에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실천하려는 손길이 모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반쪽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 없는 그 당연한 노력을 실로 분단 50년만에 벌어진 민족 화해 운동이자 통일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이 물결 속에서 정부는 먼발치에 있었고, 적선은 커녕 쪽박을 깐다는 지탄을 면치 못하였다. 즉각적인 북한식량지원 촉구에 미지근한 태도를 취했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관계기지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돕기 문화공연을 경찰력으로 막은 일이나 민간의 모금활동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일이 대표적인 예이다. '황장엽 씨 망명'의 대대적 선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 '베트남 지뢰밭 실종 북한 식량 난민'에 대한 외면은 민간의 동포돕기 노력을 무색케 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 남성혈통주의 벗어난 평등한 결혼

#### 현재, 동성동본 결혼금지 위한 결정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여만 명의 부부가 '혼인 외'의 굴레를 벗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재판은 95년 5월, 구형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부부들이 낸 불복신청과 위헌법률 제정신청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2년여 동안 유림의 격렬한 반발과 우생학적인 문제제기 등 갖가지 주장이 빛발치듯 오갔다.

이 속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재판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혼인의 범위를 남계 혈족에만 한정해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무엇보다도 남녀평등권을 중심으로 논리를 풀어간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동성동본 결혼의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할 과제를 남겼다.

### 절정에 이른 한총련 죽이기

####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탈퇴와 해체 선언

지난해 연세대 사태에 이어 발생한 '프락치 용의자 치사사건'은 당국의 한총련 죽이기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당국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미탈퇴 학생에 대한 전원 구속 방침이 선포됐고, 미구집이 연행과 대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방해하기 위한 검문검색과 원천봉쇄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러한 무리한 연행이 김준배(한총련 투쟁국장) 학생의 죽음을 몰고 왔다.

한총련에 대한 국민 정서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시민·사회단체도 한총련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한총련의 허물을 정부의 위기탈출용으로 이용하며, 폭력적 대응으로 치달아간 정부에 대한 반감은 깊어졌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을 무시하며 미구집이식 한총련 사냥에 나선 불법 사냥꾼일 뿐이다.

### 벼랑으로 내몰린 봉급생활자

#### 퇴직금지급 제한, 실업 양산 위기

97년 한국경제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재벌체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본은 연초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부도사태 행진을 벌였으며, 이어 외환위기·금융위기 상황을 초래한 끝에, 급기야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 와중에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은 계속 벼랑으로 내몰렸

다. 정권초기 2% 수준이던 실업률이 97년 상반기 들어 3% 선까지 증가하는 등 고용불안은 확산됐으며, IMF의 개입과 정리해고제 도입 계획 등으로 인해 실업의 고통은 사회전반을 짓누르게 되었다.

한편, 8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기업의 파산시 퇴직금을 우선변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려 1천 2백만여 봉급생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임금과 더불어 봉급생활자의 주된 생활유지 수단인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떠밀리고 있다.

### 전자주민카드 국회통과

#### 전자감시시대 도래 하는가

지난 11월 17일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 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94년 2월 행정체신위원회의 기획과제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선정한 지 3년만에 근거법률을 마련한 셈인데, 2,735억원이나 드는 사업을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집행했다는 데 비난이 쏟아졌다.

전자주민카드는△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정보유출의 위험성△프라이버시권 침해△소수에 의한 정보독점과 이에 따른 감시통제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전자주민카드 시행 여부는 안개에 싸여 있다. 12월 14일 대통령후보초청 합동토론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집권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나 내년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없이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검열의 칼, 재단에 오른 인권영화제

#### 인권운동가 서준식 구속

지난 해 10월 24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강제하는 음비법 17조와 사실상 심의기구인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탄생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은 중소 영화제들은 검열의 칼날 앞에 영화제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다.

올해만 해도 서울다큐멘터리영상제, 시민영화제가 상영 작품을 대거 취소했고, 독립영화제 인디포럼97은 파행을 겪었다. 또한 퀴어영화제는 무산되었고, 인권영화제는 당국의 상영장소 폐쇄와 관련자 구속에 맞서 항의연장상영에 이르는 기나긴 고난의 행군을 감내해야 했다.

급기야 검찰은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제주 '4·3 양민학

실'을 다른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의 위반 혐의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서준식 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 ■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

#### <인권기여자>

**영장실질심사제 10개월만에 개악**  
피의자 인권보장 큰 폭 후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영장실질심사제)는 첫 시행으로 96년 인권뉴스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었다. 그러나, 10개 월만의 중도하차라는 '처욕'으로 다시 97년 인권뉴스에 오르게 되었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의 정착이라는 평가를 받은 영장실질심사제는 수사초기 경찰의 고문과 가혹수사가 대폭 사라졌다라는 구체적인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이전보다 구속자 수가 25%가 줄어 형사피의자 25%가 불필요한 구속을 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속영장 발부시 담당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의자 심문할 수 있다'는 임의적 실질심사가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다'는 형식심사로 바뀌게 되었다.

#### 현재,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서준식·함세환·방양균 사법처리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보안관찰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신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제한을 거의 가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91년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최초로 구속되었고, 올 11월 또다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씨의 문제제기에 대한 응답이다. 서씨는 △전향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자신의 주거, 가족사항,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서씨 외에도 9월 함세환(출소 비전향 장기수) 씨가 각종 집회에서 자신의 북한송환 문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11월 방양균(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복역출소) 씨가 출소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서준식/ 민가협/ 권영길/  
북녘동포돕기운동단체/ 김대중**

설문에 응한 다수가 인권활동가 서준식 씨를 꼽았다. 또한 지난 9월 2백회를 돌파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이끌어온 민가협 어머니, 1월 총파업투쟁을 이끈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북녘동포돕기운동단체 가운데 13명의 북한난민과 생사를 함께 한 통일강령이모임과 북녘동포시리즈를 기획보도한 <한겨레 신문>이 지목되었다. 또한 역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인권옹호자로 꼽은 점이 눈에 띈다.

#### <인권침해자>

#### 김영삼/ 안기부/ 보수언론/ 현법재판소

매해 인권침해자의 이름을 벗지 못한 김영삼 대통령이 올해에도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총책임자로 최다표를 받았다. 그리고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안들이에 앞장선 '보수언론'이 인권침해자로 지목되었다. 특히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이 많이 거론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목된 것은 1천2백만 봉급자의 비난을 받은 퇴직금 우선변제헌법불합치 결정,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등을 내린 것이 주된 이유이다.

#### 97년을 마감하며

97년 인권10대 뉴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올해 최대 인권뉴스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관련, 전국적 총파업 투쟁 전개'였다. 1월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42명 중 128명이 선택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구속'이 다음으로 많은 표(110표)를 얻었다.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난민이 한국대사관의 외면으로 베트남 지뢰지대에서 실종된 사건(12월),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 교수 구속영장 기각(11월), '청소년 보호 릴미로 만화가 이현세 씨 등 소환 조사·만화인 대량기소(7월)' 등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에 걸었던 기대도 짬깐, 사상 최악의 '국가부도' '실업대란'의 위기 속에 국민들은 타들어가는 가슴을 줄이며 긴 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길고 긴 공안타нец을 지나고 나니, 벼랑 끝에 몰린 생존권 문제가 큰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 오늘날 인권의 현주소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9호 색인**  
**(제915호 - 제1035호)**